

제 9 차

2005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1월 14일(금) 오후3시-7시

장소 : 경실련 2층 강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9 차

2005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1월 14일(금) 오후3시-7시

장소 : 경실련 2층 강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목 차

■ 회순	
■ 이사장 인사말씀	5
I. 2004 사업평가	
1. 2004년 사업평가	10
2. 센터, 위원회별 보고	
1) 한반도평화센터	13
2) 일상평화센터	26
3) 갈등해결센터	32
4) 회원참여센터	51
5) 국제연대위원회	66
6) 한국어성평화연구원	76
7) 사업별 활동일지	86
■ 회계, 사업 감사보고서	102
II. 2005 사업계획(안)	
1. 사업방향	106
2. 센터, 위원회별 계획	
1) 한반도평화센터	111
2) 일상평화센터	113
3) 갈등해결센터	114
4) 회원참여센터	119
5) 한국어성평화연구원	121
6) 국제연대위원회	
7) 정책위원회	
■ 정관 및 운영규정	
정관	124
운영규정	130
■ 원별 사업계획표	132
■ 임원 선출안	133
■ 조직구성표	138
■ 성명서	140

인사말씀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새해 들어서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9 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05년도의 화두는 해방 60주년, 혹은 분단 60주년, 그리고 6.15 공동선언 5주년 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불평화를 금년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평화에도 전환코저 하는 염원을 담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전쟁의 세기라 일컬었던 20세기를 지나 우리는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오히려 9.11사태와 미국의 이라크침략으로 인한 전쟁사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만이 아니라 북한을 향해서도 공격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서 동북아지역에 불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새로 대두된 미국의 일국주의적 재국주의 패권의 결과로 세계는 지금 혼돈과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임마누엘 월러스틴은 “애프터 리베라리즘”이라는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암흑과 혼돈의 시대는 25년에서 50년은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불평화의 요인에 대항하며 암흑에서 출구가 보이는 빛을 만들고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란 대안의 가능성의 추구다’라고 말한 평화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역사적으로 1990년에 민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남과 북의 여성교류를 가능케 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조문파등으로 남과 북이 냉각되어 더 이상 남북여성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실행위원회를 확대하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발족시켜서 남한의 많은 여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염원했던 선배들의 의지가 우리 단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97년 창립이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그러므로 ‘직대하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노력이라는 이 전통을 지키며 두 번

에 걸친 남북여성교류를 성사시켰고 2005년도에도 이 일은 다시 한 번 남한 사회 내 여성들의 연대와 남북간 여성의 연대로 인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개인의 평화심성훈련, 평화교육 프로그램, 이라크 파병반대 등 사회현안문제의 연대운동, 나아가서는 국제평화운동과의 연대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란 '가나다라'에서 '카타파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힘, 권위주의적인 힘, 가부장제적 힘이 힘으로 작용하는 이 세계에서 체제의 변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총칭하는 '여성들'이 평화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더 많은 영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회원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총회 순서

1부 : 여는마당(오후 3:00~4:00)

(사회: 김정수 일상평화센터 소장)

평화여성회 홍보 영상물 감상 "Peace Now..."

"2005년 한반도 평화통일 경제전망을 듣는다"

-- 김근식(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부 : 정기총회(오후 4:00~6:00)

평화명상

인사말씀 ----- 김윤옥 이사장

격려사 ----- 정현택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기선출

성수보고 ----- 사무처장

개회선언 ----- 의장/김숙임 공동대표

회순채택 ----- 의장

전 회의록 승인 ----- 서기

사업감사보고 ----- 감사/이정희

2004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 사무처장/최선희

회계감사보고 ----- 감사/한국업

2004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승인 ----- 회계

임원선출 ----- 공천위원장/홍승희

선출임원인사 ----- 공천위원장/홍승희

2005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사무처장/최선희

2005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회계

모범회원시상 ----- 의장

회의록 받음 ----- 서기

폐회 선언 ----- 의장

3부 : 식사와 덕담나누기(사회: 최선희 사무처장)

2004년도 사업평가

..... ■ 2004년 사업 평가

..... ■ 2004년 사업별 활동일지

I. 2004년 사업평가

1. 사업총평

사업목표 : “반전평화와 한반도평화 조성활동 및 평화문화 확산”

2004년은 이라크전쟁과 파병국면이 지속되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조성이 예견되면서 어려운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데 기여하고, 여성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반전평화와 한반도평화 조성활동 및 평화문화 확산”을 사업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여성평화운동의 담론 형성과 여성주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조직적으로는 인적, 물적 토대 형성 및 정책전문성을 강화하며 대중적으로 사업의 집중과 분산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전평화운동의 기초 및 전략 강화

2004년은 파병반대활동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확산하는 해였다. 1년동안 평화토론회, 파병반대집회, 파병연감동의인 반대활동 등 꾸준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파병반대를 위한 여성국회의원과의 기자회견 및 반전평화여성행동과의 공동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여성단체의 평화운동 참여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조직역량에 비추어 볼 때 반전평화운동을 선도적이고 책임있게 주도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을 확대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반전평화운동의 정책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주의적 대응을 심화시켜야 한다. 사무처 및 소수활동가 중심의 현안대응을 넘어 회원대중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

북핵위기와 북미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2004년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북핵위기 및 6자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였으나 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해 북핵위기 대응 및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활동은 소극적 활동에 머물렀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사안에 대한 입장 및 실천대응논의를 통한 여성평화활동을 확보해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여성교류행사의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의견교환을 나눔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였고, 냉전체제 극복과 평화조성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에도 참여하였다.

3) 남북화해협력의 대안적 모색과 풀낸 형성 및 남북여성교류의 지속화

한반도 평화형성과 통일 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풀낸과 대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남북여성교류를 재개시키기 위하여 남북여성실무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남북관계의 정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여성교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정부당국자와의 면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의 여성에게 개방과 성인지적 남북관련법의 국회 내 입법 시도 활동은 남한 내 통일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기반하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여성본부'를 결성하여 남북의 상설협의체제를 형성하였으며 '통천듬기여성행동'을 통한 대북지원활동으로 남북화해협력활동에 기여하였다.

4)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갈등해결교육과 인식의 평화교육 및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본격화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인프라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였다. 갈등해결센터와 일상평화센터의 안정적 조직운영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내적 역량이 강화되는 조직적 성과가 큰 해였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청소년교육팀과 평화심성팀의 활약이 돋보였던 해였으며 교육과 문화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철학과 가치를 확대시켜가며 평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5) 국제연대사업의 활성화

2004년은 GPPAC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평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레이징+10 세계여성회의, 군사주의반대 여성평화네트워크(SAFE) 국제대회, 일본 평화헌법 수호대회, 제2한민족여성독립네트워크 심포지움 참가 및 통천듬기여성행동 활동의 국제여론화 등 국제연대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연대 활동내용과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실무자의 교체 또는 부재로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내평화활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

화하여 국내평화사안을 국제화하는 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6) 조직체계개편에 이은 조직 안정화 및 의사소통구조의 활성화

센터별 조직체제 개편 2년을 맞으면서 센터별 특성이 점차 전문화되고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센터역량의 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센터의 자기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켜가고, 주체의 의지와 역량이 어떤가여 따라 조직의 발전정도가 달라 지므로 센터의 자기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비중에 비해 논의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운영위를 비롯한 조직구성원의 논의력 강화와 회원 및 선임회원 교육을 정리화하여 회원 확대 및 중간지도력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센터별 운영원리와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정형을 만들어나가고, 센터사업과 전체사업과의 통일성을 위한 사업집행의 집중과 분산도 매우 필요하다.

7) 사무실 공간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회원참여공간과 실무집행의 원활한 업무 보장, 안정적 논의를 위한 회의공간 마련을 위해 사무실 공간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이의 성과로 사무실 공간 마련 기금이 적립되어가고 있고, 구성원들의 논의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은 부족하므로 현실화된 사무실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부족으로 실무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실무자의 정책실무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CMS확대와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와 상근실무력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2. 센터별 사업평가

2-1. 한반도평화센터

1. 사업목표

평화적, 여성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기적 전망 아래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 제시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통일, 국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평화지도역 형성을 위한 주체역량 확대에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

1) 국방과제팀(팀장 : 안경애)

○ 팀원 : 김숙임, 어혜숙, 김현희, 김수길, 강정옥, 조경훈, 전은주

○ 사업목표

국방감독관 제도의 입법화를 시도하면서 대안적인 국방감시제도를 연구한다.

- 대국회 로비활동, 여론활동, 전문인프라 구축 등

군복역 근절, 평화군축을 위한 국방부, 국방위 의정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방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제를 개발한다.

국방관련 전문인력 확보하여 인적인프라를 구축한다.

2) 통일과제팀(팀장 : 윤덕희 / 삼반기)

○ 팀원 : 강남식, 김귀옥, 노귀남, 박원선, 송소희, 우문숙, 한옥자, 전은주

○ 사업목표

남북화해협력학을 위한 대안적 모색과 결연을 형성한다.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의제를 개발하고 제시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를 지속화하고 여성평화지도역역을 형성한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 및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사업을 추진한다.

3. 주요사업

(1)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1) 이라크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및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04년 5월 24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반전평화여성행동(40여개 단체 참가)

참석 : 김숙임, 최선희, 권은주, 김현희, 안은주 외

순서

사회 :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1) 인사말 : 정현백(여성연합 상임대표), 손봉숙, 심상정, 이은영 당선자

2)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각 당 여성의원 발언 : 여성의원 전원

3) 파병 철폐를 촉구하는 여성제발언 :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활동가), 김
은심, 황금주 정대협 할머니

4) 평화의 시 낭독 : 손 세실리아(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5) “여성의 힘으로, 전쟁없는 세상을” 여성단체 평화퍼포먼스 : 여성단체 참석

자 전원

6)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장항숙, 손봉숙, 이영은 당선자, 최상림(한국여성노
동자회의회의 부대표)

7) 평화다짐 서명 :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참석자 전원

8) 질의응답

참석자

1)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필효는 일점상 불참한 명단) : 총 15명

열린우리당 - (강혜숙) (김선미) (김희선) (윤원호) 이경숙 이은영 유승희 정항
숙 홍미영

민주노동당 -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 - 손봉숙 (이승희)

2) 여성단체 : 김숙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장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상림(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
장), 이미혜(통일연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여성회 회장), 이상영(여성환
정연대 으뜸지기), 이기원(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수원여성회 회장), 임
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활동가), 이호순(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
은경(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박인숙(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손 세실리아
(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황금주, 김은심 정대협 할머니 등 40여
명

(2) 주한미군제체처와 한미동맹 위크업(여성부 프로젝트로 수행)

일시, 장소 : 6월 18일 오후4시, 여성연구소

참석 : 정경란, 김정수, 안정애, 김숙임, 박수선, 최선희, 김현희 등
순서 :

발제 : 주한미군재배치를 둘러싼 정세공유(정경란 국제연대위원장)

전제토론 : 평화여성회 이후 활동방향 논의

(3) 故 김선일씨 추모 및 파병철폐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 반전평화여성행동(40여개 단체 참가)

순서 :

사회 : 최선희 평화여성회 사무처장

1) 추모묵념

2) 인사말 :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3) 각 단체 추모 및 파병철폐 촉구 발언 : 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 최성미 여성연합 조직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신 선 여성협 대표

5) 향후 계획 발표

6) 파병철폐 퍼포먼스 및 전제분향 : 파병철폐 결의 손모장 띄우기

(4) 전문가포럼(여성부 프로젝트로 수행)

① 1차 : 여성이 본 양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일시, 장소 : 2004년 7월 1일(목) 오후3시~6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참석 : 김숙임 외 35명 내외

내용 :

사 회 : 김정수(평화여성회 일상평화센터 소장)

발제 1 : 한미관계의 변화와 정세전망 -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발제 2 :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3 : 여성과 안보 - 심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토론 1 : 정경란(평화여성회 국제연대위원장)

토론 2 : 김민정(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제토론 : 참석자 전원

② 2차 전문가포럼 - 전쟁 속의 여성들, 전쟁의 기억을 살리는 여성들(여성부 프로젝트로 수행)

일시, 장소 : 2004년 11월 2일(화) 오후1시30분~4시30분,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참석 : 김을옥 외 45명 내외

진행 :

1:30-3:00 (1:20분) 전반부: 일어났던 과거,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화하는 역사, 사회
회적 기제에 대하여 (여성의 경험 가시화 / 전쟁의 기억과 여성)

3:00-3:10 (10분) 휴식

3:10-4:30 (1:20분) 후반부: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 (여성의 눈으로 본 전쟁의 의미
/ 운동과제)

토론자 :

사회 : 김엘리(평화여성회 정책위원)

토론(베트남전쟁과 여성) : 김현아(나와우리 운영위원)

토론(한국전쟁과 여성) : 이일하(역사학연구소 연구원)

토론(이라크전쟁과 여성) :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평화활동가)

전체토론 : 참석한 모든 사람들

시청자 자료

<한국전쟁(파워포인트)> <이라크전쟁(VHS영상)> <베트남전쟁(VHS영상)>

(5) 세계평화의날 기념 영상상영 -평화를 꽃피우는 분쟁지역의 여성들(원제: Women on the Frontlines)

일시, 장소 : 2004년 9월 21일(화) 오후4시-7시, 잠충동 분도빌딩 5층

내용 : 아프간, 부룬디, 보스니아, 아르헨티나, 미국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여성평화
운동 다룬

제작 : PEACE by PEACE (www.peacexpeace.org)

방식 : 영상물 감상(86분)과 이야기 나눔, 영상물은 영문자막으로 상영, 번역자료는
자료집으로 제출

번역 : 국제연대 간사

사회 : 전은주 정책국장

참석 : 최안진경 외 25명 내외

후속작업 : 영상물 다여를 통한 확산

(6)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및 교류협력법 개정활동

1) 활동내용

1차 : 8/20 내부토론 및 자문(전문가포함-학자/ 김선옥,윤덕희,박현선, 법률가/이정
희,김미경)

2차 : 9/7 시민단체, 국회의원과의 토론회, 토론회로 참가

3차 : 9월중순 여성국회의원에게 의견서 전달(이경숙, 김현미, 유승희, 손봉숙의원

등)

시민단체에 의견서 전달(민화협, 우리민족, 참여연대, 평화포럼, 우리겨레 등)

4차 : 9월 말 여성의원과의 간담회, 단체 의견서 취합 상황 파악

5차 : 10월 국회 회의 과정 모니터, 로비활동 등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가

일시, 장소 :

(7)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 여성외계 개발활동

1) 전문가 간담회

일시, 장소 : 2004년 8월 20일(금) 오후 2시, 한국여성연구소

참석 : 김숙임, 정현백(여성연합), 윤덕희(명지대), 김선옥(이화여대), 박현선(고려대), 최선희, 최문성미(여성연합), 전은주, 안정희(민화협)

간담회 내용

- 2004 남북여성통일행사의 전반적 진행상황 보고
- 2004 남북여성통일행사 추진본부 조직구성 및 행사전반에 대한 소개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성외계 및 법제도 관련 논의 등

2) 여성부와의 간담회

일시, 장소 : 2004년 9월 2일(목) 오전 10시30분, 여성부 소회의실

참석 : 김숙임, 정현백(여성연합), 손미희(통일연대여성위), 유성희(대한YWCA), 최선희(평화여성회), 최문성미(여성연합), 정봉협(여성부권익증진국), 양종수(여성무협력지원과), 김은형(여성부 협력지원과)

내용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의 시 상정될 여성외계 및 아젠다 개발을 위한 논의 및 의견 제시

(8) 평화영상물 국내외용 시디 제작(여성부 프로젝트로 수행)

1) 기획회의 : 2004. 9. 14. 오후6시, 회의실

참석 : 김연리, 홍승희, 최선희, 전은주, 김환태(다큐이야기 감독)

2) 영상물 제작 내용

제작기간 및 형태 : 12월 완료, 분량 : 23분,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홍보용 시디 제작

제작처 : 독립영상집단 '다큐이야기'

중심기조 및 내용 : 여성평화운동이 무엇인가? 여성평화운동, 어떻게 만들어가는가(피해자로서의 여성 +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식) 흐름은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을 펼쳐가기 위한 평화여성회의 고민과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전개, 여성평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민, 과제, 전망 등을 함께 모색해가는 과정을 그림.

(9) 연대사업

1) 반전평화여성행동 및 과병반대국민행동

- 이라크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및 여성단체 공동기자 회견(위의 내용과 동일)
- 기타과병반대활동연대(주요행사)

2) 통천둥기여성행동 - “북녘통천에 새 희망을” 범국민캠페인

① 통천둥기 여성행동 발대식 및 모금캠페인

일시, 장소 : 4월 29일(목) 오후 12시- 2시 / 종로 서울 YMCA앞

순서

인사말 /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활동계획 공유

편지글 낭독 1 : 어린이 “북녘친구야, 힘내”

편지글 낭독 2 : 여성 ‘북녘여성들께 자매애를 보내며’

통천둥기 호소문 낭독

부대행사 : 열서쓰기, 모금캠페인 등

3) 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

①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단체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졸업식 퍼포먼스”

일시, 장소 : 2004년 9월 23일(목) 오전 11시-12시30분, 명동성당 입구 및 우리은행 부근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정화여성회 외 35개 단체)

순서 :

사회 - 최선희 평화여성회 사무처장

- 56학년 국가보안법 졸업식 개회식(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 인사말 : 정현택 여성연합 상임대표,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 연대사 : 이수호 민주노동당위원장

- 내빈 소개(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조직내용 설명)

- 졸업장 수여(국보법 중에도 특별히 악법 조항을 부각시키는 방식)

* 졸업장 수여자 : 17대 국회(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졸업자 :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구성

(6조)잠입탈출

(7조)이적표현물소지

(7조)참양고무

(8조)회합통신

(10조)봉고지

- ‘국보법’을 보내며(기자회견문 낭독) -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졸업가 부르기(국가보안법 철폐가) 및 졸업사진 찍기
- 가장행렬 - 국가보안법 악법조항피켓과 국회모형을 들고 가장행렬
-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 서명운동 및 시민과 축적사진 찍기 : 우리은행 앞
(우리은행 앞까지 가장행렬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일점 장소에서 시민들과
국보법 폐지선전물과 국회모형물 배경으로 축적 사진 찍기)

㉔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의 날 “하루농성과 집회”

일시, 장소 : 11월 3일(수), 오전 10시-오후 7시, 국회 앞
프로그램

사회: 최성미 여성연합 조직국장

- 인사말 :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 “세상에 어떤 일이” 국보법 황당,업기퍼레이드
(괴해사태, 악법조항 패러디/황당개그, 개그콘서트 등의 형식을 빌어 단채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실천단 : 국가보안법 절단 차력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국가보안법 폐지 당근 등
평화여성회 : 국가보안법 폐지 랩 부르기
여성연합 사무처 : 국가보안법 O/X퀴즈
- 국가보안법 피해여성 발언 : 김혜정(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부인)
- 지역단체 국보법폐지 발언 : 박영미(부산여연 대표, 부산여성회 회장)
-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선언문 발표 :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상희 여성민
우회 상임대표
- 이후 농성(오후 2시-6시) 결합 (사회: 강수경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문화집회 결합(오후6시 - 7시)

㉕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하루소식지 발송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제작가사 : 화인 봄/조이현임 (부산여성회 활동가)

형식 : 엽권 형식으로 매일 오전 중 발송 (현재 25호까지 발송)

내용 : 여성행동 활동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동향 / 주요 전체 일정

발송처 : 각 단체 회원, 언론사, 여성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발송 중

4)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

①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일시, 장소 : 6월 14일~17일(3박 4일), 인천광역시(송도 비치호텔,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규모 : 북측 100명, 해외 35명, 남측대표단 1,200명

참가 : 김숙임(위원장), 김순영, 최선희, 정경란, 전은주, 김현희, 안은주

일정 :

	일시	행사명	장소	참가명단
14일	18:00	비교발급	인원시절대회와실	환영단원참가자
	19:30~21:30	환영단원	인원시절 출	환영단원참가자
15일	08:00	비교발급	인천 문학경기장 북문 앞	전체 대표단
	09:30~10:00	통일대행진	프러자광장	전체 대표단
	10:00~11:30	우리민족대회(본행사)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체 대표단
	12:00~14:00	남북동지식사	문학경기장 근역	전체 대표단
	14:30~16:00	채록야담경기	문학경기장 / 보조경기장	전체 대표단
	17:00~19:00	저녁식사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남측 대표단 전체
	20:00~22:00	남북합동예술공연	SK야구장	전체 대표단
16일	8:40분~10:00	마리온대회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체 대표단
	11:00~11:30	폐막식	문학경기장 / 보조경기장	전체 대표단
	14:00~19:00	관람구분행사	광화도	북측, 해외대표단
	20:00~22:00	환영단원	문학경기장 인접선캄파	환영단원 참가자
17일	10:00	북측출발	인천공항	

5)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추진본부

①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실무회담

<1차> 남북여성실무회담(3월9일- 3월13일, 평양)

참석 : 남측 김숙임, 이미혜, 북측 리동희, 박영희

회담내용 : 여성조직의 독자적 연대 체 구축 제기, 2004남북여성평화행진단 평양 개최 제의 등

<2차> 남북여성실무회담(5월 4~6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참석 : 남측 김숙임, 이미혜, 북측 박영희

회담 내용 : 독자적여성연대체 구성에 대한 입장전달 및 남북여성행사 시기 및 주제 등 논의

<6.15 민족공동행사 및 3차 남북여성실무회담>(6월 14~17일, 인천 송도비치호텔 만찬장소, 강화도 등)

참석 : 남측 김숙임, 손미희, 이미혜, 북측 박영희, 서옥선, 지희룡, 배석 김혜련

회담 내용 :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합의, 시기, 규모, 행사내용, 토론회 내용 등 논의

<4차> 남북여성실무회담 (7월 24~26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및 삼일포)

참석 : 남측 김숙임, 손미희, 북측 박영희

회담내용 : 7.8 조문 사태, 기획달북 문제 등으로 인한 정세의 경색으로 인한 유감, 행사 유보 문제 논의

<8.15 민족통일대회>

남북경색의 이유로 남북공동행사는 개최되지 못하고, 북측과 통일연대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리고 8.15 기념행사는 북측과 남측이 각 각 개최하고, 남측은 민화협에서는 광복 59주년 평화음악회를, 통일연대는 815평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여성제는 북측에 여성교류를 지속화시켜 남북관계경색 완화를 위해 여성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고, 북측에서도 객관적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여성들이 노력하자는 북측의 제안도 력스로 왔다.

(2)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남측준비위 회의

<전략회의> (4월 14일 오후 2~4시, 여성평화회의 집1층 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 김숙임, 이현숙, 정현백, 조영숙, 최문성미, 최선희, 전은주

내용 : 독자적 여성연대체 구성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남북여성행사 관련 프로그램,

항공권, 참가인원, 북한여성 지원문제 등 논의

<1차> 준비회의(4월 21일 낮12시, 인사동 이모집)

참석 : 김숙임, 박수현, 이명신, 이정미, 이미혜, 안정희, 최문성미

내용 : 남북여성통일행사의 방향 및 프로그램(안), 독자적 여성연대체 구성 제안, 이용항공권, 참가자 수, 북한여성 지원문제 등 논의

<2차> 준비회의(6월 7일(월) 오후12시, 어머니의 집)

참석 : 김숙임, 손미희, 이미혜, 최선희, 전은주

내용 : '2004 남북여성통일대회'로 합의, 주제와 내용, 시기, 규모 등 논의

<3차> 준비회의(6월 29일(화) 12시, 장충동 한정식당 '어머니의 뜰')

참석 : 김숙임, 박수현, 손미희, 이미혜, 최문성미, 전은주

내용 : 남북여성대표단 실무회담 결과보고 및 여성행사 재정확보방안, 조직체제 및 회의구조 논의

<4차> 준비회의(7월 30일(월) 오후 4시, 광화문 지오리코)

참석 : 김숙임, 박수현, 손미희, 정현백, 최문성미, 안정희

내용 : 토론회 발표자, 행사·지정·조직·홍보 추진일정 점검 및 역할분담 논의,
향후 추진일정 논의

<5차> 준비회의(2004년 8월 9일(월) 오후 1시, 여성평화의집 한국여성연구소)

참석 : 김숙임, 박수현, 손미희, 정현백, 최문성미, 전은주, 안정희

내용 : 8·15 행사에 대한 정세 토론, 8·15 행사여부 진척상황 및 추진본부 상황
공유, 여성행사 향후 대책 논의 및 북측에 보낼 팩스 서신 내용 검토

<통일부 장관, 여성부 장관 면담>

(7월 30일(금) 오후 10시30분, 통일부 장관실, 여성부 장관실)

참석 : 김숙임, 정현백, 손미희, 최선희, 최문성미,

면담내용 : 2004남북여성통일행사에 대한 전반적 상황 안내 및 남북여성교류사업
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 등

③ 남북여성교류 기금 확보를 위한 SKT 연구사업 수행

지원금 : 3000만원

지원경로 : 한국여성재단

수행내용 : 남북여성교류 지속을 위한 NGO와 기업의 역할(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
과정 연구)

연구책임자 : 김숙임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위원장,

연구원 : 전은주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위원

6)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 2004여성통일학교 및 통일교유영상물 제작

일시, 장소 : 2004년 10월 5일(화) 오전10시 ~ 오후7시, 통일교육원 소3강의실

주최 : 통일교육협의회

주관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간사단체 : 평화여성회)

목표 : 통일교육을 통한 여성통일지도력 형성과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
여 통일교육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각 여성단체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석 : 30명 내외

프로그램 :

사회 : 이필숙 세계평화연합 이사

9:50 ~ 10:00 등록

- 10:00 ~ 10:10 대회사(시낭송) : 고정명 회장
- 10:10 ~ 10:20 참가자 소개
- 10:20 ~ 12:00 1강. 북한영화 상영 및 토론 : 이기원 수원여성회 회장
- 12:00 ~ 12:50 점심식사
- 12:50 ~ 1:50 2강. 북한노래, 달 배우기 : 부산여성회 조이현임 부장
- 1:50 ~ 3:10 3강. 통일교육과 참여학습기법 : 김희은 여성분과위원장
-찬반토론, 모서리제일, 미래체험학습, 벽허물기 등
- 3:10 ~ 4:40 4강. 북한음식으로 알아보는 북한여성들의 삶 : 황영선(달북자)
- 4:30 ~ 5:30 5강. 폐재를 통한 통일교육 : 유병문 민족21 기자
- 5:30 ~ 7:00 6강.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토론 : 사회-이필숙 이사, 발재-전숙희
원장
- 7:00 ~ 저녁식사 및 평가
- 통일교육매뉴얼 영상물 제작
- 주요상영내용(분량 : 30분)
- 여성통일학교 진행(60%)
- 분과위원회 회원단체 프로그램(20%) - 사진 또는 영상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및 활동, 통일교육프로그램 소개 (20%)
- 제작 : 독립영상제작집단 '다큐이야기'

7)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

- 분단, 평화, 여성 '여성의 눈으로 본 통일' 토론회
- 일시, 장소 : 2004년 11월 5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충동 성씨네덕도회 분도
빌딩 5층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 후원 : 통일교육협의회
- 참석 : 김숙임, 전은주, 장정화, 송소희, 김현희, 김영구 외
- 프로그램
- 사회 : 김숙임(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장/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1) 주제발표: '성인지적 통일운동과 여성주의적인 평화운동'(정현태 여성연합 상임대표)
- 2) 지정토론 :
홍경미(울산여성회 사무처장) 이기원(수원여성회 대표) 전은주(평화여성회 정책국장)
- 3) 나누는 시간 : 발제자와 토론자 상호토론
- 4) 종합토론 : 참가자 참여 토론
- 5) 이후 본회 주최 '평화원탁포럼' 참가

3. 총평

한반도 센터는 평화적, 여성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기적 전망 아래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 제시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통일, 국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평화 지도력 형성을 위한 주체 역량 확대에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업목표에 따라 1)전문가포럼과 2)여성평화전문위원위촉, 3)한반도평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사업집행은 전문가포럼과 홍보자료는 원활히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한반도센터 내 역량 구축을 위한 전문위원 위촉 및 인력확충은 미비하였다.

1) 국방과제팀 평가

국방과제팀이 올해 주요하게 사업으로 설정했던 과제는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와 국방정책 과제 개발에 있었다. 올해 국방과제팀 사업은 주요하게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에 중심으로 두고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팀 내부 준비정도와 시민사회영역의 연대형성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환경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입법 등의 정치현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사업수행을 잠정 유보하면서 올해는 연구작업과 기반다지기에 초점을 두어 활동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국방과제팀의 사업방향과 내용 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과 고민이 도출되었는데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방과제팀 사업에 대한 성격규명의 필요성 제기

국방감독관 관련 활동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업내용에 대한 성격규명의 논의 필요성과 국방정책이 아닌 평화군축 차원의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방감독관 도입 사업은 피해당사자의 주체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폭넓은 평화군축의 관점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② 평화군축의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의 필요성

현재 전개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한반도 핵위기, 한미관제이해, 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등 평화사안에 대한 현안을 여성적 관점에서 재정리해내는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반전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구축 등에 대하여 여성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활동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2) 통일과제팀 평가

통일과제팀은 남북화해협력력을 위한 대안적 모색과 통일의제 개발, 남북여성교류 지속, 여성주의 통일정책, 의제 개발, 북동포돕기 사업 등이 목표였는데 사업주체의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인프라형성이 부족한 데 비하여 여러가지 성과를 도출했다.

남북여성통일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 및 남측준비모임,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에서의 여성의제 개발, 남북관련법 개정운동, 남북여성교류 지속을 위한 역할 연구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제팀의 내적 주체 역량과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일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① 여성주의적 통일정책 개발 과정의 시도

그동안 남북여성통일행사 실무회담 경험의 분석을 통해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에서 논의될 여성의제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성인지적 통일정책, 여성의제 개발을 위한 여성부 간담회 등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법 제개정과정에서 성인지적 통일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② 2004남북여성통일행사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통일행사가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5차례에 걸친 남북실무회담과 6차례 남측준비회의, 간담회 등의 지속적인 활동경험은 이후 남북여성교류를 지속시키고, 남북간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여성통일운동의 필요성과 분단으로 인한 피해, 여성친화적인 여성통일운동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여 대안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③ 통일사업방식 및 내용논의의 필요성

대중통일운동단체로서의 성격과 정책전문중심의 활동가단체로서의 성격 사이에서 통일운동의 전개방식에 대한 합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④ 사업책임자의 불안정한 여건(하반기부터는 팀장직을 사임함)과 구성원의 부족으로 논의력이 부족하며 실행력있는 활동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⑤ 통천돕기활동을 통하여 남북화해협력에 기여

갑작스런 북의 통천사고에 긴급히 대응하여 북한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통천소학교

건립과정에 평화여성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전개된 북한동포돕기 활동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⑥ 반전평화여성행동을 비롯한 봉천동기, 국보계지 등 사안에 따른 여성행동 활동은 평화여성회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여성평화행동을 조직하였고, 여성평화운동에 여성단체의 참여를 증진시켰다.

⑦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현안대응의 부족

여성평화운동에 특성에 맞게 당면 현안을 분석하고, 내년 분단60년을 맞이하는 정세전망 속에서 한반도 평화 시안에 대한 기조와 방향, 내용 설정을 미리 구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2-2. 일상평화센터 사업평가

소장: 김정수

1. 사업 방향

여성평화운동의 철학과 가치인 여성주의 평화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전쟁과 군사주의가 낳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평화주의자의 삶과 가치, 운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평화운동의 현장에서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한다. 또한 평화운동이 일반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게 다양한 평화교육과 평화심성훈련을 실시한다.

2. 사업 목표

<평화교육문화팀>

- (1) 각 세대에 맞는 여성주의 평화지도력 훈련을 실시한다.
- (2) 양성평등의 관점 하에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한다.
- (3)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평화심성팀>

- (1)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담론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평화주의자의 삶과 가치, 운동

등의 연구를 실시한다.

(2)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한다.

(3)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3. 사업 총정

2004년 일상의 평화센터 사업은 '평화심성팀'의 월례모임과 제3차 평화심성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센터의 목표인 평화주의의 철학과 가치, 그 내용을 월례모임과 평화심성훈련의 주제로 삼아 구체화하여 여성평화운동과 전체 평화운동에서의 평화교육적 주제를 개발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한편 실무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여성평화아카데미 등 여성평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2005년에는 보다 안정된 기반 아래서 여성주의와 비폭력평화주의에 기초한 평화심성훈련과 여성평화교육의 주제들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과제를 가진다.

4. 사업 내용

1) 평화심성팀 월례모임

담임: 문명녀(팀장), 이낙호, 황순영, 박애경, 김숙임, 김현숙, 김현진, 장정화, 김혜진, 김현희, 김정수 (11명)

- 일시: 매월 3주 월요일 저녁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및 여성평화의집 강당 등
- 내용

1월: 2004년 월례모임 개최수립

2월 오대양씨(양심적병역거부자) 초청토론회

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

3월 캐서린 헌(비폭력의사소통전문가) 초청워크샵

주제: 비폭력의사소통과 평화운동

4월 평화명상 및 삶 나누기

5월 표대문(한국아나뎃티스트센터 대표) 초청토론회

주제: 아나뎃티즘과 평화사상

6월 평화명상 및 삶 나누기

6월 평화명상 및 삶 나누기

7월 하승제회수립 및 평화심성훈련 준비회의

8월 삶 나누기 및 평화심성훈련 준비회의

8월 하승 "생명 여성주의자가 되어 간다는 것과 평화심성 형성"

평화심성훈련 준비회의

9월 학습 (책: 사라 리덕의 <모성적 사유> 와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10월 제3차 평화심성훈련 참석으로 월례모임 대치

11월 평화심성훈련 평가모임

12월 2004 평화심성팀 평가모임 및 2005년 계획수립

○ 월례모임 및 조직평가

가. 월례모임

① 평화심성팀의 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를 통해 진행하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월례모임이 지속화됨으로써 평화심성의 주제들을 선정, 논의하고 이를 평화심성훈련에서 심화시킬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이를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면 좋겠다.

② 상반기에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름 이후 자체적인 학습을 통해 팀원들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평화인식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습과 프로그램으로 계획했던 것 가운데 수행하지 못한 것(여성주의 평화심성과 감수성, 비폭력 비디오 시청 등)은 내년에 수행하도록 한다.

③ 월례모임은 향후 평화심성과 평화감수성을 훈련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실성적 차원에서 내면화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통역을 만들어내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를 가진다.

나. 조직평가

① 평화심성팀 팀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참여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팀원들 내부의 다이나믹즘이나 친밀성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②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가진 팀원들이 일상센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평화여성회 전체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 열린 회원참여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라크파병반대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력 결집도를 높이고 있다. (문명나: 평화명상, 김현진: 평화부채만들기, 장정화: 소식지 편집팀과 '통일교육협의회' 정책위원, 이나호: 평화의 음반들기 등)

③ 평화심성팀은 문화적 감수성과 재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재능과 관심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2) 제3차 평화심성훈련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 주제: 정의로운 평화의 길: 우리는 어떻게 폭력과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을까?
- 후원: 한국마사회
- 평화심성훈련 프로젝트관련 회의
6월 30일/ 7월 9일 프로그램 조정회의/ 8월 3일 9일/ 9월 20일/ 10월 21일
- 자료집 발행: 200부(2004년 12월 말)

(1) 강좌

- 일시: 2004년 10월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 장소: 분도회관 강당
 - 참석인원: 각 25-35명 내외
 - 내용
- ① 인간의 마음: “우리는 왜 폭력을 즐기는가?”(10월 5일)
강사: 이재영(한국하나빛디스센터 평화담당강사)
사화: 김정수(일상평화센터 소장)
 - ②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고통에 연민할 것인가?(10월 12일)
강사: 김정수(일상평화센터 소장)
사화: 장정화(평화심성팀 회원)
 - ③ 우리는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것인가?(10월 19일)
강사: 김영수(경상대 연구교수)
사화: 김현진(평화심성팀 회원)
 - ④ 비폭력 평화주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10월 26일)
강사: 박성준(성공회대 겸임교수, 비폭력평화물결)
사화: 김혜진(평화심성팀 회원)
- ◆ 각 강좌마다 평화의 물결기와 마치는 명상이 문명녀 평화심성팀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짐

(2) 평화원탁포럼

- 일시: 11월 6일(토) 오전 9시~저녁 8시
 - 장소: 강충동 분도회관 5층 강당
 - 참석인원: 40명
 - 내용(사화: 김정수 일상평화센터 소장)
- ◆ 평화영상(진행: 문명녀 팀장)

① 주제강연: 평화주의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강사: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② 패널토론

- 평화운동의 지향점

김엘리(평화여성회 정책위원), 이태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평화운동가의 삶과 운동방식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집회문화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활동가)

③ 전체토론

○ 제3차 평화심성훈련 평가

가. 성과

① 주제와 내용:

강과: 폭력, 고통, 화해, 용서, 비폭력평화주의 등 평화주의의 내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하며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평화인식과 평화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평화행동/평화실현을 대개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를 통해 평화교육의 주제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평화원탁토론: 비폭력주의, 평화주의의 담론을 심화하고 평화활동가들의 운동과 삶을 성찰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평화운동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바람직한 평화운동의 모습을 그려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②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평화의 몸풀기'와 본프로그램(강과나 워크샵, 토론회) '마치는 명상' 등으로 심성훈련의 완결성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③ 평화심성터전 전체가 기획회의부터 참여하여 행사당일 사회와 실무까지 함께 함으로써 평화여성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평화심성터전으로서의 정체감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④ 평화단체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평화여성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

⑤ 장소가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을 하기에 적절하게 안정감을 주었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참석자들이 참석하기에도 편리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나. 보완할 점

① 강과는 다양한 주제, 저서적 기획으로 인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서

의 심성훈련의 차원까지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다. 한편 원탁포럼의 폐널도본은 평화심성훈련이라기 보다는 평화운동 전반에 방점이 있어서 심성법이 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② 평화심성훈련의 본래 계획은 평화심성훈련의 전문화와 확산을 위한 강사뱅크 구축이 있었으나, 훈련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강사뱅크 훈련은 평화심성훈련을 좀 더 진행하면서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에 의해 심성훈련프로그램 내용이 조정되었다.

③ 평화심성훈련의 문화적 혹은 예술적 차원을 더 개발함으로써 다른 중심성을 보완하면 좋겠다. 특별히 평화명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음악이나 춤발레화, 명상 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상과 강의나 토론의 균형을 조화있게 만들면 좋겠다.

3) “고 김선일씨 죽음과 평화교육의 과제 토론회”

○ 주제: 분노와 좌절을 넘어 생명과 평화로

○ 일시: 2004년 7월 8일(목) 오후3-6시

○ 장소: 민주화기념사업회 배움터

○ 참석: 30여명

○ 사회: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내용:

발제 1: 고 김선일씨 죽음이 파멸반대운동에 던지는 의미와 평화교육의 과제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발제 2: 고 김선일씨 죽음과 평화감수성 형성을 위한 윤리적 성찰

(김정수 일상의평화센터 소장)

토론: 배성호(당산초등학교 교사), 박인옥(참교육실천학부모회 사무처장)

참가자 자유토론 및 통합토론

○ 개요 및 평가

본 프로그램은 이라크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랍살해당한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남겨진 분노와 좌절, 무력감, 그리고 응징과 보복의 논리를 어떻게 고통과 연대하고 생명과 평화의 희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평화운동은 폭력에 저항하며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는 새로운 통찰을 던져준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분노를 적대감의 재생산이나 보복과 응징의 논리가 아닌 국적을 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로 조직해야 한다는 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2-3. 갈등해결센터

총평

2003년은 갈등해결팀에서 센터로 전환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센터의 조직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모색의 시기였다면 2004년은 본격적인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2003년 시작되었던 강사트레이닝의 수료자들이 청소년교육팀을 구성하여 그와 관련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 단위로 자기자리를 잡았으며, 전체 회원의 확대와 함께 활동적 기반을 갖기 위한 장으로서 월례회를 정착시켰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이 시작이었던 2003년에 비해서 청소년교육과 강사트레이닝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 강화되었고, 사회갈등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은 전북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욱 심화해진 공공분쟁과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전북지역에 갈등해결 관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성과가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센터에서 기획하여 자체 프로그램화한 내용 외에 그간의 활동에 힘입어 평화적 갈등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외부 강의요청이나 외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획, 사회갈등 조정예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갈등해결센터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육을 기초로 다양한 대상, 계층으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한다는 2004년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전한 과제로 남는 것은 평화여성회 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반전평화활동과 사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대상 갈등해결교육에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공존의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과의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목, 반전평화활동에서 평화적 갈등해결의 위치 및 의미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결과가 평화여성회의 성과로 전체화하는 방안 및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적 성과는 순전히 비상근 활동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지만 더욱 비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근실무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하나의 과제로 꼽을 수 있겠다.

1. 2004년 사업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2. 조직

- 1) 운영위원회/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당연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조영희(청소년교육팀), 본부 사무처장 최선희)

일반 운영위원(김학목, 박인혜, 이재영, 여혜숙, 장윤경, 정경란, 최안진경, 최정현진(서기))

- 2) 연구원 모임/갈등해결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강사트레이닝 등 사업 진행

김학목, 이재영, 정경란, 장윤경, 최정현진

- 3) 청소년교육팀/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조영희(팀장), 박인혜, 여혜숙, 최안진경, 최정현진, 이현주, 송소희, 박재근, 김보정

- 4) 월례회/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3. 회의 및 모임

1) 월례회

(1) 1차: 7월 19일 오후 7시(여성연구소)

-내용: 비폭력 대화(여혜숙 진행)

-참석: 여혜숙, 박재근, 강준근, 최규정, 김보정, 임재련, 이현주, 서은아, 송소희, 박수선

(2) 2차: 8월 28일(토) 오후 2시(청산교육장)

-내용: 비폭력 대화 2(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 진행)

-참석: 김보정, 김학목, 박수선, 박재근, 강준근, 신윤순, 신은희, 이재영, 임재련, 조영희, 최정현진, 최안진경,

(3) 3차: 9월 21일(월) 오후 7시(여성연구소)

-내용: 초중등생 대상 평화교육 실습(이재영 진행)

-참석: 김보정, 박인혜, 박재근, 박수선, 송소희, 신은희, 이재영, 이현주, 임재련, 조영희, 최안진경, 최정현진

(4) 4차: 10월 18일(월) 오후 7시(여성평화의집 지학교육장)

-내용: 갈등해결을 위한 연극놀이 실습(박인혜 진행)

-참석: 강준근, 박재근, 박인혜, 박수선, 서은아, 신윤순, 여혜숙, 유정은, 조영희, 최안진경, 최정현진

(5) 5차: 11월 22일(월) 오후 7시(여성평화의집 지학교육장)

-내용: 갈등해결을 위한 연극놀이 실습 2(박인혜 진행)

-참석: 강준근, 박재근, 박인혜,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최안진경, 최정현진

(6) 6차: 12월 20일(월) 오후 7시

-내용: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송년회(박수선 진행)

2) 운영위원회

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총 9차 진행.

(1) 1차: 2월 4일(수) 오후 4시

-내용: 운영위원회 보강 및 2004년 세부 사업계획안 논의

-참석: 이재영, 조영희, 최선희,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최안진경, 지성혜

(2) 2차: 3월 2일(화) 오후 5시

-내용: 2기강사트레이닝 기초 워크숍 평가, 사업 논의

-참석: 김학목, 최선희, 박수선, 여혜숙, 장윤경, 최안진경, 최정현진

(3) 3차: 4월 7일(수) 오후 4시

-내용: 학교 갈등해결교육 사업, 강사트레이닝 운영계획

-참석: 김학묵,이재영,조영희, 최선희,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최안진경, 최정현진

(4) 4차: 6월 8일(화) 오후 1시 30분

-내용: 행정부 프로젝트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세부계획 및 하반기 계획논의

-참석: 김학묵, 박인혜, 조영희, 여혜숙, 최정현진, 장윤경, 박수선

(5) 5차: 7월 16일(금) 오후 4시

-내용: 한강감리교회 여름수련회 워크샵 준비 및 월례회, 제2기 강사트레이닝 참가자 활동 방안 논의

-참석: 김학묵, 박인혜, 조영희, 여혜숙, 최안진경, 최선희, 박수선

(6) 6차: 8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내용: 연지초 갈등해결교육 사업계획 및 갈등해결센터 홍보관련 논의

-참석: 박인혜, 조영희, 여혜숙, 장윤경, 박수선

(7) 7차: 10월 13일(수) 오후 3시

-내용: 1차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평가 및 캠프 계획 논의

-참석: 김학묵, 조영희, 최정현진, 최선희, 박수선

(8) 8차: 11월 10일(수) 오후 3시

-내용: 2차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평가 및 2004년 사업 평가

-참석: 김학묵, 박인혜, 조영희,이재영,여혜숙,최정현진, 최선희, 최안진경, 박수선

(9) 9차: 12월 11일(금) 오후 5시

-내용: 2004년 총평가 및 2005년 사업계획, 청소년캠프 세부계획안 논의

-참석: 김학묵, 조영희, 이재영, 최정현진, 최선희, 최안진경, 박수선

3) 청소년교육팀

관악고, 연지초 CA, 방과후교실 및 창의제당 수업 진행과 캠프준비를 위한 논의(회의의 구체적 내용 생략)

○ 청소년 교육팀 회의일정

1차 1월 27일(화) 오후 2시

2차 2월 10일(화) 오후 2시

3차 2월 26일(목) 오후 1시

- 4차 3월 2일(화) 오후 2시
- 5차 3월 9일(화) 오후 2시
- 6차 3월 18일(목) 오후 2시
- 7차 3월 31일(수) 오전 11시
- 8차 4월 14일(목) 오전 11시
- 9차 4월 21일(목) 오전 11시
- 10차 5월 14일(금) 오전 11시
- 11차 6월 8일(화) 오후 1시 30분
- 12차 7월 5일(월) 오후 3시
- 13차 8월 28일(토) 오전 11시
- 14차 9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 15차 10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
- 16차 11월 29일(월) 오후 2시
- 17차 12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4) ‘행자부 프로젝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기획회의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내용 논의를 위한 기획회의 6차 진행
 기획위원: 박인혜, 조영희, 이재영, 박수선, 최정현진
 실무: 김학목

4. 주요 사업

- 1) 교사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 교육과 중재훈련
 - (1) 중부교육청 주최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의 실제(30시간 연수)’
 일시: 2004년 1월 26-30일
 <연수목적>
 -교사들의 평화적 갈등해결방법을 이해, 훈련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높인다.
 -학생들에게 평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 (2) 공적 교육 기관에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인천시 교육원, 경남교육원에서 도덕, 수학, 국어 등 직무연수에서 갈등해결교육(3시간, 7시간) 진행

-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중재 훈련/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해결워크숍

(1) 사업목적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 기관 및 지역 리더층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해결 워크숍을 통해 민관 혹은 지역 주민간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대결적 방식이 아니라 협동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민관 혹은 주민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단체, 기관, 지역 리더층의 중립적 역할을 모색, 훈련한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시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호존중을 익힘으로써 파괴적인 사회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의 단초를 형성한다.

(2) 주요 진행 내용 및 참가자

지역 간담회: 7월 9일(금)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지역 인사(ngo 활동가) 초청하여 갈등해결 워크숍 소개 및 참여방안 토론

1차 기초과정(내용 표 참조)

- 1회 : 9. 9 ~ 9. 11, 전북지역 단체 활동가 16명/임실 환경교육관
- 2회 : 10. 22 ~ 10. 23, 전북지역 단체 활동가 9명, 참관 3명/임실 환경교육관

2차 심화과정(내용 표 참조)

- 11. 18 ~ 11. 20, 1차 기초과정 참가자 중 16명/부안 광전자수련원

자료 발간

(3) 진행자: 김학묵, 박수선, 이재영, 조영희, 최정현진

(4) 평가

-지역 활동가 대상으로 개최,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인식을 지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함.

-지역 단체(전북여성단체연합)와 협력하여 모집 등 행정상 업무를 지역단체에서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연대극대화함.

-지역 현안 중심의 실습, 방법 훈련이 되어 지역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적용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실제 프로그램 수료자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 이후 조직으로의 구성 및 확대의 기초를 형성하였음.(가칭 전북갈등해결센터로 학습 및 실천을 위한 모임 운영중)

-이후 평화여성회와 어떻게 연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참가자들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친목프로그램 등의 강화, 세부 프로그램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 등의 문제점 제기됨.

-목표에 맞는 참가자들의 참여를 위해 모집, 대상선별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워크숍 이후 활동 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차 워크숍 일정

구분	시간	강의명
첫째날	13:00 ~15:00	등록 1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Community Building) 전체 교육과 프로그램 목표 및 일정 소개, 진행규칙 정하기
	15:00 ~18:00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정화적 갈등해결의 기초(갈등개념, 갈등대응유형, 원인)
	18:0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3강: 갈등분석1 -갈등분석의 기초(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방법 이해)
둘째날	09:00 ~09:30	이제 프로그램 평가
	09:30 ~12:00	4강: 갈등분석2-갈등분석 사례 실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15:30	5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15:30 ~18:00	6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2:00	7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지역공동체 가입 사례 나누기 중재자의 역할, 중재 원칙과 과정
셋째날	09:00 ~12:00	8강: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중재실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15:00	9강: 모둠 나누기와 지역 공동 사례 조사 계획 세우기 및 발표
	15:00~16:00	전체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 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2차 워크숍 일정

일자	시간	세부 내용	진행
11월 18일 (목)	12:00 -13:00	점심	
	13:00 -14:00	1강 : 1차워크숍 이후 변화와 실천 나누기(Community Building) 프로그램 목표 및 일정 소개, 진행규칙 정하기	박수선
	14:00 -16:00	2강 : 1차 워크숍 내용 종합 복습	이재영
	16:00 -18:00	3강 :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향상 기술 심화 훈련 1 (듣기, 말하기, 공감하기 등)	최현진
	18:00 -19:30	저녁	
	19:30 -21:00	4강 :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향상 기술 심화 훈련 2 - 분노 조절	최현진
11월 19일 (금)	09:00 -09:30	전날 평가	
	09:30 -12:00	5강 :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세우기 이해 1	박수선
	12:00 -13:30	점심	
	13:30 -15:30	6강 :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세우기 이해 2	이재영
	15:30 -18:00	7강 : 갈등해결 과정 실습 - 지역 갈등 사례	공동
	18:00 -19:00	저녁	
	19:00 -21:00	8강 : 갈등해결 과정 실습 - 지역 갈등 사례	공동 (평가진행 : 조명희)
11월 20일 (토)	09:00 -11:00	9강 : 전체 토론 - 갈등해결 방법의 적용가능성, 앞으로의 계획 등	박수선
	11:00 -12:00	평가	김학복
	12:00 -13:00	점심 및 해산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또래문제 제도적 접근)

(1) 2003년에 이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 진행.(통일교육협의회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악고 창의재량 시간에 갈등해결교육 진행. 4개반, 2시간씩 6차시, 7차시
-김학복, 조영희, 박인혜, 최정현진 진행(주요 내용 표 참조)

(2) 연지초등학교/CA반(갈등해결반)과 방과후교실-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방과후교실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여혜숙, 박인혜 진행

1, 2학기 총 24차시 진행(주요 내용 표 참조)

(3) 청소년 평화, 갈등해결캠프

-평화문화 형성과 청소년들의 평화적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방학중(2005년 1월 7-9일 2박3일) 캠프 개최-김학복, 조영희, 여혜숙, 최안진경, 최정현진 진행

(4) 청소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교육 실시

학교 갈등해결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이는 갈등해결, 평화 학교> 안내문 마련, 홍보

관악고 수업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1차시	소통하기 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 강의 소개 ○ 마음 열기/서로 이해하기 - 짝 소개(공통점 찾기) ○ 함께 만드는 약속
	갈등개념 이해하기	○ 갈등 개념 이해/내가 알고 있는 갈등 ○ 갈등의 원인과 결과 ○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 이해 - 그림으로 갈등 표현하기, 갈등 거리제기
2차시	갈등의 원인 이해하기	○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 사례를 통해 원인 찾기(남북이해지 활용)
	자기갈등유형 이해하기	○ 자기 갈등대응 유형 이해(갈등유형 이해지 활용) -분단국가에서의 갈등대응 유형 ○ 내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 찾기 - 갈등에 따라 대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3차시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 듣기, 말하기 - 말 전달하기, 듣기 게임 - 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법(나선달법, 대화속 기

		시제기)
		○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1 - 협상이란? - 협상의 원칙과 방법
4차시	협상의 실제 임장(position)과 이익(interest)의 분리	○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2-협상실습 ○ 서로의 요구 드러내고 파악하기 - 표면적, 현상적 요구와 실질적 요구의 구별과 실익에 초점 맞추기, 질문 '왜(Why)?'의 중요성과 적절한 질문법
	이럴 때 나는?	○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법 연습
5차시	차이, 차별에 대한 이해	○ 차이와 차별의 개념 이해 ○ 차별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 -권력의 꽃 ○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구조 이해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오나? ○ 열린사고와 다양성 존중, 평화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의 중요한 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6차시	분노 조절	○ 분노의 원인, 조절의 방법 익히기 - 폭력과 분노의 원인 알아보기 - 분노 조절과 분노의 평화적 표출 방법 알아보기
	정리, 평가	○ 설문 ○ 핵심있는 질문, 나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 통일시대의 나의 모습은?

연지초등학교 주요 내용

※ 1학기

차시	내 용
1	○ 이틀표 만들기 ○ 소개, 인사
2	○ 사랑고백하기 ○ 나는 대단히 이런 사람이에요 ○ 갈등그림그리기
3	○ 플라쥬로 자신을 소개 ○ 주변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 (조별작업, 발표)
4	○ 나는 어떻게 갈등에 대응하는지 알아보자. ○ 이럴때 어떻게
5	○ 실타래 던지기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갈등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겠지?
6	○ 동화 속에서 갈등 찾기(남북분단 관련 동화) ○ 역할극으로 표현
7	○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리고 모두 소중한요
8	○ 우리 모두는 생각과 느낌이 다 달라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9	○ 우리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보자
10	○ 내 생각을 잘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1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북한문화이해지 활용)

※ 2학기

구분	내용
1차시	○ 앞사람은 무얼 표현한 걸까? 이어서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 자기의 느낌 찾기 (동그라미 그림 그리고 이야기 꾸미기)
2차시	○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를 표현하기 (입장을 바꿔봐!!!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3차시	○ 놀이 속에서 감동 찾기
4차시	○ 잘 듣기 / 제대로 들었나? 무슨 뜻일까?
5차시	○ 잘 말하기 / 너 마음을 정확히 전하기 ○ 네 말이 이 뜻이니? 되묻기
6차시	○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 좋은 대화로 바꾸기
7차시	○ 화날 땐 어떻게? / 나는 어떤 때에 가장 화가 나냐? 화가 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니? 왜 화가 나는 걸까?
8차시	○ 다양한 감동 해결 방법 배우기/ 협상
9차시	○ 다양한 감동 해결 방법 배우기/ 중재
10차시	○ 우리는 감동해결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가야 (작은 쪽 만들기)
11차시	○ 티셔츠에 나만의 그림 그리기 ○ 희망의 비누방울 날리기

□ 사업효과 :

- 가.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을 교사가 아닌 외부 단체 활동가들이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평화운동단체간 긴밀한 관계와 지원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마련했다.
- 나. 1회성이 아니라 6, 7회 또는 1년 단위로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다.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여식 수업 방법으로 참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를 높이고 경험학습을 통해 미약하지만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는데 기여하였다.
- 라. 부분적이지만, 수업을 통해 학교의 평화문화가 꽤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 마. 통일교육 차원에서 화해와 공존의 통일을 이해하고, 그 방법과 관점을 습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갈된 점 :

가. 참여학생들이 평화적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나. 차이를 인식하고 공존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되었다.
다. 자존감을 높이고 소집단에서의 참여도를 높이지 되었다.
라.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운동단체간의 연계망을 만드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1학기 수업에 참가한 관악고등학교 3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존의 수업방식과 달리 발언기회가 많았던 점, 스스로 참여할 기회가 많은 점 등 때문에 자유롭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교육 이전에는 대학진학이나 복강, 피어싱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생겼을때 심하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여 왔으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정규교사가 아닌 외부의 평화운동단체에서 진행하는 강의의 내용과 진행방식에 특히 흥미를 나타내었고, 수업시간 내내 존중받는 느낌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위와 같은 결과는 연지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문제가 생겼을때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8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급에서 모범적이거나 평범한 학생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문제가 있거나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표현을 하거나 학급일에 스스로 나서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왕따를 시키는 학생의 경우 태도가 달라지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내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심화반을 만들어 또래중재자 양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다.

○아쉬운점 :

가. 학교장 등 교사들의 갈등해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 그런 이유로 학교예산에서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원활동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

적으로 확산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진행자 수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수업으로 이해하고, 학교전반적으로 평화문화로의 변화,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의 직접적 동참이 필요하다.

○ 청소년교육팀 운영 및 사업 평가

가. 성과

-연지초등학교까지 수업이 확대되어 수업대상 영역의 확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재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업내용이 심화되었다.

-청소년 교육팀원의 확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되어 들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

-강사트레이닝을 통해 배출된 강사의 합류로 강사의 폭을 넓혔으며, 청소년 대상에 그치지 않고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자체 재교육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를 시도하였다.

나. 한계

-사업계획에 비추어볼 때 계획한 만큼 대상학교를 넓히지 못하였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담당 상근자의 부족으로 실무력이나 추진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느슨한 상태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다. 과제

-청소년대상 갈등해결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강사를 더 확보해야 한다.

-본부 실무진과의 연계강화,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팀 성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 활동의 계기를 찾아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과의 연계의 기제 마련 및 갈등수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상통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4)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2003년에 이어 2기 갈등해결 강사 트레이닝 실시

(1) 트레이닝의 목표

가.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진행자로서 평화의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

을 함양한다.

나. 참여프로그램 진행의 기술을 익힌다.

(2) 기대효과

가. 입시위주의 경쟁적, 배타적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서 학생들이 평화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나. 일상에서 빈번한 사소한 갈등을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다. 대화와 협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한다.

라. 편견의 극복,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분노조절과 평화적 표출을 익히고 관용, 평화, 화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마.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평화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며 청소년들의 갈등을 청소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또래 중재인'을 양성한다.

(3) 사업추진기간: 2003년 2월 20일~7월 5일 총 74시간

(4) 교육 진행 방법 및 내용 : 교육은 3단계로 진행되고, 이후 실제 학교 갈등해결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가.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박 3일 워크샵 진행)

나. 2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3시간씩 8강좌)

다. 3단계: 적용-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3시간씩 10강좌)

라. 학교 수업에 강사로 참여

교육 이수 후 중고등학교에 창의재량 수업 및 CA 시간에 갈등해결 교육 강사로 2,3회 출강하도록 한다.

마.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5) 참가자: 김보정 외 13명

(6) 평가

-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다.
- 2기 트레이닝 참가자들이 이후 월례회와 청소년교육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 외부 지원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꾸리면서 장기프로그램을 진행한 데는 청소년교육팀원과 연구원의 조직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 강사트레이닝 수료자들이 청소년대상의 교육 또는 이후 강사트레이닝의 강사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 재생산에 중요한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보다는 나아졌지만, 모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 갈등해결 교육 강사'의 경제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참가자들도 있어 장기적 프로그램에의 투자에 비하여 조직적 성과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전문강사' 양성으로서의 경제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갈등해결을 통한 남북여성교류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 프로젝트 추진

- 분쟁지역에서 평화조성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제 남북 여성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의 평화적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을 2005년에 개최, 진행할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 후원 등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갖고 계획(제안)서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한다.
- 과정은 팀을 구성하고, 이 팀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작업(워크샵, 토론회 개최)을 진행하고, 재정마련을 위해 국내외 후원단체를 접촉,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 프로젝트 계획(제안)서를 완성한다.
- 사업의 특성상 갈등해결센터 단위보다 전체 본부사업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이 더 내실있게 진행되고 그 의미나 성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 사업의 주관을 본부가 진행할 것을 제안함.

6) 사회갈등분석, 해결방안(문화, 제도) 연구 작업

조직적 연구작업은 진행되지 못했으나, 사회갈등 관련해서 2월부터 11월말까지 박수선 소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 문제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갈등에서의 예방, 조정 과정에 대한 실무능력을 높이고, 강연을 통해 이후 교육 또는 연구작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7) 연구, 출판 사업

-2002, 2003년 1차 기획, 제작된 시민교육, 청소년 교육 매뉴얼을 보완하여 하반기 재발행 계획은 실행하지 못함.

8) 회원 재교육: 학습모임, 타프로그램 집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 마련

-원례회를 조직하여 진행중.(원례회 내용 참조)

-5월 15-24일 비폭력대화 국제심화훈련프로그램에 여혜숙, 조영희, 박수선, 최정현진 참여.

9)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2004년 5월 15-24일 비폭력 대화 국제심화훈련 프로그램 공동 주최

10) 기타 외부 교육 진행 및 갈등해결관련 활동 참여

1/26-30 서울시교육연수원 주최 또래중재 워크샵(김정수, 이재영 통역참여)-서울시교육연수원(30시간)

1/26-30 서울중등수업방법개선연구회 주최 '행복한 학교운명을 위한 갈등해소의 실제'(박수선 진행, 30시간)

2/4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주최 지도사연수 '갈등해결 방안'(2시간)

2/18-3/24 부천여성회관 주최 '평화와 화해를 쌓는 갈등해결워크숍' 진행(2시간씩 6회, 박수선 진행)

5/19 중앙공무원교육원 주최 갈등관리과정 강의-갈등해결의 기본 기술(박수선)

5/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갈등해결' 강의(박수선)

6/22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갈등관리포럼 참여(조영희, 최호진, 박수선)

6/25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2004 의식개혁 및 행정혁신 교육훈련에 '인간관계 갈등해결' 강의(박수선)

7/2 양구에서 개최된 한국환경활동가대회에 평화마당에서 '평화적 갈등해결' 강의(박수선)

- 7/10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최 '평화로운 삶, 생활속의 휴식을 위한 평화 운동 워크숍'에 '평화와 폭력' 주제로 강의(박수선)
- 7/19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2004 사회과, 국어과, 수학과 정1자격연수에서 '인간관계 갈등해결' 강의(박수선)
- 7/31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최 어린이평화캠프에서 갈등해결과 평화 강의(박인혜)
- 8/11 경남교육연수원 2004 사회과 정1자격연수에서 '갈등해결과 관용' 강의(박수선)
- YMCA 주최,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갈등해결분야 집필 참여(김학목)
- 8/20-21 한강감리교회 '전교우 수련회 갈등해결교육',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1박2일 워크숍(김학목, 조영희, 여혜숙, 최정현진, 박수선 진행)
- 8/21 KYC 주최 어린이평화캠프(홍성)에서 갈등해결과 평화 강의(박인혜)
- 6-8 나무를 심는 사람들 주최 갈등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광주전남지역, 조영희, 박수선)
- 9/11 CBS방송 '고대원의 아침편지'에 출연(여혜숙) 9.11 테러 2주기를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학교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
- 9/14 국가행정전문원수원 주최 5급공무원 교육 중 '갈등해결의 기본기술' 교육 진행(김학목, 박수선, 조영희)
- 9/15 오전 11시 - 2시, 강남중학교 학생 30여명 평화여성회 방문, 갈등해결 교육(조영희, 최안진경, 여혜숙 진행)
- 9/16 평화박물관 활동가 교육-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진행(박수선)
- 9/17 나무를 심는 사람들 주최 갈등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충청권지역, 박수선)
- 9/18 경남여성회(창원) 주최 리더십 교육/평화적 갈등해결 이해 교육진행
- 9/21-10/16일 고양여성민우회 민우여성학교에 '평화적 갈등해결' 8차시 교육 진행(박수선, 조영희, 여혜숙)
- 10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갈등해결프로그램 및 청소년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작업(박수선, 조영희, 여혜숙)
- 10/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교육/평화적 갈등해결 이해 교육 진행
- 10/30 나무를 심는 사람들 주최 갈등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경남권지역, 박수선)
- 11/13 시흥YMCA 주최 회원수련회에서 '갈등해결 기초' 강의(박수선)
- 11/22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교육사례보고회에 평화여성회 갈등해결 평화교육 발표(조영희)

12/1 중앙공무원교육원 3기 갈등관리과정에서 갈등해결기본기술 강의(박수선)

12/2 인천 작전여고 교사 대상 갈등해결교육(박수선)

2-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참여(박수선)

2-4. 회원참여센터

□ 소장 : 최현희 사무처장

□ 담당실무 : 김현희 조직국장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비증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며, 또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재정마련을 도모한다.

2. 사업목표

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간다.

신입회원 한마당, 전체 회원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에 기여하도록 자부심을 키워간다.

②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 활동의 장을 발굴하여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평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한다.

③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여 회원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④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온라인 오프라인 소식지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도 함께 담아내어 회원들간의 친밀감을 높여낸다. 또한 평화여성회를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⑤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3. 사업내용

1) 일정보고

- 1/5(월) 오후1시 2003년도 회계감사, 평화여성회 회의실
- 1/13(화) 오전11시 여성평화운동을 살리는 일일호프준비회의, 평화여성회
- 1/16(금) 여성평화운동을 살리는 일일호프, 세실레스도람
- 1/27(화) 오전10:30 한국여성재단 파드너 기관 실무자 워크샵, 여성플라자
- 2/26(목) 오전11시 2004년도 여성평화의집 정기이사회, 여성교회
- 3/8(월) 오후2시 2004년도 소식지 발호 기획회의, 여성교회
- 3/25(목) 오후3시 회원사업팀 2차 기획회의, 여성교회
- 3/29(월) 오후5시 2004년도 2월분 회계 점검, 평화여성회 회의실
- 4/2(금) 회원한마당 장소답사, 웃는뜰/엄마목장 외
- 4/10(토) 오전9시 2004년도 회원 봄 산행, 도봉산
- 4/14(수) 오전12시 홍보대사 이정현 미팅, 풀향기
- 4/23(금) 오후7시 2004년도 신입회원 모임의 날, 여성교회
- 4/26(월) 오후5시 2004년도 3월분 회계점검, 평화여성회 회의실
- 5/15(토) 오전10시 회원산행, 북한산
- 5/20(목) 오후4시 회원사업팀 3차 기획회의, 여성교회
- 5/20(목) 오후6시 일본과거청산을 위한 국제회의 만찬, 서울여성플라자
- 5/21(금) 오후4시 스미즈스미코와의 만남, 서울여성플라자
- 5/24(월) 오후5시 회지 고정작업을 위한 평화여성회 회지팀 회의
- 6/21(월) 오후4시 회원한마당 기획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 7/2(금) 오후3시 회원사업팀 5차회의, 매종교리
- 7/23(금)-7/25(일) 제2회 회원한마당, 추암하우스, 85여명 참여
- 9/14(화) 오후4시 회지집 가을호 기획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 9/23(수) 오후3시 회원사업팀 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 10/11-12월중순 DMZ 기행 가이드 교육/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 10/23(토) 회원만남의 날, 남이섬으로 떠나는 여행
- 11/20(토) 오전8시45분 (과주지역답사-오두산 전망대-임진각-통일촌-제3경도-도라산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빈구정-캠프 하우스-도화)
- 12/3(금) 오후6시30분 제8회 평화여성회 후원의 밤, 신촌 아트레온도즈
- 12/3(금) 2004년도 소식지 겨울호 발행
- 12/16(목) 오후5시 회원사업팀 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2) 재정사업

(1) 여성평화운동을 살리는 일일호프

가. 목적 : 여성평화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내용 : 일일호프

다. 일시 : 2004년 1월16일(금) 12:00 - 23:00

라. 장소 : 세실레스도람

마. 사업평가 :

가) 성과 및 과제

①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원래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후원행사 진행한지 8개월 만에 재차 진행을 해보니 결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것은 수익구조를 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② 한과판매는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진박하게 한과를 주문, 판매한 것에 비하여 일일호프의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는 설을 앞두고 진행하였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추후 재정마련을 위해 정기후원행사 이외에 한과, 과일 등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추후 호프방식은 지양하고 기존의 후원행사 방식의 문화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일호프의 방식은 준비과정에 있어서 많은 실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은 실무자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후원행사에서는 가급적 호프방식은 지양하고 실무여량에 맞는 간단한 문화행사 도입 및 뒤쫓기로 후원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평화여성회 여덟 번 째 프로젝트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가. 목적 : 여성평화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일시 : 2004년 12월3일 (금) 오후 6시 30분 - 9시

라. 장소 : 신촌 아트레온 토즈 13층

마. 프로그램 내용 및 순서

사회자 : 김박대식, 최선희

제 1부 : 본행사 - 평화의 인사 및 축하, 평화여성회 활동소개

제 2부 : 작은 열린음악회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예쁜아이들/ 드림캐츨연주 / 실버라이닝 / 안혜경가수 / 이정현(홍보대사)

제 3부 : 평화만찬 및 즉석마자회

바. 사업평가

1) 성과 및 과제

① 후원금액

매초 최소 목표금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예상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모아졌다. 하지만 당장의 평화여성회 재정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비록 많은 후원금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추후 후원행사를 진행할 때 모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화작업을 진행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장소관련 (장소/태코레이션외)

신촌 아트레온토르는 약 200여명의 참여규모로는 약간 협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이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장소 태코레이션의 분위기가 여성, 평화의 이미지에 맞게 따뜻하면서도 세련되어 호응이 좋았다.

③ 행사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자들의 환상적인 콤비로 인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1부 공식행사는 짧게 그리고 2부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평화여성회를 감성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평소 여성평화운동에 직접적인 관심은 없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온 분들 중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는 분들이 있고 참가자 중의 몇몇은 새로 회원을 가입하였다. 행사를 준비한 평화여성회에서는 소중한 보람이 되었다.

④ 자원봉사 조직

행사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안내, 꼬마 바자회물품 판매, 무대장 식 보조를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제각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후원행사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⑤ 음식

참가자 모두 음식에 대한 평이 좋았다. 특별히 맛만사에서 제공된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음식의 질을 높여 뷔페로서 손색없는 음식차림이 되었다.

⑥ 꼬마바자회

회원이 직접 손으로 만든 비즈공예, 한지공예는 인기가 좋아 손님들을 바자회 코너로 눈길을 끌게 하였다. 바자회는 참가자들에게 재미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추후 바자회를 잘 기획하여 보다 많은 회원, 임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진행하면 더욱 알찬 바자회가 될 것이다.

⑦ 음향 및 조명

전반적으로 좋았다. 음향 하는 분이 보다 신경을 써서 외부의 전문 음향기기를 들여 놓았기에 전문가수가 무크기에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초반에 예쁜아이들의 공연의 경우 음향이 너무 커서 듣기가 부담스러웠고 실버아이들의 경우는 음향 담당자가 MR을 소극적으로 진행해주어 음향이 풍부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전문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노래를 할 때도 보다 음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

다.

조명은 많은 부분 아쉬웠다. 영상물을 진행할 때 다른 조명은 끄고 영상물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환한 조명을 사용하여 영상물을 보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자의 발언시에도 집중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조명은 아쉬움이 있다.

2) 회원사업

(1) 회원사업팀 : 팀원- 최선희(소장), 김현희(실무자), 문명녀, 송소희, 정유진

① 회의 (7회)

가. 일시 : 2월25일(화), 3월25일(목), 5월20일(목), 7월2일(금), 9월23일(목), 11월25일(목), 12월16일(목)

나.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② 신입회원 만남의 날

가. 일시 : 2004년 4월23일 저녁 7시 나. 장소 : 여성교회

다. 참석 : 김보경, 엄인영, 우귀선 황순영, 문명녀, 최선희, 김현희, 안은주, 전은주)

라. 내용 :

전체진행 : 김현희 조직국장

시간 (오후)	프로그램	담당
7:00-7:30	마음열기, 평화의 명상	문명녀 평화심성팀장
7:30-8:30	강좌 '여성은 평화의 힘입니다'	이김현숙 상임대표
8:30-9:00	영상물을 통해 본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9:00-	감학 파티	다함예

라. 사업평가

가) 성과

① 회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회원사업팀에서는 단 한명의 신입회원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모여 지난 4월23일 처음으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김현숙 상임대표께서 진행해 주신 강의는 여성평화운동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청사진을 제공해 주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어 참여자중의 몇몇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 여성평화운동의 소모임 구성 및 평화여성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 과제

① 보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Q-Sheet 및 업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실무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② 여성평화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입회원들이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 선물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였다. 이뿐 아니라 평화여성회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환영받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③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약 두 달에 한번 씩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정례화하고 신입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입회원 교육에 매번 새로운 강화를 넣을 필요가 있다.

(2) 제 2회 회원한마당 “빛고 짓고 태어서 하나되는 평화”

가. 일시 : 2004년 7월23일(금) ~ 7월25일(일) 2박3일

나. 장소 : 추양하우스 (강원도 속초 소재)

다. 목적 :

① 회원들의 정체성 고취 및 회원들 간의 친목, 결속력을 높인다.

② 평화교육 및 다양한 평화문화체험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함을 일깨운다

③ 평화기행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를

일깨운다.

라.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강사
7월23일(금)	오전 8:30	집결 (동대문운동장역, 선도암역)	
	오전 9:00	출발	
	오전 9:00 - 오후 3:00	차안에서 (함께 소개하기)	문명녀, 최선희
	오후 3:00 - 3:30	도착 및 집정리	
	오후 3:30 - 6:00	평화가 있는 원(산, 바다, 그 외)	
	오후 6:00 - 7:30	저녁	
	오후 7:30 - 9:30	전체인사	최선희

7월24일(토)	오전 7시	기상 및 세면	
	오전 8시 -9시	아침	
	오전 9시-10시	평화명상	문명너
	오전10시 -11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여성들의 힘 - 여성평화활동들의 사례 -	최선휘
		청소년 프로그램 : 만화를 통해 본 평화 이야기	김도형, 박종원
	오전11시-오후12:30	짓고, 밟고, 깨어서 하나되는 평화	김현진,이선영,최선휘
	오전12시30-오후1:30	점심	
	오후1:30-4:00	평화의 댄스	임희진(댄스강사)
		청소년 프로그램 : 평화 놀이 및 게임	김영구, 김도형, 박종원외
	오후4:00 -4:30	휴식	
		부문강좌	
	오후4:30 -6:30	1. 갈등, 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2. 내용을 평화롭게 하는 자와 음식	박수현 문명너
	오후6:30 - 8:00	평화의 만찬	
	오후8:00 - 9:00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평화명상 및 집회 (축조 할 바닷가)	천은주
	오후9:00- 11:00	평화축제 (평화의 나눔, 통일 평화각광행 진, 참가자갈, 댄스 외)	김현희
7월25일(일)	오전 7시	기상 및 세면	
	오전 8시 -9시	아침	
	오전 9시	평화기행 출발 : 고성외 통일전망대 화전도로.. (김일성, 이승만 별갈)	최현진(우리미래 하나되기운동본부 부대지원사무장)
	오후 1시	점심 (도시락)	
	오후 2시 -	평화기행 계속	
	오후 4시	집으로..	

마. 참가자 : 약 90여명

바. 사업평가

가) 성과 :

① 많은 인원수 및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예초 계획된 예상인원 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은 인원, 약 9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②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약 90% 이상이 이번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⑤ 사업내용 보완 및 별 차질 없이 사업수행 완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청소년 및 아동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연령대임을 고려하여 함께 평화를 표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⑥ 여성평화운동 인적인프라 형성에 기여 및 회원가입의 확대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적은 것이 요증의 현실 속에서 이번 행사에 약 90여명 정도 참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한 이들 중에 약 50%이상이 평화여성회의 회원가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관심 및 관심분야에 따른 활동을 희망하였다.

⑦ 기존 집회에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게 된 효과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평화무채만들기를 파병철회 집회시 참여자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며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농성단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호응을 얻기도 하였고 평화평상을 도입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평화의 염원을 기원하였다.

⑧ 큰 규모 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음

평화여성회의 적은 실무자로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약 90여명의 규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회원사업팀의 수차례의 기획회의 및 점검, 실무자들간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무리 없이 치루어 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후 매년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⑨ 가족단위로의 참가가 좋았다.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아동 프로그램과 나이에 구별받지 않은 평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행사 후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가족단위로의 참가가 좋았다고 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때 기혼여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조건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⑩ 식사와 대 꺼니마다의 새롭고 맛난 음식이 좋았다.

7끼의 식사,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많은 이들이 잘 먹고 잘 배웠다고 좋아하였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깔끔하고 대 꺼니 식사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 나왔고 음식의 맛과 색깔이 좋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별히 음식을 위해 맛만사 (맛을만드는사람들)의 음식 조리 전문가들이 수고해 주었다.

나) 과제

① 대중적 프로그램을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한마당 행사는 이번 행사처럼 대중적 프로그램으로 회원들과 함께 서로의 친목을 나누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의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질 높은 강의를 약 2개 정도 배치하여 준비해 보기로 하다.

(3) 회원만남의 날 (회원산행, 남이섬)

가. 일사 : 2004년 4월10일, 5월15일 10월 23일(토)

나. 장소 : 북한산, 도봉산, 남이섬

다. 참석 : 회원 10여명

라. 프로그램 : 산행, 남이섬에서의 산책, 평화상종권 교환, 낙엽줍기등

마. 평가 및 과제

① 회원모임을 산행 뿐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유원지등을 확대하여 가기로 하였다. 산행의 경우 1-2개월에 한번 씩 유원지 등은 년 2~3회 정도 하기로 하였다.

② 회원모임은 회원들의 단합에 기여하며 또한 이번 회원모임의 참가연령 중에 20대의 젊은이들에 주류, 추후 20대 젊은이들의 모임을 기획 준비해 보기로 하였다.

(4) 2004년 회원확대 현황

가. 신입회원(2004년) :

김민숙 (사회복지사),김정인(여성평화연구원), 조영숙(공무원), 이현주(대학생), 김진영(직장인), 김보경(교사),이상운(약사), 김용자, 이신자, 정진(정치인), 박환순, 조구희(약사), 김영애(교사), 나현정(대학생), 임재련(여성운동가), 이미경(학인),김미경(공무원), 이행균(변호사) 이수경(직장인), 이수효(평화활동가), 임영신(평화활동가), 유정은(강사), 손현미(컴퓨터 프로그래머),한미영(가수), 박재근(연구원), 최규정(기자), 최용숙(기자), 윤숙영, 이정은(교수), 김은란 (직장인), 인정 (대학생), 현윤애(일리스트), 김인숙, 유지현(대학원생), 이선영(비즈공예 강사), 이덕경, 유은하 (평화활동가), 강종근(아파트관리소장), 김달아(미국거주),이균봉(민주노동당원), 이미애, 이신미(교수), 손은정 (목사), 최양현진(시민운동가), 염두용(공무원), 이혜정(학원강사), 임영희(공무원), 정명일 (기자), 강경란

나. 사업평가

가) 성과

① 약 50여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다.

② 신입회원의 분포도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40여세의 여성들이 회원분포도에 집중되었으나 올해의 회원은 다양한 연

량대,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 과제

① 각 센터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단계부터 회원확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회원가입에 있어서 평화여성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회원가입의 동기를 높 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각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 단계부터 소장, 담당자, 팀원 등이 여성평화운동의 확대에 중요성을 가지고 회원확대에 대한 기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②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분포도는 회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알아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에 맞게 회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3) 회지팀

(1) 회의 : 2004년 3월8일(월), 5월24일(월), 9월14일(화), 10월29일(금).

(2) 소식지 발간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박수선, 장성순, 장정화, 최선희

(3) 2004년 신년호 발간

가. 신년호 (통권 제 18호), 발행 : 2004년 1월16일 / 발행부수 1,000부

목 지	내 용	글쓴이
새해인사	여성평화운동의 비상을 함께 꿈꾸는 한 해가 됩시다	김숙임
2004년 평화여성들의 새해기원	새해원 달이요 -	회원들
이야기마당 1	삶과 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다 - 제 1회 회원한마당 행사 "내안의 보석을 찾아라"에 참여해보자 -	엄인영
이야기마당 2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리더십 캠프를 마치고	이명희
축하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운동에 이바지해온 여성의 역할 인정받은 것 기 뻐 - 이길현숙 대표, 제1회 <남북화해상> 수상	장경화
	민족화해상을 수상하며	이길현숙
그림판	2004년, 모든 여성에게 평화롭!	홍미진
특집 '이라크 전이 우 리에지 던진 과제'	이라크 전쟁 이후 국내외 반전평화운동의 동향	정대연
	이라크에 대해 이라크인에게 길을 묻다	임영신
이야기 마당 3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9.11 유족회 공동간사 David Potorti씨와 평화운동가 Sara Hounders와의 만남에서-	안병선
여성평화운동의 모색	아시아 여성 평화네트워크 왜 필요한가?	삼영희
대안다	"이제 이라크 시민사회와 만날 준비를"	홍승희
토론회 지상중계	한반도정세대응 여성TASK FORCE <전문가포럼>	전은주
	2003 여성평화아카데미 / 남북교류와 여성의 역할	장성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평화읽기	최진실 유감	이은하
지구촌 평화이야기	태권의 거대한 흐름을 평화의 물줄기로 바꾸어 내려면 -아래나 지역 워크숍 참가자-	김동연
	무력분쟁을 넘어 평화형성을 시민사회의 힘으로 "갈등예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한 동남아시아/동아시아 지 역협의회	정경란
이낙호 선생에게 배우 는 건강법	각탕요법	이낙호
거울 회원	"김춘하는 신앙신부들에게 시민단체활동 알리고파" - 송소희	장성순
취임인사	다인보다는 나를 더 알아보는 2004년이 되길	최선희
알림과 나눔		
성명서		

(4) 2004년 불호 발간

가. 불호 (통권 제 19호), 발행 : 2004년 6월5일 / 발행부수 1,000부

쪽 지	내 용	글쓴이
추모사	평화운동의 선구자 여성인권운동의 대모 고 이우정 선생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박성자
평화의 시	어머니의 이름으로	김혜자
이야기마당 1 제2기 강등해결 강사브리 이닝에 참가하며	잔잔한 호숫가 같은 내 가슴에 던지진 작은 돌맹이 미래의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교육	박재근 신윤순
편지	꼭꼭 봉인 친구들에게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	
칼럼	위기 앞에서 늘 하나 되는 민족의 저력으로 - 용원 역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운동에 나서며 -	홍승희
칼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왜 필요한가?	김연철
특집 4.15총선 그리고 이후전망	숫자로 본 4.15 총선 -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관점에서 - 평화를 만들어가는 국회가 되기를..	장성순 최선희
이야기 마당 2	산, 자유와 총족의 힘 -화원산행을 다녀와서-	지성희
대중문화속 평화읽기	그들의 삶에서 난 진한향을 느낀다 - 영화 '송환'을 보고나서 -	김혜진
이라크 리포트	역을 14시간, 그 긴장 속에서 만난 이라크	한재광
도론의 지살중계	달상의 평화센터 (월레포럼) 길 건너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영'	김정수
일상이야기	아가엄마가 되고나니.. "내 사랑, 한울이"	전은주
지구촌 평화이야기 1	침공하는 지구 NGO가 지킨다 -2005년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의 한국 위원회 발족 에 즈음하여-	안은주
지구촌 평화이야기 2	피츠보르 '평화를 만나는 창'	정경란
지구촌 평화이야기 3	평화헌법 수호, 질박한 의정과 함께 하다 8.3 일본 호헌집회 참가가-	정경란
5.3 호헌집회 연침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행동에 연대하며	
알림과 나눔		
성명서		

(5) 2004년 겨울호 발간

가. 겨울호 (통권 제 20호), 발행 : 2004년 12월3일 / 발행부수 1,000부

목 지	내 용	글쓴이
위원인사	평화를 단결여가는 강력한 주제가 되어야	김윤옥
책머리에서	여성적 결집, 여성적 방식으로 하는 평화통일운동을 꿈꾸며	홍승희
이야기마당 1	우리 하나 되어 빛고 짓고 배는 것은 사랑 그리고 평화 - 최원한여당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	김혜진
이야기마당 2	새로운 인생의 시작 -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을 수료하며 -	강중근
이야기마당 3	길로 뚫지 않은 하루, 작은 안식처 남아있 - 회원 만남의 날 -	이선영
이야기마당 4	협동적 갈등해결과 중재를 위해 씨를 뿌리는 각자단 소중함 문짓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참가기	염경형
특집 :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며 : 반제국주의에 대항할 초국적 연	아나영
미국의 침공이후 늘어나 는 테러	주인대를 제안한다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길	김진환
군축에 대한 이해	'안보'의 의식체제를 바꿔야 '평화'가 정착된다	이경아
시사초점	'시대적 화두와 국가보안법 폐지'	김성란
여성평화운동의 모색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망 찾기 - 2004 여성연합 정책수원회를 다녀와서 -	전은주
지상강좌	비폭력적 삶은 가능한가 -일상의 평화센터 제3차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장경화
갈등해결	싸우면 만나야 한다 -한반도여성 갈등조정과정에 대하여-	박수현
지구촌 평화이야기 1	그들이 우주를 바꾼다	임은주
지구촌 평화이야기 2	세계한인족여성독일네트워크 주최 '남, 북, 해외여성의 만남 심포지움-한반도 평화교육과 여성' 에 참여하고	김숙임
지구촌 평화이야기 3	평화박물관과 여성 - 일본평화박물관방문기 -	김숙임
지구촌 평화이야기 4	미국의 평화운동과 책머리공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정경란
지구촌 평화이야기 5	일본어머니대회-평화를 향한 어머니의 힘	정경란
여사 소개	마음의 곁을 따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김지영	김현희
알림과 나눔		자센터
성명서		

(6) 사업평가

가) 성과 :

- ① 회지팀이 구성되어 기획을 함께 하였기에 내용이 알차다.

작년에는 한차례 회지가 발행된 것에 비해 올해에는 세 차례의 회지가 발행되었고 회지팀이 구성되어 함께 기획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다. 덕분에 여성주의 적 관점에서 시사문제, 일상의 평화문제, 회원모임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었다.

나) 과제

- ① 예초 년 4회 회지발행이 계획 되었으나 원고작성자의 협조부족으로 인한 원고수집의 연기 등으로 3회 발행되었다. 2005년도에도 4회 발행을 기획하게 될 경우 적극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소식지에는 여성평화운동의 자료로서의 가치와 시의적절성이 함께 가야할 필요가 있다. 3회 발행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4. 사업총평

(1) 성과

- ①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여내었다.

신입회원교육 및 회원한마당에 약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이후 각 시위 때마다 꾸준히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고 회원모임인 산행, 여행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회원들간의 우애 및 친목을 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평화여성회가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여성평화회의식을 보다 높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② 여성평화운동을 회원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소식지 3회 발행, 여성평화운동 소식을 알려내는 메일링 발송 등 을 한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공유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 ③ 회원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획한 프로그램 내용은 보다 많은 친화력 및 예산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갈등해결 교육, 평화영상, 비즈공예, 종이공예 등 평화여성회 내부 인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친화력을 주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도 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져왔다. 그리고 몇몇 회원은 후원행사에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 기부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

이 있었다.

④ 작년에 비해 회원들의 직업, 연령 등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확대되었다.

(2) 과제

① 회원참여에 대한 집중적 고민이 필요하다.

담당실무자의 업무과다로 인한 회원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고민을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를 위한 환경마련이 중요하다.

② 각 센터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인적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원확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갈등해결센터는 갈등해결강사훈련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회원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 갈등해결센터뿐 아니라 각 센터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여성평화운동의 저변화 확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회원확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③ 회원들의 다양한 소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평화여성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어 긍정성을 갖고 있지만 단지 참여수준에 머물러 있어 회원동원의 이상의 의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젠 교육의 대상, 집회참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회원들에 대한 연령별, 관심사별, 직업별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평화여성회의 회원구성이 연령대, 직업대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욕구와 관심을 파악하게 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다.

⑤ 재정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기획이 필요하다.

2004년도에는 두 차례의 후원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안정적 재정마련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어 한달 한달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인하여 중단된 상황이다. 재정마련에 대한 고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사무처 운영위원, 이사등 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재정마련을 위해 중단기적인 기획 및 논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추고 함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의해 가야 한다.

2-5.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정경관

1. 사업목표

- ① 국내 (여성)평화 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와 관계강화
- ② 국제평화운동의 여성평화주의 관점 강화
- ③ 국제 평화운동의 국내화
 -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과 관계강화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④ 국내활동 국제화: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 ⑤ 국제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2. 사업평가

1) 2005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국제네트워크, GPAC 동북아위원회와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갈등예방을 위한 국제시민사회단체,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및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평화운동을 국내적으로 확산하였다.

2) GPAC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확산하고 한반도 핵문제,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역사교과서 문제, 평화교육 등 한국평화운동의 경험과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화 작업을 통해 국내평화운동을 국제화하려고 노력했다.

3)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세계사회포럼, 보스턴사회포럼 참가를 통해 한반도 전쟁 우려와 평화적 해결의 절박성 등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4) 이라크전쟁 반대 활동과 남북여성교류 등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성과를 세계사회포럼, 일본여성민대회, 베이징+10 아태지역 NGO포럼, 보스턴 사회포럼, 세계한민족여성독일네트워크 심포지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국제 회의의 참가 및 통천동기여성행동 활동 등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긍정적인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렸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 여성평화단체와 국제연대를 추구했다.

5) 국제연대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한 긴급대응에 몰두하였다. 평화여성회 내부에 국제연대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논의들이 부재하다. 평화여성회의 활동과 입장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6) 국제연대의 심화를 위해 각 센터 별이나 각 주체별로 국제연대의 폭을 확장해야 하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국제연대를 각 센터에 위임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간사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사업내용

1) 피스보트 탑승 및 평화관련 워크샵에서 발표

일시: 1월8일-16일

참가: 정경란

장소: 싱가포르에서 인도 봄바이까지 (피스보트 전상)

내용: 피스보트에 탑승한 세계사회포럼 참가자와 인사 및 향후 계획 논의, 피스보트 내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한 입장과 세계사회포럼에서 북한핵문제 워크샵을 준비하는 동아시아포럼 참가, 한국의 반전운동·기지촌 여성문제·미군기지 문제·북한핵문제 발표

2) 세계사회포럼

일시: 1월 16일-21일

참가: 정경란 (전체 7만 5천명, 한국 360명, 인도인 5만명)

장소: 인도 봄바이

내용:

- ㄱ. 1월 17일 피스보트 주최 “동아시아비핵화” 워크샵 논평자로 발표 (50명 참석)
- ㄴ. 1월 18일 피스보트 주최 “북한 다음 타겟인가” 워크샵에서 “한반도 핵위기와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70-80명 참석)
- ㄷ. 1월 19일 반전운동 국제회의 참가: 3월 20일 이라크 침공 1주년을 맞아 전세계 동시 행동 결정
- ㄹ. 1월 20일
 - ㄱ) 아시아평화연대 주최 “9.11이후 아시아에서 미군제거치와 여성”워크샵에서 유영렬(두레방 대표)와 함께 “미군기지와 여성, 남북여성교류” 주제발표(50-60명참석)

나) 여성 워크숍후 전략회의

- 참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미국, 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권 커크, 아시아평화연대 일본지부 히카루, 평화여성회 정경란, 인도 여성주의자
- 토론내용: 3월 20일 이라크 침공반대 공동행동에 여성 결합, 1월20일 워크숍의 주제발표문과 회의 보고서 정리 및 공유, 이메일리스트를 만들어 정보 교류.

다) 미군기지반대 국제회의 참가 : 웹사이트, 이메일 리스트, 각 국가별 담당자 정하고 3월 20일이후 반미군기지 공동행동의 날을 정해 동시행동을 하기로 결정.

ㄱ. 1월 21일 폐막행진 참석 2만3만명 참가

3)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GPPAC) 회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5년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동북아시아재단체로서 심영희 대표는 지역재단자로서, 정경란 국제연대위원장은 서울 포털포인트로서 활동하고 있다.

①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의 동북아시아대회

일시: 2월 5일-9일

참가: 이현숙, 정경란, 이재영, 일본(동경, 나고야), 한국, 러시아 극동지역(블라디보스톡), 중국(난징), 타이완(타이베이)에서 대표자와 유엔 NGO 담당자 등 참석

내용: GPPAC 과정 설명, GPPAC 동북아시아회의의 운영위원회 구성, 동북아 의제 논의, 동북아시아대회 (중국) 및 운영위원회 모임 (서울) 결정, 평화여성회 GPPAC 동북아 발의단체 참가 요청 받고 이를 추후에 답변하기로 하다. GPPAC 동북아시아 운영위원으로 이현숙, 정경란, 이재영이 활동하기로 함.

② GPPAC동북아시아 지역발의자 모임

<1차 모임>

일시: 5월 5일

장소: 일본 피스포트 사무실

참가: 정경란(한국), 요안나 스트래튼, 아키라 가와사키, 마리 구시부시(피스포트) 지니 마뉴론(홍콩 아시아평화연대-전화연결)

내용: 동북아시아 진행상황 점검, 동북아 지역행동의제관련 역할 분담, 아시아유럽 민간포럼에서 GPPAC 홍보 및 모임 논의

<2차모임>

일시: 8월11일

장소: 심영희 대표님 사무실

참가: 심영희, 정경란, 안은주, 마리 구사부찌(피스보트)

내용: 동북아 진행사항 공유

<3차 모임>

일시: 9월 7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 아시아유럽민간포럼 대회장

참가: 심영희, 정경란, 요안나 스트래튼(피스보트) 지니 마뉴론(아시아평화연대)

내용: 아시아유럽민간포럼에서 GPPAC 홍보 활동 및 동북아활동관련 논의

<4차 모임>

일시: 11월 18일

장소: 피스보트 사무실 및 유연대학

참가: 심영희, 요시오카, 키라 와타나베, 야키라 가와사키, 요안나 스트래튼, 조진혜(피스보트)

내용: 동북아지역회의 준비, 동북아행동외재 논의, 유연대학 방문 동북아지역대회 협조 요청

4) GPPAC 한국위원회 활동

① 회의

기획국회의:3월 4일, 25일

사무국회의:3월10일,15일,4월26,5월14일,7월22일, 8월19일

전체회의 : 4월 21일

② 한국위원회 발족식

일시 :4월8일 11시

장소: 느티나무 카페

참가: 이현숙, 정경란, 안은주, 최선희, 전은주, 김현희

내용: GPPAC 소개, 한국위원회 발족 경과, 발족선언문 발표

③ 워크샵

<1차 워크숍>

일시: 4월30일 오후 1시-5시

장소: 참여연대

참가: 정경란

내용: 참가단체 활동 공유 및 북한핵문제 현황 공유

<2차 워크숍>

일시: 8월27일(금) 2시

장소: 참여연대

참가: 심영희, 정경란, 안은주

내용: 문서작성 국제권고사항, 일본 및 동북아 진행사항 공유 및 한국 문서 논의

④ GPPAC 한국위원회 한반도평화구축 분과 모임

<1차 회의>

일시: 2004년 8월 14일 오후 2시~4시

장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참가: 정경란, 안은주

내용: 분과 코디네이터 선출 / 한반도평화구축분과의 활동계획에 관한 건

<2차 회의>

일시: 2004년 8월 30일 오후 2시~4시

장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참가: 정경란, 안은주

내용: 분과 case 선정에 대한 논의/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반도 보고서 적용 문제
논의/ 한반도평화구축분과 workshop 개최 건

<3차 회의>

일시: 2004년 9월 17일 오후 3시~6시

장소: 경실련 2층 소회의실

참가: 정경란, 안은주

내용: 동북아평화운동 현황 발표/보고서 명칭/보고서 방향/ 보고서 분량/역할분담

<4차 회의>

일시: 2004년 10월 22일 오후 3시~5시

장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참가: 정경란

내용: 활동 사례 집필 원의/ 활동 사례 집필 (역할 분담)

<5차 회의>

일시: 2004년 11월 25일 오후 2시~5시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참가: 정경란

내용: 분과 보고서 관련 토론

<6차 회의>

일시 : 2005년 1월 6일 오후 3시-5시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참가: 정경란

내용: 분과보고서 최종(안) 검토 및 수정

<보고서 작성>

남북여성교류(이현숙, 김숙임), 북한해문재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정경란)

⑤ GPPAC 동북아지역대회 준비모임

<1차모임>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일시: 2005년 1월 5일 2시

참가: 심영희, 정경란, 안정애

내용: 동북아지역대회 지역대회 행사 및 취지 설명, 참가자 역할 분담

<2차모임>

- 동북아지역대회 행동의제 검토모임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일시: 2005년 1월 11일 2시

참가: 심영희, 정경란

내용: 동북아지역 행동의제 검토

⑥ GPPAC 한국위원회 대표자 간담회

일시: 7월16일 오후 5시

장소: 환경재단 사무실

참가: 이현숙, 정경란, 박순성, 양영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열(환경운동연합),

이정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성용(유네스코 아태이해교육원)

내용: GPPAC 한국위원회 소속 단체장과 함께 GPPAC 경과 소개 및 GPPAC 동북아지역대회 관련 정부지원 요청관련 논의

⑦ GPPAC 동북아지역대회 개최 설명 정부관계자 면담

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면담

참석: 정경란, 안은주, 박성용, 이정희

나) 2차례 동북아시아대위원회와 면담

1차면담 참석: 정경란, 이재영,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과장

2차면담 참석: 정경란, 양미강(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문국현 유한김별리 사장, 정태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실장 외

⑧ 국제연대활동

가. GPPAC 한국위원회 이라크일본인 인질 석방 관련 설명서 전달 및 1인시위

- 4월12일 아시아평화연대-일본(Asia Peace Alliance-japan)에서 이라크에서 일본인 인질 석방 관련 설명서에 대응해 GPPAC한국위원회에 이라크일본인 인질 석방과 자위대 철수 설명서 작성 및 일본에 전달, 관련 보도자료와 제일발송.
- 일본대사관앞 이라크 인질 석방과 자위대 철수 1인시위(최선희, 안은주)

나. GPPAC 한국위원회 북한인권법안 반대 편지 발송 참여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루가에게 북한인권법안 반대 편지 발송

5) 한반도 평화관련 미국단체와 연대활동

①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단 관련 교류 모임

일시: 5월31일(월)오후 6시

장소: 인사동 지리산

참석: 정경란, 안은주, 정현택, 박순성, 박진영, 박정은, James Relly

내용: 미국친우봉사회 동아시아 담당자 제임스 레일리과 함께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단 활동 평가 및 2차방미단 관련 의견 교환

② 보스턴 사회포럼

일시: 7월 23- 25일

장소: 미국 보스턴 데사추대학

참가: 정경란

내용: 보스턴사회포럼기간 중 “세계는 전쟁을 반대한다” 토론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전쟁의 위험과 평화를 향한 희망”, “미군기지”, “민주주의” 등 워크샵, 전체총회에서 연설, 이라크파병국민행동이 미국시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달

③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집회

일시: 7월 26일-29일

장소: 보스턴 시내 일대

참가: 정경란

내용: 7월 27일 강연회 “과뉴엘홀에서 국가적 위기와 세계적 위기에 대해 던지고 이야기 하다”에서 한반도평화 강연, 7월 29일 민주당전당대회 앞 집회에서 연설

④ “재미한인공개토론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담”에서 발표

일시: 10월 7일 7시

장소: 미국 오슬랜드 박물관

참석: 정경란

내용: “재미한인공개토론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담” 참석 및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 2회, 미국친우봉사회 샌프란시스코지부에서 평화활동가와 간담회, 비폭력평화세력 창립제안자 데이빗 하소 사무실 방문,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미국 대표 마고 오카자와 레이와 간담회

6) 일본 관련 활동

① 일본평화헌법수호집회(정경란)

일시: 5월 4일-5일

장소: 동경 히비야 야외음악당 외

참가: 정경란

내용: 2004년 일본평화헌법 호헌집회에서 연설 및 평화행진 참석,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 일본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2004 일본평화헌법 호헌집회’실행위원회와 간담회, 부녀통신과 인터뷰

② 일본 평화박물관 방문

일시: 6월 19일-26일

장소: 일본 오오사카, 후쿠야마, 히로시마, 가와사키시

참가: 김숙임

내용: 한국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일본 각지에 있는 평화박물관 방문

③ 일본 어머니대회와 신일본여성회 동경지부 토론회 참가

일시: 8월21-23일

장소: 일본 동경 국제전시센터 외

참가자: 정경란

내용: 일본어머니대회 “핵무기와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심포지엄과 신일본여성회 동경지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일본여성평화기금 간부와 간담회

③ 일본 나고야시 중구 어머니회 연학회 회원과 교류모임

일시: 10월 25일 6시

장소: 대원정

참가: 김숙임, 심영희, 최선희, 정경란

내용: 나고야시 중구 어머니회 14명 회원과 일본여성의 평화활동과 남북여성교류 활동 공유 및 연대 지속 논의

7)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국제연대팀 활동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성명서 및 연대사 작성과 평화단체와 여성단체에 배포(정경란)

6월21일 호소문 작성/ 6월25일 성명서 작성/ 7월 10일 필리핀인결석방 연대사작성

8)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국제 회의

① 국제회의 준비모임

7월 16일, 8월 19일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필리핀대회준비)-김엘리, 안은주

② 국제회의 참석

일시: 11월 21-28일

장소: 필리핀

참가: 김엘리, 안정애

내용: “인간안보와 개발”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의 참석 및 한국 상황 발표

9) 제4차 아시아유럽민간포럼

일시: 9월 5일-11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

참가: 심영희, 정경란

내용: 아시아유럽민간포럼과 아시아평화연대 모임 참가, GPAC관련 발표(심영희)

10) 베이징+10 아태지역 NGO포럼

일시: 6월 29일-7월 5일

장소: 태국 방콕 마히플 대학교

참가: 안정애

내용: Beijing 세계여성대회이후 성과와 당면한 여성문제, 세계화와 전쟁, 아태지역 NGO보고서 의견 수렴

11) 남북해외여성의 만남 심포지엄-한반도평화교육과 여성

일시: 9월 30일-10월 11일

장소: 독일

참가: 김숙임

내용: 세계한민족여성독일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평화교육과 남북여성교류'를 발표하고 예버트재단, 평화를 위한 독일여성네트워크 등 방문

12) 노벨평화상 1000인 추천 활동

노벨평화상 1000인 추천캠페인의 아시아지역 담당자인 마고 오키자와 레이가 정경란 국제연대위원장이후 후보 추천을 의뢰해 와 평화여성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4인을 추천

13) 기타 국제연대

-5월 7일 이라크시민활동가 본화 방문-최선희, 전은주, 김현희, 안은주

-6월2일 하얏트호텔 윌프(WILPF) 워싱턴 지부 대표 Gillian Gillhool과 면담-정경란

-6월3일 오전 11시 윌프 워싱턴 D.C 지부 대표:Gillian Gillhool 본화 방문-심영희, 안은주, 최선희

-6월1일 평화교육자:Hillel Levine :보스턴대 종교사회학과교수와 간담회-김정수, 최선희, 전은주, 안은주

-8월20일 peace boat GPPAC 실무자(리카와타나베) 사무실 방문

-12월 17일 Adam Miles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사무실 방문-정경란, 전은주, 김현희

-12월 20일 동북아시아청년평화포럼 참가자 본화 방문-정경란, 최선희

14) 기타

-3.30 "대량살상무기비확산결의안" 초안 반대서원발송(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부장관, 안보리5개국주한대사), 외통부 답변 받음

- 2차 6자회담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명문 배포

- 4.2 북핵,6자회담관련 이수혁차관보 간담회(이현숙, 정경란)

-존 프라이스 캐나다 빅토리아대 교수 강연: 2006년쿠버평화포럼 (안은주)

- 4.23 반부시대트워 간담회(안은주)
- “통천”사고 국제연대 호소문 작성 (안은주)
- 5.20-24 동북아역사교과서연대회의 국제회의 (정경란, 김숙임, 김현희)
- 5.15 아시아평화연대 이라크관련 성명서(번역)
- 5.18 파병반대국민회의 국제연대위 모임 (정경란, 안은주, 양명미)
- 5.18 비국천우봉사회 전 동아시아책임자 존재폐와 간담회 (정경란)
- 5월 22-6.3 이집현숙 캐나다 방문
-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행사(영문번역)
- 5.30 파병반대국민행동 국제연대 리포트(정경란)
- 영문 리플렛 작성 (안은주, 이현숙)
- 7.5 미국 박물관 관계자 lara lee, George Gund 본회 방문 (정경란, 안은주)

2-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김윤옥

이 사: 심영희, 강남식, 김은실, 김현미, 안진, 양현아, 이소희, 이정옥, 정진성
원 장: 심영희

연구원: 김열리, 김정수, 박현선, 안정애, 윤덕희, 윤여령, 이선미, 이숙인,
이유미, 이화진, 임운택, 정진희, 최기자, 홍천숙, 황은주, 정경란

1. 사업방향

국내 여성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 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2. 사업목표

- 1) 여성 평화, 통일 운동의 이론 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 전개
- 2) 여성과 평화 4호의 발행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진행 (3월부터 격주로)
- 4)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풀 구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 이사진 연구원진 새로 구성

5) 여성 평화운동의 매뉴얼 개발

3. 사업내용

- 1)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세미나 개최 (3월부터 격주로)—별첨#1 일정 참조
- 2) 여성과 평화 4호 기획 편집 발간(12월 말, 2005 1월 초 발간예정)—별첨#2 참조
- 3)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프로젝트 기획, 사업신청, 사업지원신청(1300만원)—별첨#3 참조
- 4) 제2여성학대회 세션 구성 및 참여 기획—별첨#4 참조
- 5) 연구원 이사진, 연구원 진 새로이 구성—별첨#5 참조

4. 사업평가

- 1) 연구원 위장(심영희)의 새로운 취임과 함께 연구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의 이사 및 연구진을 연구원에 걸맞게 새로이 구성하였다.
- 2) 또한 연구원들의 공동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목요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연구원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3) 또한 숙원사업이던 '한국여성평화운동사'를 위한 기획을 통한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중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4) 여성과 평화 4호도 기획 편집을 통해 곧 발간 예정이다.
- 5) 아쉬운 점은 담당 실무자의 피사로 실무활동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별첨 #1. 목요평화세미나 일정 보고

3/10(수) 오후3시 1차 평화세미나 텍스트 선정, 발제자 선정, 참석자: 심영희, 임운택, 이선미, 김정수, 최기자

3/18 목 오후 6시 Peterson 1992 Gendered States 발제: 임운택, 참석자: 심영희, 안경애, 이선미, 안은주, 이화진, 최기자, 임운택

3/25(목) 오후6시 2차 평화세미나 여성과 국제정치, 발제: 최기자 참석자: 심영희, 임운택, 안경애, 이선미, 정경란, 최기자, 이화진, 이선미, 최기자

4/08(목) 오후6시 3차 평화세미나 여성과 국제정치, 발제: 이화진 참석자: 심영희, 안경애, 이선미, 최기자, 이화진, 안은주

text :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앤티크네

4/22(목) 오후6시 4차 평화세미나 발제: 심영희

text : Spike Peterson / 장소: 한양대 사회과학대 5층 여성연구소

5/06(목) 오후6시 5차 평화세미나,

내용: Peterson ch.2,5 / 발제자: 정경란(2장), 이선미 (5장)

text : Spike Peterson

5/27(목) 6차 평화세미나 발제자: 안정애 (3장)

Peterson

발제자: 임운택 신국제질서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문발표)

6/03(목) 오후 6시 7차 평화세미나

장소: 한양대 사회대 5층 여성연구소 / 내용: Spike Peterson ch. 7

발제자: 안정애 (7장)

6/24(목) 오후 6시 8차 평화세미나 발제자: 정경란

V Spike Peterson : Gendered States 6장

7/01(목) 9차 평화세미나 - 전문가포럼으로 대체

7/21(수) 10차 평화세미나 발제: 임운택 (4장)

text : Spike Peterson 4장 장소: 한양대 사회과학대 5층 여성연구소

8/11(수) 11차 평화세미나 발제: 심영희 Peterson (8장)

8/25(수) 편집 및 기획회의 (자료 별첨)

9/8(수) 평화세미나 발제: 이선미 Yuval-Davis ch. 6

9/22 평화세미나 발제: 이화진 Endoe ch. 8

10/13(수) 12차 평화세미나, 발제: 임운택, 한양대 여성연구소

Baker and Gill 2003 chapter 1

10/27 (수 1) 평화세미나 발제: 정경란 (5장) 이선미 (4장)

Baker and Gill 2003 chapter 4,5

11/10(수) 평화세미나 발제: 안정애 (Taylor), 이화진 (Gill)

Vivienne Taylor, Political Restructring and Social Transformation: Feminist Perspectives Gill, 7장 Globalization, Market Civiliz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별첨 #2. 여성과 평화 4호 기획 및 편집회의

4/8(목) [여성과 평화] 편집 간담

6/24(목) 오후6시, <여성과평화 편집,프로젝트 기획회의>

1)2004년 [여성과 평화] 4호 제 1차 편집회의

2) 프로젝트 기획회의(여성평화운동사)

8/25(수) 편집회의

<여성과평화 편집>:내용-별첨참고

편집 준비

여성과 평화 원고 청탁시작, 11/15(월)까지-심영희, 안정애 검토

10/6(수) 여성과평화 원고받기

■ 별첨

1.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차 편집 및 기획회의

날짜: 2004. 6. 24(목) 오후 6시

장소: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층 여성연구소(린던샷포르)

참석자: 심영희, 안정애, 정경란,이화진,이선미,최기자,김정수

(불참통고자) 박현선, 윤덕희, 윤여량, 김정인, 김엘리, 임운택

매식 안은주 감사

1) 회의안건

① 여성과평화 4호 편집기획

② 프로젝트 관련기획(여성과 평화운동사)

③ 가을 심포지움 계획

④ 2005년 6월 개최예정 세계 여성학대회 Session참가관련(2004년 8월까지신청완료)

⑤ UN 갈등예방방지 국제회의-세미나 혹은 심포지움

2) 회의 결과

① 여성과평화 4호 편집기획

<특집주제>

○ 세계화와 여성안보

-여성과 안보(심영희)

-국가와 여성(이선미)

- 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임운택)
- 폭력과 평화 (신진옥)
- 여성안보 관련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소개 (정정란)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에 관해- 김은실
- *[이주 결혼]에 관한 심층 면접 또는 [이주 노동자]-안진
- <여성 평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 군사주의와 여성(김엘리)
 - *이정옥 - "war and peace and militarism"
 - 아시아 각국 필자의 기고문-번역물
 - 아프칸 여성들이 바라보는 전쟁(인터뷰)
- <민족공동행사-통일운동관련>
 - 남북여성교류 참가기(김숙임)
- <일상의 평화>
 - 용서와 화해(김정수)
- <기타 주제>
 - 소록도 여성 한센병 환자 인터뷰 관련(최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이남석)
 - 국방감독관(안정애)
 - 소셜[종군위안부]:노라옥자 켈러 / 작품분석, 비평-*이소희

② 프로젝트 관련기획(여성과 평화운동사)

<한국여성평화운동사 기획안>

가) 서론 : 총론

- 여성평화운동에의 접근: 이론,분석틀,방법론(분석틀: 조직,담론,리더십,참여동기 등)
- 서구 여성평화운동사 :비교 연구를 위한 사례연구(강선미 1989, 1990 자료 참고)
-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나) 한반도 평화운동

- 통일관련 :남북여성교류(김숙임)
- 국방관련 :군비축소, 무기도입반대(안정애)
- 북핵관련 : 한반도국민평화협의회(이현숙)

다) 국제평화운동

- 평화운동의 국제연대 (이라크파병반대, 갈등분쟁예방, 북핵관련, 아시아평화연대)
- (정정란)
- 군사주의 반대 여성네트워크(김엘리)

라) 일상의 평화운동

- 갈등해결중재운동(박수선)
- 평화교육, 평화문화화산운동
- 평화심성훈련(김정수)

마) 기타 교회여성평화운동 (기생관광 반대운동)

③ 가을심포지움 계획

주제 : 세계화와 여성안보

발제자: 3인, 토론자:2인

※ 8월에 점검회의를 거쳐 8월에 결정하기로 함

④ 2005년 6월 개최예정 세계 여성학대회 Session참가관련

- 2004년 8월 까지 신청완료
- 최기자: 정대협화생자기록-국내세션 참가여부

⑤ UN 갈등예방방지 국제회의-세미나, 심포

-갈등예방방지 한국위원회와 조율해 본 다음 결정

■ 별첨: 프로젝트 관련<김델라정책위원 안>

1) 편집방향

-80년대 이후 여성평화운동 자료를 한 곳에 정리해서 모은다.

-젠더의 관점을 살린 여성평화운동론을 정립해 보는 계기 : 여성평화운동이 무엇인가?

-여성평화운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2) 내용

-여성평화운동론 : 말그대로 운동론을 서술하는 글

가) 여성이 왜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는가? 이론적 근거

나) 여성평화운동의 논쟁점들: 모성, 여성, 정체성, 안보나 젠더나, 폭력의 정당성의 범위 등

다) 운동의 관점의 문제: 국가, 통일, 민족주의, 급리별 시민, 젠더 등

-각 주제별 운동 내용과 성과, 한계

-> 이슈별

가) 군축 운동: 방위비삭감운동, 무기반대, 국방정책 등

- 나) 전쟁반대 운동: 반전하는 어머니모임, 반전평화행동, 이라크반전평화팀 등
- 다) 통일운동: 북한돕기, '아세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남북여성교류 등
- 라) 평화교육과 일상평화문화운동: 평화교육프로그램, 갈등해결, 청소년문화프로그램 등
- 마) 국제연대운동
- ==> 여성와 삶
- 바) 기지촌여성
- 사) 군위안부여성
- 아) 탈북여성
- 자) 성적소수자와 장애인의 평화운동

■ 별첨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2차 편집 및 기획회의

날짜: 2004. 8. 25(수) 오후6 시

장소: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참석자: 심영희, 김엘리, 안정애, 이선미, 임운택, 안은주

불참통보: 이화진, 최기자, 김정수, 정경란

1) 회의안건

- ① 여성과 평화 4호 2차 편집기획
- ② 프로젝트 관련기획(여성과 평화운동사)
- ③ 가을 심포지움 계획
- ④ 2005년 6월 개최예정 세계 여성학대회 Session참가관련
- ⑤ UN 갈등예방방지 국제회의-세미나 혹은 심포지움

2) 회의 결과

<여성과평화 4호 편집회의>

I 특집 세계화와 여성안보

- 여성과 안보(심영희)
- 국가와 여성(이선미)
- 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임운택)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에 관해- 김은실
- [이주 결혼]에 관한 심층 면접 또는 [이주 노동자]-안진

II 시사와 조점

- 민족공동행사(통일운동관련)
- 제2와 남북여성통일대회협상을 주도하는 [김숙임] 대표 :인터뷰형식
- 남북여성교류 참관기(실무자 혹은 참관회원)
- 파병 반대운동(최선희,전은주)
- 양심적 병역거부
- 여성안보 관련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소개(정정란)

III 평화교육-평화운동

- 용서와 화해(김정수): 분노와 좌절을 넘어 생명과 평화로
- 심성훈련프로그램 소개
- 평화운동의 대중화-평화운동이 대중화가 안 되는 원인, 딜레마, 희망-사례, 분석
통해(김현희)

IV 연구논단

- 소록도 여성 한센병 환자 인터뷰 관련(최기자)
- 국방감독관(안정애)
- 소설[종군위안부]: 노라옥자 켈러 : 작품분석, 비평-이사회

V 여성 평화운동의 성격과 전망

- 모성, 민족주의와 평화(김영리)
- 이정옥 - "war and peace and militarism"
- 아시아 각국 필자의 기고문-번역문
- 아프리카 여성들이 바라보는 전쟁(인터뷰)

<프로젝트 기획회-여성과 평화운동사>

※ 기본 큰 틀을 오늘 회의에서 공유한 후 김영리 정책위원이 맡아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하여 연구원세미나 팀과는 다른 독립적인 [기획팀] 혹은 필자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서론 : 총론

- 여성평화운동론 (평화운동의 관점들-전개-변화-감동과 경험 등 포함)
- 80년대 이후 여성평화운동 자료정리

- 센터의 관점을 살린 여성평화운동론을 경험해 보는 시기 : 여성평화운동이 무엇인가?

- 여성평화운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가) 여성이 왜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는가? 이론적 근거

나) 여성평화운동의 논쟁점들: 모성, 여성, 정체성, 안보나 젠더나, 폭력의 정당성의 범위 등

다) 운동의 관점의 문제: 국가, 통일, 민족주의, 글로벌 시민, 젠더 등

2) 주제별 운동 내용과 성과, 한계(주제별 범주의 근거와 정당성, 서술 방법 등은 다 논의)

가) 군축 운동: 방위비삭감운동, 무기반대, 국방정책

나) 전쟁반대 운동: 반전하는 어머니모임, 반전평화행동, 이라크 반전평화팀 등

다) 통일운동: 북한돕기, 아세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남북여성교류 등

라) 평화교육과 일상평화문화운동: 평화교육프로그램, 갈등해결, 청소년문화프로그램 등

마) 국제연대운동

3) 이슈별 (주제별에 서 빠져있는 여성의 삶에서 -평화와 인권 문제의 연계 등)

- 기지춘여성

- 군위안부여성

<가을 심포지움 제화>

시간제약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제는 하지 않는 걸로 한다.

<2005년 6월 개최예정 세계 여성학대회 Session참가 관련 >

2003년 8월 까지 신청완료)

참가: 심영희, 안정애, 김연리 :주제는 추후 논의하여 다시 정하여 등록한다.

<UN 갈등예방방지 국제회의-세미나 ,심포> 하지 않는 걸로 한다.

별첨 #3.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프로젝트 기획회의

6/24(목) 1차 프로젝트 회의

8/25(수) 2차 프로젝트 기획회의 - 9월말까지 프로젝트 제출

기획팀과 논의후 9월30일까지 제출
9/24(금) 여성과평화운동사 프로젝트 제출
12/6(월) 여성재단 프로젝트 확정(1,300만원)

별첨 #4. 세계여성학대회 세션 구성 및 참여 기획
제 9차 세계여성학대회
일시: 2005년 6월 19-21일
장소: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

별첨 #5. 연구원 이사회, 연구진등 조직 새로이 구성
이사회: 4/30(금) 오후6시 연구원 이사회 개최(용수산)

기타

- 연구원 리플렛 가안 완성

3. 사업별 활동일지

○ 총회

1/9(금) 8차 정기총회

○ 이사회

1/8(목) 11차 이사회

4/29(목) 12차 이사회

10/18(월) 13차 이사회

○ 운영위원회

1/27(화) 1차 운영위원회

2/24(화) 2차 운영위원회

4/27(화) 3차 운영위원회

6/1 (화) 4차 운영위원회

7/19(월) 5차 운영위원회

8/31(화) 6차 운영위원회

11/8(월) 7차 운영위원회

○ 총회준비위원회

12/9 (목) 1차 총준위

12/23(목) 2차 총준위

1/5 (수) 3차 총준위

사무처회의

1/12(월) 1차 사무처회의

1/26(월) 2차 사무처회의

2/2 (월) 3차 사무처회의

2/12(목) 4차 사무처회의

2/16(월) 5차 사무처회의

2/24(화) 6차 사무처회의

3/8 (월) 7차 사무처회의

3/23(화) 8차 사무처회의

3/30(화) 9차 사무처회의

4/13(화) 10차 사무처회의

4/20(화)	11차 사무처회의
4/27(화)	12차 사무처회의
5/11(화)	13차 사무처회의
5/18(화)	14차 사무처회의
5/25(화)	15차 사무처회의
6/30(수)	17차 사무처회의
7/13(화)	18차 사무처회의
7/19(월)	19차 사무처회의
8/3(화)	20차 사무처회의
8/12(목)	21차 사무처회의
8/18(수)	22차 사무처회의
8/23(월)	23차 사무처회의
8/31(화)	24차 사무처회의
9/7(화)	25차 사무처회의
9/15(수)	26차 사무처회의
9/23(목)	27차 사무처회의
10/4(월)	28차 사무처회의
10/11(월)	29차 사무처회의
10/25(월)	30차 사무처회의
11/1 (월)	31차 사무처회의
11/17(수)	32차 사무처회의
11/30(화)	33차 사무처회의
12/13(월)	35차 사무처회의
12/27(월)	36차 사무처회의
1/3 (월)	37차 사무처회의
1/10 (월)	38차 사무처회의

○ 내부회의 및 교육

1/5(월)	2003년 사업, 회계감사
1/16(금)	일일호프(세실)
2/10(화)	일상명화센터 프로젝트 기획회의
2/10(화)	최지기획팀 평가회의
2/11(수)	한반도핵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
2/4(수)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2/12(목) 한반도 평화센터 통일과제팀, 국방과제팀회의
 2/18(수) 신입간사 오리엔테이션
 2/20-22 갈등해결트레이닝
 2/28(토) 회원한마당 장소답사 - 가평 가라제
 3/2(화)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2차회의
 3/3(수) 평화심성프로젝트회의
 3/5(금) 실무자 면접
 3/15(월) 여성부 프로젝트수정안 제출
 4/7(수) 연구원김윤옥이사장 오찬간담회
 4/10(토) 회원산행의날 (도봉산)
 4/14(수) 홍보대사 이정현 매니저와 점심
 4/17(토) 김순영이사 아들 결혼식 참석
 4/21(수) 내부반전팀회의
 4/23(금) 신입회원참여의날
 4/30(금) 연구원 이사회
 4/30(금) 프로젝트 제출 (마사회)
 5/7(금) 이라크인(이스라엘,감도혜) 본회사무실방문
 5/12(수) 김준묵이사 면담(후원회 관련)
 5/12(수) 조용한번호사 면담(후원회관련)
 5/15(토) 회원참여의날 북한산 산행
 5/20(목) 회원사업팀 회의
 6/8 (화)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6/23(수) 한미동맹과 미군재배치관련 내부워크샷
 6/24(목) 연구원회의
 7/9(금) 회원한마당 달사 설악산, 속초
 7/1 (목) 전문가포럼- 국가인위원회
 7/8 (목) 분노와 좌절을 넘어 생명과 평화로 토론회개회
 7/16(금)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7/23-25 회원한마당 (강원도 추양하우스)
 8/1-8/27 하와이 연수(김현희)
 8/3(화) 박순성이사 환송식
 8/9(월) 평화심성팀회의
 8/18(수) 이김현숙 전 상임대표 축하연
 8/24(화)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8/28(토) 갈등위원회 및 강초(청산교육장),

- 9/2(목) 이대리더쉽개발원 입학식
 9/8(수) 연구원 세미나 참석
 9/9-9/11 갈등해결센터 시민단체 워크샵(전주)
 9/14(화) 회지기획팀 회의
 9/14(화) 여성평화운동영상물기획회의
 9/15(수) 강남중학교 시민단체 방문수업(사무처, 갈등해결센터)
 9/21(화) 여성평화운동이야기1- 세계여성평화운동과 함께하기
 “최전선의 여인들” 영상물 감상과 이야기나눔
 9/22(수) 갈등월례회의
 9/30(목) 여성재단 프로젝트 마감 (국제연대위원회)
 10/2(토) 전문가포럼 준비 모임
 10/5(화) 일상평화센터 강좌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제 1강 시작
 10/12(화) 일상평화센터 강좌
 10/13(수)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10/19(화) 일상평화센터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제 3강의
 10/20(수) 여성재단최종보고서 제출
 10/21(목) 평화원탁포럼 준비회의
 10/23(토) ‘회원만남의 날’남이섬으로 평화의나들이
 10/26(화) 일상평화센터 4차 강의
 10/27(수) 연구원세미나
 10/27(수) 김지영 이사와 인터뷰- 회지발간 편면
 10/27(수) 여성과 평화 발간모임
 11/2 (화) 전문가 포럼 - 전쟁을 기억하는 여성들-
 11/10(수) 7차 갈등운영위원회
 12/3(금) 후원의밤 개최
 12/8(수) 여성평화영상물제작을 위한 수다회의
 12/16(목) 회원참여센터 회원사업팀 회의
 12/31(금) 마사회 프로젝트 제출

○ 외부회의 및 행사참여

- 1/8(목) 맑은정치네트워크
 1/8(목) 여성의 전화 총회참석
 1/27(화) 여성재단 프로젝트 워크샵
 1/29(목) 통일교육협의회 제 5차 정기총회 참석
 2/3(화) 민주노총 위원장 출범식 참여

- 2/4(수) 민족화해상 수상자 오찬(민화협, 현대아산, 평너)
 2/4(수) 여성부 통일사업관계자 간담회
 2/13-15 한국사회포럼
 2/19(목) 광화문포럼
 2/23(월) 노무현정부 1년 여성정책평가 평화통일분야발제(김숙임)
 2/25(수)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평가 워크숍
 3/2(화) 3.8여성대회 주간 캠페인 실시
 3/11(목) 민주노총 여성단체장 간담회
 3/24(수) 평화로합- 연대 간호대 재플강의
 3/25(목) 고양시 통일자문회의
 3/29(월) 통일부정책자문회의
 3/31(수) 통일부 여성단체 초청포럼
 4/ 1(목) 통일교육협의회 의장단회의, 이사회
 4/2 (금) '끝나지않은 시대의 노래'전순옥 출판기념회 참석
 4/8-9 대통령직속통일정책고문회의
 4/20(화)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여성부 간담회
 4/22(목) 광화문포럼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4/23(금) 부시낙선운동 국내네트워크 간담회
 5/4(화) 북경여성회의 채택강령 여성정책 정부이행평가 준비간담회
 5/17(월) 5.24기자회견관련회의
 5/19(수) 통일교육협의회 여성위원회
 5/29(토) 고 이우정이사장 추모식
 6/1 (화) 한국여성정책 10년을 돌아보며 토론회
 6/11(금) 여성환경연대 후원회 밤
 8/13(금) 차별철폐 전개대행진 참여과제를 위한 논의
 8/17(월) 시민사회단체회의(국보법철폐, 이라크파병하반기활동, 과거사정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논의)
 7/19(월) 영화 화씨911 단체관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7/20(화) 광화문 통일포럼
 7/30(금)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7/30(금) 이라크평화네트워크 out bush cafe 참석
 8/19(목) 여신협- 평화를 위한 예비 참석
 8/27(금) 광화문통일포럼(헤리티지재단)
 8/28(토)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후원의 밤
 9/1(수) 17대 국회여성위원회 여성단체대표간담회 참석

- 9/8(수) 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 9/9(목) 선혜수 유연차별철폐위원회 축하연
- 9/9(목) 아시아재단 한국책임자 이취임식
- 9/10(금)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후원의밤
- 9/11(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구소 개소식
- 9/11(토) 석량주권확보를위한 범국민대회
- 9/12(일) 국가인권기구대회 NGO포럼
- 9/13(월) 국회여성위원회 모니터
- 9/13(월) 여성운동의 전망 모색-영제미니스트와 함께
- 9/17(금) 환경을동연합 후원의밤
- 9/18(토) 평통사 일일주점
- 10/3(일) 대한민국여성축제
- 10/4(월) 통일교육협의회 여성학교 준비모임
- 10/5(화) 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회
- 10/5(화) 통일교육협의회 여성통일학교
- 10/13(수) 통일부혁신위원회 회의
- 10/14(목) 녹색연합 후원의밤
- 10/29(금) "아시아 여성과 평화"여성학회 학술세미나
- 10/29(금) '노동인권회관' 후원의 밤 참석
- 11/5-6일 한겨레문화재단 통일포럼 참석
- 11/15(월) 환경단체비상시국회의 농성장 방문
- 11/16(화) 여성과 평화 강의 -교육문화복지연구원
- 11/17(수) 대인지뢰실행위원회
- 11/18(목) 이우정평화상 집행위원회
- 12/6(월) 한국여성재단 창립식
- 12/10(금) 우리겨레 땀공장 건립위 창립식
- 12/20(월) 광화문 통일포럼
- 12/27(월) 이우정평화상 운영위원회

○ 언론홍보활동

- 1/6(화) 시사뉴스 인터뷰
- 1/7(수) 통일정보신문 인터뷰
- 9/1(수) 평화박물관 관련CBS인터뷰
- 9/1(수) 여성신문인터뷰 및 기고
- 9/10(금) CBS 시사자키-9.11테러이후 세상은 더 안전해졌는가-

- 10/21(목) 우연타임즈 좌담회
 11/11(목) 시민방송"하승창의 아름다운세상"평화여성회 소개

○ 연대활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

- 1/6 (화) 한국여성단체연합총회
 2/6 (금) 여연평통위
 2/16 (월) 여연정책회의
 2/17 (화) 여연 3.8여성대회 준비회의
 2/20(금) 사무국장연석회의
 4/22(목) 여연사무국장 연석회의
 5/13(목) 여연이사회
 6/24 (목) 여연사무국장연석회의
 6/25(금) 여연후원의밤
 8/24(화) 여연 임원회의
 8/25-28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수련회
 9/16-17 여성단체연합 대표자수련회
 9/22(수) 사무국장연석회의
 10/14-16 여연 여성운동정책토론회, 여연임원회의
 11/5 (금) 여연 통평위 토론회
 11/11(목) 여연이사회
 12/2 (목) 여연 송년의 밤 참석
 12/10(금) 통평위관련 논의(여연 조직국장)

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2/26(목) 민화협 여성위원회 회의
 5/28(금) 민화협 여성위원회
 6/30(수) 민화협 대의원회의
 8/3(화) 민화협 여성위원회
 8/11(수) 민화협, 종단 회의
 8/14(토) 민화협 평화음악회
 8/24(화) 민화협 여성위원회 임시회의
 10/25(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 초청강연 참석 민화협
 12/22(수) 민화협후원의 날

3) 평화단체 연대활동

- 2/2(월) 평화운동진영의 총선대응전략회의
- 2/11(수) 평화진영총선전략
- 3/26-27 평화단체 워크샵
- 4/17(토) 평화박물관 - 일본평화박물관 참관 보고회
- 4/30(금) 평화포럼
- 5/14(금) 평화박물관 임시총회
- 8/20(금) 일본 평화박물관 시사회 - 평화박물관
- 10/6(수) 평화단체워크숍 준비회의
- 10/9 (토) 마이클버그 초청강연회 참석
- 10/12(화) 평화단체 워크숍 준비회의
- 10/19(화) 평화단체워크숍을 위한 준비회의
- 10/26(화) 평화단체워크숍 3차 준비회의
- 11/2 (화) 평화단체워크숍 준비회의
- 11/16(화) 평화단체워크숍준비회의
- 11/19-20 평화단체워크숍 참가
- 12/20(월) 평화단체 간담회

4) 평화군축관련활동

- 2/12(목) 용산기지이전비용 전면재협상 요구 기자회견
- 2/23(월) 6자회담관련 민간단체기자회견
- 3/23(화) 북핵위기 본질과 각 NGO 활동 정책토론회
- 5/29.30 아시아민중과 함께하는 평화페스티벌 총을내려라 평화캠프
- 5/31(월) 주한미군재배치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 5/18(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을 위한 단체 간담회
- 7/14(수) 군축준비모임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7/31(토) (가칭)평화와 통일로 가는 해방60주년 맞이 시민사회와 선언제안 회의
- 8/15(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광복 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9/10(금) 한국형다목적행기사업'전면재검토촉구기자회견
- 9/14(화) MD공대위 회의
- 9/24(금) 국방예산삭감과 복지예산확대를 위한 연대 기자회견
- 10/13(수) 개성공단 전략물자반입을 위한 기자회견
- 12/10(금) 63차 반미연대집회 -과병관련 보고발언요청

5) 통일관련 활동

- 3/8-3/13 실무회담
- 4/20(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 4/21(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 4/14(수) 여연,평화여성회 남북여성교류 회의
- 5/4-6 남북여성교류실무회담
- 7/30(금) 통일부장관 면담 -2004남북여성행사관련
- 7/30(금) 여성부장관 면담 -2004남북여성행사관련
- 7/30(금)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회의
- 6/15(화) 6.15공동선언 4주년 국제기념토론회
- 6/14- 17 우리민족대회 (인천) 참여
- 6/25(금) 2004 남북여성통일행사 회의
- 7/24-26 남북여성통일행사 실무회담
- 8/6(금) 민화협, 여연, 평여 간담회
- 11/23-25 남북실무회담참가(금강산)
- 8/9(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회의
- 11/3 (수) 광복/분단 60년 민족행사 준비모임
- 11/17(수) 광복60년 남북행사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 12/28(화)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의공동행사추진위원회 기획단회의
- 8/20(금) 남북교류에 있어서 여성의제 개발 및 법개정을 위한 회의
- 8/24(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회의
- 9/2(목)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의제 및 정책제안 여성부간담회
- 9/7(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토론회
- 12/15(수) 개성공단 첫 제품출시 기념식 참석
- 4/26(월) 통천등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 4/26(월) 통천등기 구호물자 인선항 출발식
- 4/29(목) 북녘 통천에 새희망을위한 여성발대식

6) 전쟁반대여성행동

- 2/3(화) 과병동의안저지를 위한 여성행동의날 기획회의
- 2/5(목) 이라크과병동의안저지를 위한 여성행동의날
- 5/12(수) 미영국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전쟁범죄규탄 여성단체기자회견
- 5/24(월)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과병반대 여성의원, 여성계 선언 및 퍼포먼스

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27(금) 시민단체연대회의 총회
- 6/24-2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관리 워크샵
- 7/22(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회
- 10/7-9 시민운동가대회
- 11/15(월) 시민단체연대회의 회계실무교육참가

8) 여성평화의집 이사회

- 1/28(수)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
- 2/26(목) 여성평화의 집 정기 1차 이사회
- 6/10(목) 여성평화의 집 기금마련 회의
- 7/13(화) 여성평화의집 정기 2차 이사회
- 8/31(금) 여성평화의 집 이전을 위한 제 1차 임시이사회
- 9/3 (금) 여성평화의 집 이전을 위한 제 2차 임시이사회
- 9/9 (목) 여성평화의 집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 9/10(금) 여성평화의 집 이전을 위한 제3차 임시이사회
- 12/9(목) 여성평화의 집 이전을 위한 제4차 임시이사회
- 12/15(수) 여성평화의 집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소유권 이전 등기

9) 정대협

- 2/5 (목) 정대협- 정책협의회
- 2/27(금) 정대협총회
- 2/16(월) 이승연정신대노동규탄집회, 대책회의 참가
- 3/17(수) 정대협 600회 시위 참석
- 11/17(수) 정대협 632차 시위 개최
- 8/14(토) 정대협 평화마당

10) 탄핵무효국민행동

- 3/12(금) 탄핵통과 규탄대회 참여
- 3/13(토)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단체 비상시국회의
탄핵무효부패정기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등 촛불집회 참가
- 3/14(일) 탄핵무효 국민행동 실무자회의 및 촛불집회 참가
- 3/15(월) 탄핵무효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참가
- 3/19(금) 여성단체연합주관 촛불집회 참석 - 개사곡발표 탄핵무효 100만인대회
- 3/22(월) 탄핵무효 집행위원회 참석
- 3/23(화) 탄핵무효 국민행동 기자회견

- 3/16(화) 탄핵무효국민행동 실무회의
- 3/16(화) 탄핵무효국민행동 준비위원회 토론회
- 3/16(화) 탄핵무효 촛불집회 참여
- 3/17(수)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발족 및 대표자회의기자회견
- 3/17(수) 탄핵무효국민행동 촛불집회 참석

11)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 6/9 (수) 7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기자회견' 및 대표자회의 참가
- 9/21(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 준비회의
- 9/23(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기자회견 및 서명활동
- 9/14(화)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 시민단체기자회견
- 11/3 (수)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일일농성 참여
- 11/4 (목)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토론회
- 10/26(화) 국보폐지 여성행동의 날 준비회의
- 12/16(목) 국보법폐지를 위한 여성행동의 날(일일단식)
- 11/29(월) 국보폐지 여성행동 준비회의
- 8/10(화) 국보폐지연대 제발족식
- 9/3 (금) 국가보안법폐지연대 회의
- 9/14(화) 국가보안법 폐지를위한 국민연대 정책토론회
- 9/18(토) 국보법폐지를위한 국민대회
- 9/22(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회의
- 10/6(수) 국가보안법회의국민연대 집행자책임회의
- 10/13(수) 국보법폐지를 위한 각단체회의
- 10/13(수) 국보법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 10/23(토) 국가보안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 11/2 (화) 국가보안법 농성시작 기자회견
- 11/18(목) 국가보안법비상시국회의
- 12/14(화) 국보기자회견(560인화대)
- 12/16(목) '국가보안법 없는 2006년을 맞이하자'
- 12/18(토)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대행진 촛불집회
- 12/24(금)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참석
- 12/29(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일일단식참가
- 12/31(금) 국가보안법연내폐지 부산 규탄대회

12)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1/13(화) 파병반대 기획단회의
- 1/14(수)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
- 2/4(수) 3.20 세계반전공동행동 대표자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 2/6(금) 파병반대기획회의
- 2/9(월) 국회 국방위상임위 본회의 모니터활동
- 2/9(월) 이라크파병국회동의안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2/18(수) 파병반대운영위원회
- 2/13(금) 이라크파병국회동의안저지결의대회
- 2/26(목) 파병반대의정평가단회의
- 3/3(수) 파병반대 의정평가단회의
- 3/10(수)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자회의의 참여
- 3/16(화) 파병반대운영위원회
- 3/16(화) 3.20 세계반전공동행동의날 최종점검 회의
- 3/18(목) 이라크침공 1년 기자회견 - 파병반대국민행동
- 3/20(토) 3.20 세계반전공동행동의 날 참석
- 3/30(화)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
- 4/1 (목) 파병반대의정평가단
- 4/7 (수)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자회의
- 4/8(목) 파병한성 유권자심판 촉구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 4/13(화) 덕체니 방한반대 기자회견
- 4/17(토) 광화문촛불집회
- 4/14(수) 파병반대국민행동 10000인 선언 발기인 기자회견
- 4/15(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덕체니 방한반대 집회
- 4/24(토) 반전평화공동행동- 이라크 침략반대, 파병반대
- 5/6(목) 파병철폐를 위한 범국민청원운동 서명활동
- 5/3(월) 이라크파병철폐 각계인사 10576인시국선언 및 범국민청원운동선포기자회견
- 5/10(월) 미군의 반인륜적인 이라크 포로학대 규탄집회
- 5/11(화)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 기획회의
- 5/13(목) 이라크 수감자학대 및 팔무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 5/14(금) 파병철폐촛불집회
- 5/18(화) 이라크파병반대 국제연대회의
- 5/19(수) 민주노동당, 2시 한화갑 만담-파병반대국민행동
- 5/22(토) 파병반대 촛불집회
- 5/27(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운영.기획연석회의

6/9 (수) 과병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조찬간담회
 6/12(토) "6.12 효순 미션 2주기 추모, 이라크 과병 철회 범국민대회"
 6/17(목) 과병반대기자회견
 6/18(금) 과병원점재검토를 위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6/21(일) 김선일 사진관련 기자회견-청와대
 6/25(금) 과병반대 상황실 회의
 6/25(금) 이라크과병반대, 국방비 예산중역반대 군축집회
 6/26(토) 고김선일씨 추모 및 과병반대 집회
 6/28(일) 시민단체의 과병대응활동 활성화를 위한 회의
 6/29(화) 과병반대 집행책임자회의
 6/30(수) 기자회견(고김선일사건 은폐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6/30(수) 반전공동행동- 고 김선일 장례추모를 위한 과병반대집회
 7/10(토) 이라크과병철회를 위한 집회
 7/13(화) 과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 회의
 7/14(수) 과병반대국민행동 국회결의안 통과를 위한 철야농성
 7/15(목) 과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
 7/17(토) 헌법 5조 위반 과병철회 기자회견
 7/17(토) 제헌절 헌법 5조 위반 규탄 및 과병철회를 위한 토요 촛불집회
 7/25-8/1 과병철회를 위한 단식철야농성
 7/21(수) 과병반대운영위원회
 7/27(화) 농성장 일일단식농성 -어연, 평화여성회 등
 7/31(토) 과병반대 촛불행진 집회참여
 8/3(화) 과병반대 청와대앞기자회견
 8/3(화) 과병반대 광화문집회
 8/7(토) 과병반대 광화문 집회
 8/9(일) 과병반대집회시 1078부대 여학생 성추행 규탄 집회참가
 8/10(화) 과병반대운영위원회
 8/15(일) 이라크과병반대 규탄집회
 8/17(화) 과병반대평가 기획단회의
 8/24(화) 과병반대평가회의
 9/3(금) 과병동의안 기도 정부규탄 기자회견
 9/7(화) 과병반대 운영위원회
 10/17(일) 세계반전공동행동5주년
 10/21(목) 과병운영위원장단회의
 10/25(일) 과워방한반대, 과병반대집회

- 10/25(월) 파월방한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11/10(수)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운영위원회 연석회의
- 1/11(목) 판문자학살 규탄집회
- 11/13(토) 파병연장반대 서명운동참가
- 11/23(화)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운영위 연석회의
- 11/16(화) 파병연장반대 300인선언기자회견
- 11/27(토) 파병연장반대 국민행동의날
- 12/1(수) 파병반대운영위원회
- 12/16(목) 파병반대 운영위원회 - 평가와 대안
- 12/21(화) 파병반대운영위원회 평가소위
- 12/27(월) 파병반대기획단운영위
- 12/29(수) 파병반대운영위원회
- 12/30(목) 파병연장등안국회통과 반대 결의대회

13) 국제연대활동(GPPAC, SAFE, APA, NP 등)

- 1/29(목) 2005년 갈등분쟁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의 한국조직위원회 준비회의
- 4/8 (토) GAPPAC한국조직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
- 7/8(목) GPPAC관련긴급회의
- 7/13(화) GPPAC관련긴급회의
- 7/16(금) GPPAC 대표자회의 개최
- 7/19(월) 청와대 시민사회담당자 면담(GPPAC)
- 8/27(금) GPPAC워크숍
- 10/20(수) GPPAC한국위원회 회의(한국여성연구소)
- 1/8-22 세계시민사회포럼, peace boat 참석(정경란 국제연대위원장)
- 1/12(월) 아시아재단주최: 미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과 시민단체간담회
- 2/5(목) 2005년 무장갈등방지 국제회의의 준비를 위한 일본출국
- 2/20-21 한일평화교육
- 2/27-29 한일역사평화교육
- 5/1-4 일본 파병반대집회 연설
- 5/18(화) 촌 촌 폐과 내한 간담회
- 5/20-24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제 2회 국제연대회의의 서울대회
- 5/31(일) 한반도국민행회의 미국친우봉사회 제이미방한
- 6/19- 25 일본 평화박물관 견학
- 9/5-11 아셈민간포럼 베트남
- 9/17(금) 평화단체 조일수교를 위한 한일동시평화행사

9/30-10/12(화) 세계한민족여성독일네트워크
 7/16(금) SAFE회의
 8/19(목) SAFE 회의
 10/5-12 한반도평화를 위한 워크숍(샌프란시스코)
 10/12(화) 제일민주여성회 내방
 10/25(일) 일본 신부인회(한국평화교류 일본 참가자)와 만남
 11/21-28 SAFE 회의 필리핀
 12/20(일) 동북아 청년평화포럼 참가자6명 사무실 방문

14) 한국대인지회대책협의회

2004년 감사 보고

2004년 사업감사 보고

1.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 본회의의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참여센터와 갈등해결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일상의 평화센터, 한반도평화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2. 2004년 사업에서, 젊은 층의 신입회원이 많이 가입하고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회원 행사가 열려 회원들이 크게 만족하고 본회에 애착을 가지게 된 것, 학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사업이 관련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진행된 것, 더 많은 외국의 여성·평화 단체들과 넓게 교류하고 한반도 핵위기와 이라크 파병 등 우리 현실의 문제를 잘 알리는 한편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국제평화운동의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한 것, 회원들이 평화의 마음을 다지고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논한 것, 한반도 통일과 남북교류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복년 여성들과 여성교류를 지속 의논하고 여성통일교육을 진행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낸 것, 평화세미나 등으로 여성과 평화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한 것은 본회의 뜻과 회원들의 바람에 맞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본회가 여성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아가는 데 큰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3. 특히 본회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밝히고 파병철회를 촉구한 것, 김선일씨가 사망하였을 때 파병철회를 요구하고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희망을 끌어내고자 한 것, 북한 통천 열차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복년 어린이들과 여성을 돕는 운동을 벌인 것,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개혁과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 다만, 지난 해에는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로 한반도에 불안이 더욱 커지고 정부간 남북대화도 한 때 중단되어 민간교류까지 그 영향을 받았

는데, 본회가 여성의 눈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과 갈등을 없앤 대안을 내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힘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문제에 대하여도 군인권문제로 다가갈 것인지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관계의 변화문제로 다가갈 것인지 좀 더 뚜렷하게 정하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센터 사업과 달리 국제연대사업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국제연대사업의 중요도에 비추어 회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5. 앞으로도 본회 사무처와 각 센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지난해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회원들의 힘을 모은다면, 여성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는 본회의 목적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마음을 모아 본회를 키워오신 임원들과 사무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2005년 1월 11일

감사 이 정 희

2004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연시 : 2004년 1월30일 오후 1시 - 3시

감사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귀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및 회계 장부를 감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통상 회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결과 수입과 지출 권의지와 동등 능 균전상의 착오는 없으나 회계 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다음 사항을 지적합니다.

1. 세년도에 감사가 되기 장부를 하라고 지적한바 있으나, 사무실의 원선적인 점과 시대적 추이를 감안하여 액수로 작업하는 것은 총회에서 허락한다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수익금전처치 할당에 총수입, 총지출, 잔고를 명시하지기 바랍니다.
3. 평화연구원의 사업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여성평회의 권 평화연구원과 평화연구원의 지분 분배 전세금 반환 물 등은 기독상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5. 영수증 처리가 되지 못하는 항목에 관한 처리는 저불영수증으로 처리하지기 바랍니다.
6. 수입/지출권의시 발행번호는 직행 번호가 아니라 일련번호로 하기 바랍니다.
7. 권고가 남아있는데 예산에 있는 퇴직금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봅니다.
8. 예산서 전 집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산 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당한 시점에서 수정예산은 채우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0일

감 사 한 국 열

2005년도 사업계획

..... ■ 2005년 사업방향

..... ■ 센터별 사업계획

II. 2005년도 사업계획

1. 전체 사업방향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평화·동일운동을 강화하자

1) 2005년 정세전망

2005년은... 남북분단60년과 미국의 부시정부 2기 출범,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더불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초래된 자주적 외교노선의 한계와 분단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는... 미국의 부시정권과 네오콘의 북한에 대한 다면적 압박,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으로 참여한 긴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다양한 군사작전계획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인권공세를 강화하며, 6자회담을 통해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북한의 선(先)핵포기를 시도하고 경제체제를 통해 북한 경제고립을 유도하는 등 적대정책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생명권과 자주권,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나아가게 하여 선군정치와 지속과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관계는... 미국은 동북아군사전략에 따른 군비증강과 한미동맹, FTA, 쌀시장개방을 비롯한 통상압력과 신자유주의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익논리를 내세워 한국군을 과병하여(과병규모 3위) 이라크침략전쟁에 동참하였고 더욱이 지난 연말 과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전범국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한국군의 추가과병요구도 배제할 수 없어, 제2의 베트남전과 같은 이라크

전 딜렘마는 한국정부를 한국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불안한 현실이다. 따라서 생명과 평화, 평등한 한미관계, 이라크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시민사회의 전쟁정책을 수행하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 지난 해 탈북자의 대거기획입국, 김일성주석 10주기 조문불허 사건 등으로 지속되어 왔던 경색국면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있으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자 및 민간운동진영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올해는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의 본격화, 광복 60돌을 맞이한 남북공동행사 등 주요한 남북관계 현안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2005년 한 해 내내 남북문제가 정세를 이끌어 갈 것이다.

시민사회는.. 어느 해보다 북미, 한미,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능력을 향상시킬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분단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아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적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촉구하고, 민간교류의 성과로 결성되는 '615실현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반전평화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야 한다.

여성사회는.. 분단60년을 맞이하여 재편되는 통일운동 진영 속에서 균형권 통일운동의 방향과 의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화운동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특화, 가시화하여야 한다.

2) 사업방향

2005년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와 통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여성평화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을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담론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특별히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지속된 분단이 초래한 가부장적 군사주의라는 구조적 폭력이 여성들의 일상 삶에 미치는 폭력성과 반평화를 인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로운 통일과 비폭력의 평화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평화행동과 평화교육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정에 여성의 성주류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전개했던 남북여성교류활동과 반전평화행동, 평화심성훈련과 갈등해결교육, 국제연대활동과 여성주의 평화연구를 더욱 전문화시키고 내적역량을 강화해서 여성평화, 통일운동에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 주요사업방향

- ① 한반도의 무력갈등 및 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의 통일노력을 적극화한다.
- ②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과 담론을 형성한다.
- ③ 분단60년을 맞이하여 여성주의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여성평화·통일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한다.

3) 사업목표

① 남북분단 60년 극복을 위한 한반도평화·통일운동 전개

분단60년과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명, 남북여성통일행사 기획 및 615실현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성본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통일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 등 현안대응과 시의성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남남 갈등해결과 국제여성평화조직들과도 연대한다.

② 여성평화운동의 담론 및 정책 개발

여성주의 정체성에 입각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성인지적 평화, 통일정책을 생산하는 여성평화운동의 담론과 정책력을 강화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반전평화운동을 여성의 시각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군사주의 문화를 바꿀대는 여성평화운동을 확대한다.

③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여성주의적 평화감수성과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치와 내용을 평화심성훈련과 갈등해

결혼권, 평화교육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교육과 시민교육에서의 갈등해결, 평화교육 영역의 개발과 확대를 모색한다. 이를 통해 평화인식과 평화실현의 능력이 보편화되는 평화문화를 확산한다.

④ 의사소통의 활성화 및 논의력 강화

의사결정구조의 안정적 운영과 논의력을 강화하여 조직의 주요한 제반 사안과 내용, 방향 설정에 있어서 책임있는 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와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하여 전제사업과 센터사업의 집중과 분산을 잘 조절하여 그 성과를 잘 축적하여 여성평화운동을 효율적으로 확대한다.

⑤ 여성평화운동의 인력, 물적인프라 확대

교육 및 대중실천활동 등을 통해 운동주체의 제생산(중간지도력 및 실무력)을 강화하여 여성평화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회원확대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기획하여 취약한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제구성원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를 통한 평화운동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실 공간마련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주요사업

①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 강화

- 분단60년과 관련된 여성평화, 통일사업
- 615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및 여성본부 활동
- 남북여성교류행사 기획, 개최 및 여성통일정책 개발
- 주한미군재배치, 한미동맹, 한반도핵위기 등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및 실천활동
- 남북관련 주요 법령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개정활동
- 여성통일대중행사
- 국제여성평화행사

② 여성평화통일 정책 및 담론 개발

- 현안대응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반전평화운동, 여성통일운동에서의 담론형성을 위한 연구
- 여성과 평화 4호 발간

③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 평화심성탐원레모임 강화
- 4차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여성평화교육의 영역과 프로그램 개발

④ 평화적 갈등해결의 제도 문화적 접근 확대

- 대상별 갈등해결 교육 강화(청소년, 지역NGO 활동가 등)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갈등해결의 제도문화적 접근을 위한 홍보, 토론회 개최
- 조직 강화 및 확대(강사트레이닝훈련)

⑤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 회원교육 및 회원대상프로그램의 강화(회원한마당, 회지제작 등)
- 회원확대 및 배가 사업
- 중간지도력 형성 및 실무자 교육 강화
- CMS 확대 및 공간마련

⑥ 국내외 연대활동

- 현안대응 연대활동(이라크파병, 주한미군관련사상, 평화군축, 국가보안법 등)
- 상설 연대체 연대활동(파병반대국민행동,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 행사준비위원회 여성분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 국제평화운동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GPPAC, APA 등)

2. 센터별 사업계획(안)

2-1.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경관

실무자 : 전은주

1. 사업방향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 광복 60돌을 맞아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며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세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교류협력, 통일노력을 강화한다. 둘째, 한반도 전쟁 위험은 미국의 북한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 일본의 군사화와 중국의 군비 증대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형성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2005년 한반도평화센터의 사업방향은 1)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 및 강화,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및 군축 노력, 3)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센터의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Women's Participation), 분단상황에서 여성의 인권보호(Protection of women), 한반도 전쟁예방(Prevention of conflict)을 위한 활동이 될 것이다.

2. 사업목표

1) 615공동선언 5년과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여성의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강화한다.

- 2)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한다.
-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군축과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 4)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여성전문가를 발굴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전문가, 활동가, 원로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 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3. 사업내용

1) 여성의 통일노력 참여 및 강화

분단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화하고, 6·15선언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추진위원회 여성본부 활동에도 적극 결합한다.

- ① 6·15 5주년, 남북여성교류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개최 (2~3월)
- ② 남북여성통일행사 공동 기획 및 참여(상반기 예정)
- ③ 여성본부 대중통일사업 공동기획 및 참여 (6월~8월 초중순)
- ④ 여성평화, 통일관련 교양지 제작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 및 군축 노력

①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집행을 위한 활동-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하여 군축과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진

② 군축과 젠더, 현안대응을 위한 토론회 및 국정감사활동

- 젠더와 군축활동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주요 주제 -누가 군축의 행위자인가, 어떻게 젠더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 젠더 관제, 젠더 불평등이 정치와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고려하며 현안에 대응한다.

- 이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국방, 안보,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누구의 경향이 가시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하는지, 안보, 평화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우선성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과 연결될 것이다.

③ '반전평화여성행동'을 통한 시안별 공동행동 조직과 공동실현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와 연대

한반도 평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의 평화 및 냉전구조 해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여성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적극 알려내며, 동북아시민사회와 협력망을 모색한다.

2-2.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실무자 : 김현희

1. 2005년 사업방향

일상의 평화센터에서는 여성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치와 철학을 평화심성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외화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평화감수성의 내용을 개발한다. 또한 비폭력 평화심성의 내면화와 평화간수성의 사회적 평화행동과 실천으로의 소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비폭력 평화문화의 인식, 내용, 실천을 확산한다. 아울러 평화심성훈련과 여성평화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확대를 모색한다.

2. 평화심성팀

(1) 월례모임

○ 모임: 매월 3주 월요일 저녁

○ 내용: 평화심성팀원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담아내는 모임으로 평화의 가치, 평화심성, 평화감수성, 평화문화, 평화문화 등에 대한 일상의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평화심성팀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 일상과 평화, 문화와 평화, 수행, 명상/명성과 사회적 평화의 접목
- 동양의 평화사상, 여성주의 평화감수성,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한 학습
- 비폭력실천 영상물 시청
- 함께 하는 성찰과 평화순례

(2) 제4차 평화심성훈련

○ 일시: 2005년 상반기 5월 혹은 가을

○ 내용: '비폭력 평화주의' 혹은 '우리 삶의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심성'훈련 등을

통해 평화여성회 회원과 평화단체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와 비폭력 평화주의의 감수성을 확산하고 평화심성을 내면화하여 평화실현의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3. 여성평화아카데미

- 일시: 2005년 하반기(10월 경)
- 주제: 여성평화운동의 다양한 주제, 내용, 과제 혹은 분단 60년 극복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평화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 진행: 여성평화아카데미 실행을 위한 '여성평화교육' 자문모임 구성하고 추후 '여성평화교육팀'으로 발전시킨다

4. 평화교육 프로그램

시의적절하게 평화교육의 과제를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예: '여성평화교육 포럼' 혹은 '여성운동 원로들에게 듣는 평화이야기' 등

2-3.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실무자 :

1. 사업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특히 통일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의미 및 실천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2. 사업방향

2003, 2004년은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2005년은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다지는 활동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즉 그간 진행된 내용의 사회정리와 평가를 통해 제도문화적으로 갈등해결의 내용을 확산할 수 있는 자료화 작업에 힘쓴다.

3. 조직

1) 운영위원회/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당면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조영희(청소년교육팀), 본부 사무처장 최선희)

일반 운영위원(김학묵, 박인혜, 이재영, 여혜숙, 장윤경, 최안진경, 최정현진(서기))

2) 연구원 모임/강사트레이닝, 사회갈등조정연구 등 논의 및 사업 진행

김학묵, 이재영, 정경란, 장윤경, 최정현진

3) 청소년교육팀/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조영희(팀장), 박인혜, 여혜숙, 최안진경, 최정현진, 이현주, 송소희, 박재근, 김보정

4) 월례회/센터 회원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 회원 스스로 진행하는 교육의 장

매월 1회 센터 전체 회원 참여 모임

4. 주요사업

(1) 대상별 주요 사업

1) 공적 교육 기관에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중부교육청 주최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의 실제(30시간 연수)

일시: 2004년 1월 24-28일

<연수목적>

·교사들의 평화적 갈등해결방법을 이해, 훈련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높인다.

·학생들에게 평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중재 훈련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04년 전북지역 활동가대상 프로그램에 이어 2005년에는 부산 경상권 지역에서 개최

-모집 및 행정상 준비는 지역 단체에서 맡도록 하고, 갈등해결센터는 프로그램 내

용 지원

-행자부 등 관련 기관 프로젝트 지원 모색

3)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1) 2004년에 이어 초중고생 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대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 기간, 내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함

-음식이는 '갈등해결과 평화' 학교 운영

지속적 교육과 함께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목적으로 단기, 장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교, 학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함.

-통일교육 관련 교안연구 : 05년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점차 갈등해결교육의 교안과 같은 특색있는 교안을 만든다.

(2) 청소년캠프 운영: 여름방학을 기해 캠프를 운영하고, 이를 정기적인 캠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3) 학부모 교육

4) 제3기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1) 강좌 내용 및 방식

기초, 심화, 실습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2박 3일 워크숍 진행)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평화, 갈등해결교육의 의미 및 현재와 미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창조적 문제풀기, 대화, 의사소통 등) 장소: 우이동 소재 봉도청소년수련원(예정)

○ 2단계: 심화-기초에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3시간씩 10강좌)

1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2차: 갈등의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이해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제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3차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갈등해결의 구조화된 방법 중 하나인 대화(Dialogue)의 원칙을 이해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태인능력을 키운다.

4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1/적극적 듣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효과적인 듣기 방법을 훈련한다.

5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2/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실습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을 훈련한다.

6차 갈등해결의 방법-협상의 원칙과 방법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7차 갈등해결의 방법-중재1

*중재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고, 과정에 대해 실습한다.

8차 갈등해결의 방법-중재2

*중재방법을 실습한다.

9차 편견 다루기(4/26)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10차 분노조절(5/3)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 3단계: 적용-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3시간씩 10강좌)

1차 갈등해결교육 진행 방법론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2003-4년 진행된 학교 창의제량과 CA반 등에서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2차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3차-9차 수업교안 만들기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통해 평가, 수업 진행능력을 높인다.

*2회 (학교)수업 참관 실습, 평가

*참가자들이 교안 만들고, 시연 실습

10차 평가 및 전망 및 수료식

“교육의 전과정과 상반기의 창의재량수업 진행을 평가하고 한국사회 갈등해결의 제도적 문화적 확산과 정책과 학교의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 움직이는 ‘갈등해결과 평화학교’ 강사로 참여: 교육 이수 후 갈등해결 교육 강사로 출강하도록 한다.
-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2) 기간: 3월-7월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홈페이지 구축 및 안정화: 갈등해결센터 홈페이지 새로 구축, 갈등해결의 문화적 확산을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2) 갈등해결센터 브로셔 제작: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을 소개, 안내할 수 있는 브로셔 제작하여 활동을 알리면서 갈등해결의 문화적 확산에 힘쓴다.
- 3)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내용적인 홍보, 선전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분야별 소책자 발간계획·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청소년교육 매뉴얼, 갈등해결기초 등등)
- 4) 영상자료 개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영상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3) 제도적 접근을 위한 사업

- 1) 학교내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제도화 노력
청소년재발원의 도래 상담교육의 운영과 같이 도래중재반에 대한 적극적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연구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 2) 국내외 청소년 평화문화 소개 및 교류
다른 교육사례와 다른 프로그램의 제도화 과정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의 현황이나 도래중재 교육의 효율성을 논증하며, 공론화 방안으로 토론회를 조직하며, 법제화, 법안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 3) 학교 평화,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 및 공교육화를 위한 열린 대화(토론회) 개최 (하반기중)

(4) 조직 강화 및 확대

- 그간 교육참가자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 사회갈등분석, 해결방안(문화, 제도) 연구 작업 팀 구성 및 활동

-회원 재교육/원래회

원래회의 질적 강화, 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진행자들의 재교육 확대 지원

-전문강사풀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재교육과 훈련, 내부 매뉴얼 작업 등

(5)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등 갈등예방, 해결 관련 국제단체와의 연대

2-4. 회원참여센터

소장 : 최선희

실무자 : 김현희

○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비증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며, 또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재정마련을 도모한다.

○ 사업목표

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간다.

신입회원 한마당, 전체 회원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에 기여하도록 자부심을 키워간다.

②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

내년은 분단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평화이성회에서도 주요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대중화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단의 상황을 알려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③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 활동의 장을 발굴하여 다양한 소모임

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평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한다.

④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년 2회 회원확대 집중 선포기간을 선포하여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회원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⑤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달아낸다.
정보와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여성평화운동 소식지를 만들어 여성평화운동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낸다.

⑥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 사업내용

1) 회원사업팀

팀원 : 문명녀, 송소희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간다.

(2) 사업내용

① 회원 소모임 마련 : 회원들의 관심을 과하여 회원 소모임을 만들어 내고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예: 내용을 평화롭게 하는 차와 음식.)

② 회원 만남의날 : 매월 또는 격월에 산행이나 또는 여러 경치 좋은 곳을 방문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진다.

③ 회원확대 사업 : 년 2회 정도 회원확대 집중기간을 정하여 상근자, 임원, 회원 모두 회원확대의 분위기를 주어 회원확대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④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회원관리 DB 작업, 전화, 이력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한다. 신입회원들에게는 축하카드 및 매월 해당되는 달에 생일을 맞이한 회원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매년1회 생일카드를 발송한다.

⑤ 신입회원 교육

년 2회 신입회원 한마당을 개최하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부여 및 지속적인 여성평화운동의 후원, 활동의 동기부여를 마련한다.

⑥ 회원 한마당 : 년 1회 회원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도록 한다.

2) 복지 팀

팀장 : 홍승희

팀원 : 김현희, 박수선, 장정화, 최선희

(1) 사업방향

자료와 정보로서의 가치가 큰 여성평화운동 소식을 담아내어 년 4회 회지를 제작하여 각 단체 및 평화여성회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2) 사업내용

회지에는 평화이슈,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내용, 국제평화운동 소식 회원소식등 읽을거리가 풍부한 내용으로 평화여성회 회지가 년 4회 제간지 형태로 발행한다.

3) 재정사업

* 재정사업은 평화여성회 전채사업으로 가져가되 주무 부서를 회원참여센터로 하기로 하다.

(1) 사업방향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2) 사업내용

- 년 1회 또는 2회 정도 평화여성회를 위한 후원행사 등을 진행한다.
- 비 정기적으로 글, 또는 한과판데 등을 통해 재정확보에 도움을 꾀하도록 한다.

2-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김은옥

이 사: 심영희, 장남식, 김은설, 김현미, 안진, 양현아, 이소희, 이정옥, 정진성

원 장: 심영희

연구원: 김열리, 박현선, 안정애, 윤덕희, 윤여령, 이선미, 이숙인,

이유미, 이화진, 임운택, 정진희, 최기자, 홍전숙, 황은주, 정경란

1. 사업방향

국내 여성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 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조직이 안정되었으므로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2. 사업목표

- 1) 여성 평화, 통일 운동의 이론 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 2) 평화여성회의 중요 이슈 관련, 해당부서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노력
경주
- 3)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진행 (3월부터 격주로)
- 4)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풀 구성

3. 사업계획

-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 2)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평화세미나 진행
- 3) 정기 이사회개회
- 4) 여성과 평화 5호 발간
- 5) 여성 평화·통일 운동의 정책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전개

정관 및 운영규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들로 구성하고, 본 회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병설 한국

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 제정과 개정

3. 재산의 태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2004. 1. 9 7차 개정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차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병설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둔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와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관장 및 집행을 한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2004. 1. 9 4차 개정

갈등해결센터 운영규칙

제1조(운영위원회)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센터의 장, 센터 내 팀장, 본회 사무처장)과 일반 운영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의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본회 갈등해결센터 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 2인 추천과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무 : 운영위는 총회에서 결의된 센터의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센터 운영위원 중 2인은 본부 운영위원으로 본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운영위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에 따른 상설적인 팀과 임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둘 수 있다.

1. 구성 : 팀은 3인 이상의 회원의 구성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팀 구성 결의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고, 팀장은 호선한다.

2. 직무 : 팀장은 팀원의 지향과 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 및 회의를 관장, 주재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운영 : 각 팀은 팀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예산 집행) 갈등해결센터의 예산은 본회 고부예산과 센터 독자예산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집행은 고부되는 예산은 정화여성회에 따르고 독자적인 예산은 갈등해결센터 예산집행에 따른다.

제4조(기타)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004 . 1. 9 제정

월별사업계획표

사업명	사업분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반도 평화 센터	615실천여성본부 활동	도론회	행사			행사		행사	행사			
	남북여성통일행사	준비모임	행사									
	평화군축 및 안전 대응 세미나(군축과 젠더)	시안발 토론회										
	GPPAC 연대	준비			행사		행사					
일상평 화센터	4차 평화심성교전	준비			행사							
	여성평화아카데미									행사		
	여성평화교육	시안발										
공동체 결센터	교사대상교육	교육										
	지역NGO대상교육	일정 미정										
	청소년대상교육	연중										
	조직강화 및 확대											
	3기 강사트레이닝	교육										
	홍보, 선전활동/토론회	연중										
	국제연대(NVC)											
희망작 업센터	후원회 발										행사	
	소식지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회원소모임	연중										
	회원참여단						행사					
	신입회원교육	연중										
	oms확대/재접 사업	연중										
한국여 성평화 연구원	여성과학자 5호	준비								발간		
	여성평화운동사 발간	분기별 세미나 및 준비								발간		
	평화세미나	매 월										
집행위	여성평화정책 및 언론	연 중										
국제위	국제여성평화운동연대	시안발										
	5.24 발사 국제연대	준비			행사							
	영문 브로셔 제작	제작										
연대	평화통일관련 연대, 기타	시안발										

임원선출안

다음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후보자 명단입니다.

평화여성회 정관에 명시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3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 권한한다. 또한 공동대표 중 1인은 병설 한 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공동대표단>

1. 김숙임(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 생년월일: 1957년 5월16일(만49세)

2) 학력

1975년3월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1978년10월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구속 및 제적
1981년2월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3년2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선교신학대학원 졸업
1999년8월	승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졸업

3) 경력

1981년 -1983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위원장
1985년	기독교민회 총무

1986년 -1991년	군포돌봄어린이집 원장, 탁아입법공동대책위 활동
1992년 -1995년	기독교민회 상임대표, 한국민중신학회 운영위원 방위비삭감을 위한 여성연대 공동대표
1994년	아시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남측실행위원회 홍보위원장
19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여성탈당제 도입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
1996년 -19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장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1998년7월 -2000년6월	평화여성회 사무총장
2001년 -현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2003년 -현재	한국대인지회대책회의의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장
2004년 -현재	평화박물관컨설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사회문화교류분과위원회) 통일부 혁신자문위원

3) 논문

평신도세력화를 통한 기독교변혁운동의 발전적 모색,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3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격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
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석사논문, 1999년
일상의 평화 만들기, 남북여성교류의 과제와 전망 등

2. 실험희(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 생년월일 : 1947년 9월 10일(만 59세)

2) 학력

1966년-1970년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문학사
1970년-1972년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1972년-1978년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사회학박사

3) 경력

1983년 3월-현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2004년 8월-현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2004년 9월-현재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2002년 9월-2003년 8월	중국 북경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교수
2002년 2월-2002년 8월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2001년 5월-2002년 8월	한양대학교 성폭력상담소장
2000년 3월-2002년 8월	한양대학교 여학생부처장, 여학생실장
1991년 9월-1992년 8월	미국 Columbia 대 East Asian Institute 객원교수
1989년 6월-1991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실장
1982년 6월-1982년 8월	영국Oxford Univ. Socio-Legal Studies Center 객원연구원
1981년 9월-1982년 5월	독일 Univ. Bielefeld 연구교수 (Friedrich Ebert재단 지원)
1978년-1981년	전남대 인문사회대 사회학과 조교수

4) 주요 활동

2002년 1월-현재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2004년 1월-현재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2004년 11월-현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4년 11월-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2002년 3월-현재	(재)서울여성 이사
2000년 12월-현재	(재)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배분위원회 부위원장
1998년 5월-현재	(재)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
1998년 1월-현재	21세기 여성포럼 운영위원

3. 김정수(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일상평화센터 소장)

1) 생년월일 1962년 1월 12일

2) 학력

- 1980.2.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
- 1985.2. 국제대학교 졸업(영어영문학과 전공)
- 1988.8.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구약성서신학 전공)
- 1996.5. 미국 페츠버그신학대학원 졸업(평화윤리 전공)

2005.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박사과정 (평화윤리 논문학기)
 1981.3.-1982.8. 한국투자신탁 근무
 1988.9.-1989.5. 한국기독교장로회 서부교회 교육전도사
 1989.6.-1995.5.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연구원(평화담당)
 1999.4.-2000.2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국장
 2000.2.-2002.2.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연구원

3) 경력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남-북-일 여성교류) 토론회행위원(1991-1992)
 방위비삭감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199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200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평화회의의 발제(2000.12. 하노이, 베트남)
 갈등해결프로그램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수료(2000-2001)
 ASEM 민간포럼(덴마크, 2002.10.) 평화포럼 발제
 아시아평화연대(Asia Peace Alliance, APA) 운영위원(2002-2003)
 통일교육협의회 정책위원(2003)
 Asia Social Forum 평화포럼 2003.1. 인도 하이라바드)
 2003 제주평화회의(한국인권재단) 기획위원
 필리핀 Mindanao Peace Building Institute 훈련프로그램 수료(2003.6.)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연대위원장(2003)
 시민사회리더십포럼 '평화감수성워크숍' 진행(2004.여름)
 갈등해결프로그램 워크숍진행 및 통역진행(서울시중등교육연수원 외)
 시민사회리더십센터 운영위원(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일상의평화센터 소장(현)

4) 연구

갈등해결 배우기: 이론, 방법, 적용: 갈등해결해결전문가 훈련프로그램 참가자리념
 (2001)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통일부 통일교육총서(2002, 공저)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의 갈등해결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3, 공저)
 그 외 여성평화운동과 평화교육 논문 다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임원 선출(안)>

- 1) 이사장 : 김윤옥
- 2) 이사 : 강순원, 김민정, 김선형, 김숙임, 김정수, 김준목, 김지영, 박순성, 박유희, 심영희, 윤덕희, 이김현숙, 정현백, 한정숙, 함인희
- 3) 상임대표 : 김숙임
- 4) 공동대표 : 심영희, 김정수
- 5) 사무처장 : 최선희
- 6)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정경란
- 7)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정수
- 8)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수선
- 9) 회원참여센터 소장 : 최선희
- 10) 국제연대위원회
- 11) 정책위원회
- 1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심영희
- 13) 감사 : 이정희(사업감사), 한국염(회계감사)
- 14) 회계 : 안수경

<공천위원회>

위원장 : 홍승희

공천위원 : 조영희, 문명녀, 안정애, 윤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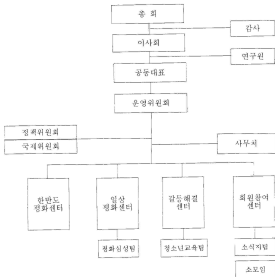
<모범회원 선정>

아래 회원은 평화여성회의 제반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꾸준한 회비납부를 통하여 평화여성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모범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화여성회 회원 모두는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 1) 조영희 :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 2) 장정화 : 일상평화센터 회원
- 3) 안명선 : 회원

평화여성회 조직구성표



2004년 성명서 모음

국회는 정부의 파병 안을 즉각 거부하라!

정부의 파병안 제출을 규탄한다

지금 미국의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의 근거로 삼았던 정보의 오류 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전략은 날이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의 희생은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략은 결과적으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현 대통령을 "한미동맹"을 들어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계속 재촉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내겠다는 3천명 부대의 성격은 재건지원부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전투병 위주의 정병군 편성이며, 이번 파병부대가 휴대하게 될 무기는 재건과 평화유지 임무와 달리 K-200 장갑차, 박격포, K-4(고속유탄발사기) 등 중무장한 부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추가 파병은 국가가 나서서 무고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국제범죄행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회는 추가파병 안을 즉각 거부하라!

"인권감시(HRW)"의 이라크 여성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라크의 여성들은 집밖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치안부대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9살 어린 소녀에서 나이 많은 여성까지 성폭력에 노출되어도 범죄로 신고되거나 명예의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듯 여성인권의 침해사례가 아니더라도 언제 이라크는 여전히 치안부대 상태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하여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미군은 조속히 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바램과는 무관하게 미군은 여전히 경찰군으로 추론하고 있고 또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대한 처리문제는 오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국회의원들이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추가 파병동의안을 살펴보면 파병부대의 구성, 임무,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파병 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은 배려 및 폭동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우리군은 미군의 통제하지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비인도적인 전쟁행위를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동참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받는 자주적인 국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파병 안을 거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은 곧 열릴 예정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2월 9일로 예정인 국회 본회의의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표결결과를 꼼꼼히 지켜보고 추측할 것임을 밝힌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들의 대의기구라면 파병안을 부결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만약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엄중히 표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04년 2월 5일

반전평화여성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가족여민회, 대구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두레방,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교차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연대WAW,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회권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 양국 사이의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가 2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안에 대한 가시적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연기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은 원부담 만부담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에 극치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부는 90년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기로 합의해서 이전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체결된 90년의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정해치는 것이자 수평적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역량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책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86%의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대체주듯이 정부는 굴욕적인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택지화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2. 평택 미군기지는 신설·확장이 아니라 축소 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도지관리계획(LFP)에 따라 74만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도 인해 불탄의 박달, 비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양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땅하다.

3. 용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 태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미국이 지정하는 자제로 짓도록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니 평택 미공군 기지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의 축소·폐쇄할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2일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2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차 6자회담이 열린다. 어렵게 재개된 6자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지금 우리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2차 회담을 비롯한 6자회담이 단순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002년 10월 북핵파문 이후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북미간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물과구를 찾지 못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오랜 교착상태는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가중시켰고 그것은 한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의 불성실한 협상자세로 인해 연내회담개최가 무산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한미공조 틀에 갇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주목한다.

북한은 북미간 불가침조약 우선체결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시행동원칙을 제안하는 등 진전된 협상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최종적인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의 신헌력제 요구를 되풀이해온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협상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규약(FSD)의 확대와 북한자유연합의 재정 추진 등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을 앞두고 실체가 불분명한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며 한반도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담 참가국들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관계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담 참가국들은 이러한 선언을 지지하고 보장한다는 뜻을 밝히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동결 대 보상'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 중단, 핵실험 및 핵물질 이전 자제, 원자로 가동 중단을 '동결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리치원국 해체, 정치참정계참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폐,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핵파문으로 중단해온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각종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에 합의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악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동결이 재내
 마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이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할 상응조치
 이다.

셋째,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UP)의혹이 이번 6자회담을 통한 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폐기 의사 발표 이후 미국이 다시 제기하고 있는 HEUP 의혹은 설체가 명확
 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프로그램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자백'을 강요하기 앞서 북한에
 HEUP의 증거를 제시했다는 미국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HEUP 폐기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어렵게 재개된 6자회담을 좌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HEUP 의혹을 해소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난 1월 북한이 제안했던 전문가 회담 등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는 북한 핵동결에 대해 남한주도의 에너지지원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위기 해
 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단계적 협상만을 유엔하
 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조치에 대해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적
 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입
 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HEUP를 포함한 북한의 선택폐기를 주장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6자회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
 이다.

다섯째,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
 의 불신과 대결 자세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만
 으로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극단적인 북미갈등 상황을 예방하
 고 북핵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례화
 된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포함한 북미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해소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04. 2. 23

(사)평화포럼/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여성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
 독여민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가업경영연구소/녹색연
 합/다함께/두레방/문화연대/민변통일위원회/민족민주연사 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연론운동시민
 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연중연대
 /보육교사회/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수원여성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문운
 동사랑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
 노동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운동연구소/좋은벗들
 /전북교육연구소/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민주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통일연대/통일
 연대여성위원회/평화불만드는여성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시민연대/한국노동사
 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
 동센터/한국이나페티스트센터/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
 국여성전화연합/환경운동연합/종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60개 참가단체)

Korean Civil Society Expects Forward-Looking Six-Party Talks Towards the Resolution of the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begins on February 25 in Beijing, China. In view of the various expectations and concerns for the talks that is set to resume after much difficulty, we ardently hope that it develops into a turning point for a tangible resolution of the crisis that has hung over the Korean Peninsula for so long.

We believe the significance of the six-party talks does not lie just in the peaceful conclusion of the so-called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but in laying the cornerstone for the dismantling of the Cold-War system that has been erected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moval of the instability that has plagued northeast Asia.

The various diplomatic efforts addressing the 'Korean Peninsula crisis' that surfaced following the allegations concern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in October 2002 failed to bring about a resolution due to deeply entrenched dis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prolonged stalemate between the two aggravated the tension that hangs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 cause for a grave insecurity for the people of Korea. The efforts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before the end of 2003 came to naught due to the less than serious attitude of the U.S. in approaching the whole process of negotiations. It brought the expectations and prospects for an acceptable resolution of the crisis into a greater doub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stands as a party in the crisis and in a position to persuade the U.S. more actively, failed to undertake a more leading role in paving the way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due to its self-imposed entrapment in the rhetoric of 'ROK-U.S. concertation'.

We note, however, that the conflict between DPRK and the U.S. over the nuclear issues, which has remained on the agenda for the last one-year or more, has, despite the intermittent false starts, entered into a new phase.

DPRK, which has insisted for long on the establishment of a non-aggression treaty between itself and the U.S. as a starting point, has demonstrated a more flexible attitude towards the negotiations in proposing

a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 involving its freeze on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corresponding measures from the U.S. It is, while reiterating its commitment to nuclear deterrence, suggesting a terminal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intentions to be obtained through a negotiated settlement. The U.S., which has stuck to its insistence that north Korea had to firs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however, has not produced any concrete proposal that could be put to a process of negotiation, apart from demanding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Rather, the U.S. has stepped up its pressure on the DPRK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the moves towards an enactment of a 'North Korea Freedom Act'. Furthermore, in insisting on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concerning as yet unverified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me' as a pre-condition, the U.S. has created a doubt over its commitment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risis over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What is clear is that, if there is no significant progress in the upcoming secon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will catapult into an aggravated confrontation and the crisis hang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even graver. The DPRK and the U.S., therefore, will need to demonstrate in the process of the talks a clear commit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crisis by producing a realistic platform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other parties to the talks will need to redouble their effort in their roles as active mediators to identify areas and points of convergence and compromise aimed at bringing the issues to a resolution.

On the basis of ou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s it stands, we present our views for the six-party talk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the DPRK needs to declare formally its commitment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intentions to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the U.S. needs to declare non-aggression towards DPRK and proclaim its commitment to normalise its relations with DPRK. The other parties in the talks would need to declare their support and guarantee for these commitments. Such a development will establish an important platform for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risis.

Second, the U.S. must accept the North Korean proposal for the principle of "freeze and compensation". The DPRK has already sketched out the substance of its offer of freeze to include a suspension of nuclear weapons production, restraint in the transfer of nuclear experiment and nuclear materials, and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reactor. It has called for corresponding action which includes, its delisting from terror supporting nations, lifting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anctions and embargo, and provision of energy, in the form of heavy oil and electricity. Following on from these suggestions, the DPRK would need to re-admit the IAEA inspectors as a means to verify the freeze it has committed to undertake; the U.S. would need to resume the delivery of heavy oil, which it had suspended following alleg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agree to withdrawing the various sanctions applied against the DPRK. These measures cannot be regarded or perceived as "reward for evil acts"; corresponding measures that constitute an agreement involving North Korea's commitment for "freeze", as in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Geneva Framework Agreement.

Third, the allegations about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me' should not be allowed to act as an obstacle in the negotiations in the six-party talks. The allegation raised by the U.S. in the days following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 of its willingness to put its programme to a freeze, has not been clearly substantiated. Instead of pressing North Korea, which has denied the allegation, to 'confess', the U.S. should make public the evidence which is said to have been presented to North Korea. The U.S. should not adopt the abandonment of the alleged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me' for which it has not presented any verifiable evidence as a precondition for negotiation, which would the collapse of the six-party talks that has been brought to resumption after much difficulty. As the DPRK has already let its intention to respond to the allegation known, it could be dealt with in a separate process, such as an experts meeting, as it has suggested in January.

Fourth, the ROK government needs to take on a more active role in the effort to bring the Korean Peninsula crisis to a resolution, through efforts like proposing energy assistance led by South Korea to match North Korea's commitment to nuclear freez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spond positively with flexibility towards North Korea's negotiation proposal for stage-by-stage progress, and actively persuade the

U.S. for the need to commit itself to matching corresponding measures in response to concrete actions.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need to consolidate its place in the process, vis-à-vis north Korea and the U.S. through a more active policy of inter-Korea cooperation. It should not fall into a mistake of undermining the whole six-party talks process by siding itself with the U.S.'s negotiation approach of demanding north Korea to undertake nuclear freeze first, including the issue of HEUP, as a pre-requisite for any negotiated settlement.

Fifth, the six-party talks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regular arrangement to institute a process for resolving the outstanding issues brought about by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maintenance of a tenuous momentum for dialogue is totally inadequate to address the continuing crisis engulf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unchanging d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 regular six-party talks regime could be instrumental in preventing eruption of extrem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in continued coordination on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problems brought to surface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Such a regular framework of dialogue may oversee a process of resolution of the greater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lay the foundations for future efforts to addressing the issues of greater instability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

February 23, 2004

Signed by

Korean Peace Forum/ Forum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 Green Korea United/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orea Anabaptist Center/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Labour and Society Institute / Korean Farmers League/ Nations Professor's Association for Democratic Society/ Network for Healthy Society/ Civil Network for Cultural Reform/ Socialist Party/ Good Friends/ Minjung Network/ Korean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and Policy/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National Reunification/ Korea Women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Women Link/Korean Women's Hot line/ Women Making Peace /Korean Christian Organisation/ Power of Working Class/ Civil Network for Peaceful Korea/ Heungsadan/ Young Korean Academy/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s/ My Sister's Place/ etc Total 60 organisations

비례직을 늘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 !

우리 국회는 여성의원 비율이 5.4%에 불과해 세계에서 정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자 민족 자원의 낭비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정치부패의 청산과 민생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 부패와 비리에 불참하지 않은 깨끗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 전 국민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를 통해 여성이 진출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이었다. 현재 각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성들이 3.4%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들이 본선에서 어느 정도 당선될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족정당화, 여성 및 소외 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다원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으며, 정당간의 합작투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국민적 대 전제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구 15석을 늘리는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비례직 규모와 의원정수 결정은 3월 2일 본회의로 마무리 버렸다. 이에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탄핵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규모를 둘러싼 정당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비례직 규모는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지 전 것이다. 남성이 95%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들의 노력은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우리 여성들은 탄탄하고 또 절망한다.

그동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을 열망해 온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요구한 이유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정책정당으로 전환하고 경영의 정치로 정치의 물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비례직 확대를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 것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구 15석 늘리는 것만 통과시킨 채 비례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212명의 여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비례직 확대를 촉구한다. 깨끗한 정치, 생활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비례직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여성중립선거구제 도입을 천성했다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국민 기만을 또다시 반복하여 여성들을 거듭 우롱한다면 150만 여성유권자는 이를 화식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3월 1일

비례직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 212인 선언 참가자

장남식(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장선미(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장이수(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장인순(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강혜숙(충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고연희(우권무예재발 대표이사), 고은광순(홍익한의원 원장), 원인우(우리당 참임중앙위원), 공미혜(신라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황태희(한국가정물상업소 소장), 원경애(순천향대학교 여성학 겸임교수), 권은주(경기여성연합 상임대표), 권혁희(강원도 민주당 도지부 사무처장), 김경희(서강대 사회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정미(대진대 교수), 김정숙(경주대 교수), 김경애(동덕여대 교수), 김경숙(알뜰하는주부모임 대표), 김봉자(대전YWCA 사무총장), 김근래(한나라당 여성국장), 김도영(진보연대부장), 김미희(민주노동당 성남시 수경지구당 위원장), 김민선(경희대학교 전 교수), 김삼화(김승희법률사무소 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김선미(열

한우리당 중앙위원), 김진철(세계상을떠는전주교여성공동체 회장), 김선옥(이화여대 교수), 김승자(전 노
 동부 차관), 김수영(열린우리당 여성당), 김수옥(부산여성성평등연구소 이사장), 김수자(이커아 대표), 김숙
 임(광화출판인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병관(재무위원회 공동대표), 김병선(한나라당 국책위원회), 김영선(전
 문직여성한국연맹 연맹회장), 김영성(경원대 산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김영주(금융노련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자(전북여성성평등발전센터 이사), 김용봉(대전여성환경교과 대표), 김은경(열린우리당 환경특위 위원장),
 김은진(전남여성노동부 부산광역시지부), 김의숙(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김이경희(포항여성회 회장), 김
 인순(인천국제공항공사) 회장, 김재숙(소치사촌배를연구하는시민모임 회장),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김정
 자(대치초등학교), 김진애(전국가), 김현진(서울대 상임대표), 김현자(한국여성성평등연맹 이사), 김혜경(민주노
 동당 부대표), 김태민(민주노동당 중앙집기부장 위원장), 김호선(여성신문사 사장), 김희경(경남여성회 회
 장), 김희선(열린우리당 여성위원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회장), 김희정(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나도연(울산시의 교수), 남은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성희(대구보건대학 학장), 노미애(한나
 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노혜경(서인, 부산외국어대 겸임교수), 문선경(논리당 대표), 문예란(주)엘렉
 대표), 문정자(충남여성성평등발전 정책개발부 부장), 민정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근배(한나라당 의
 원), 박근자(대전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식(안양여성회 대표), 박문숙(대전민주당 당무위원),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시 단원구구당 위원장), 박영희(부산여성연맹 공동대표), 박영희(한국여성단체 이사장), 박
 명자(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옥희(문화재단 이프코피아 사장), 박은경(광주광역시시민연대 대표), 박진혜(한
 국여성성평등연맹 상임대표), 박성순(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정희(그린힐복지공동연맹 총재), 박혜
 란(여성가족, 마포구)여성위원회 회장, 박정희(전북여성연맹 공동대표), 변근자(충북여성위원회 상임대표),
 서명숙(사직리길 편집국장), 서미영(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서영교(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희
 (제주여성연맹 대표), 서은정(아름다움가꾸는아름다움당 공동대표), 서정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
 부 회장), 서혜정(한림대 교수), 안숙자(호성가족복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봉숙(한국여성성평등연구소 이
 사장), 손희정(한나라당 의원), 송미희(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송서영(포항여성회 전 회장), 송희정(한국
 여성연인연맹 공동대표), 신명(한국노동연구원 사무총장), 신수희(우원타임스 사장), 신연숙(대전대일
 여성위원회), 신은희(순천대학교 교육과학부 교수), 신광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신희(한국
 정신장애문제해결위원회 상임대표), 신혜숙(여성문화인권센터 대표), 신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안영옥
 (포천공공의료대학 강남차병원 교수), 안상현(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안성태(대한한호정주회 부회장),
 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안정남(서울대 교수), 안정진(공주대 교수), 양정숙(강릉지역발전연구소 소
 장), 오윤숙(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오한숙(여성학자), 원미정(전 인천시의원), 유선복(서
 울시의원), 유승민(순천대학교 기자), 유승희(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 유제나(동국대 교수), 유진희(열
 우리당 청년위원회 준비위원장), 유수경(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윤원호(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
 원), 윤인정(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유정숙(한국여성연맹의 공동대표), 유후정(초대 여성특위 위원장, 여
 강실)전북여성연맹 상임대표), 이경숙(열린우리당 고문), 이계정(전 여성성소수자), 이금림(전 서울시의
 원), 이기임(수원여성회 대표), 이길현(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나영(시가지공동여성회 회장),
 이두옥(대구경북여성연맹 상임대표),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미경(경기도 전 여성국장), 이
 미정(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이미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상희(안성여자가농대학 학장), 이상화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선희(민주노동당 총무지부장 위원장), 이송희(신라대 사회학과 교수), 이숙자(창
 사들의길 설립 추진위원장), 이순녀(전국보훈모임인 노동조합 위원장), 이은숙(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영희(전 서울시의원), 이예
 자(한국여성성평등연맹 상임대표), 이옥경(미즈연 대표), 이영유(호남한의원 원장), 이영희(연세 여성위
 원장), 이영진(한국교육고사학과 공동대표), 이은자(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이은정(광주 비록연구소 부이사
 장), 이은미(여성연인연맹 원장), 이은미(울산여성회 회장), 이은영(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이인실(한국경제
 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이인호(국제교육재단 이사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
 (한국여성성평등연맹 공동대표), 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이정순(대전여성회 전 회장), 이정애(부산여성
 유권자연맹 회장), 이정숙(대구가족복지 정보사회학 교수), 이정자(국책소치사촌배를연구하는시민모임 이사), 이진영(충북
 국책학회 회장), 이희선(한국여성노동조합의회 대표), 이혜은(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현주(양천구의회
 의 의원), 이혜경(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혜훈(연세대 동서문재연구원 연구교수), 임진환(한나라당, 국
 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장복숙(대한약사의 여약사회장), 장남(이화연맹 전 총장), 장성자(한국여성성평등
 유권자연맹 원장), 장영숙(열린우리당 정책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전현희(변호사), 장정자(한국여성성평등
 공동대표), 정미홍(주)영 열 여소치사촌배를, 정은진(대전여성회 회장), 정연순(변호사), 정인정(광주전남여
 성연맹 공동대표), 정현정(한국여성성평등연맹 공동대표), 정현정(민주노동당 서대문구 지구당 위원장), 조
 기선(여대 국제학과 교수), 조혜숙(전 국회의원), 조성혜(부평사회복지관 소장), 조한라(루스다르치유니
 이선 회장), 조은(광주대 사회학과 교수), 조은희(우원타임스 편집위원장), 조은자(전 충남도청 여성국장),
 조은희(전 충청남도청 부대표 대표), 지영선(한겨레신문사 인턴책임자), 진건미(변호사), 진수희(여의도
 연구소 선임연구원, 세종대겸임교수), 차원갑(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최갑순(한글교과대 교수), 최
 단자(서울시)한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순희(민주노동당 부대표), 최순희(한국청년도학 교수), 최정
 영학과 교수, 최영순(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영희(대전민주당 여성위원장), 최진숙(변호사), 최
 정순(동진그룹인재개발원 원장), 한영희(구로여성연맹발전센터 관장), 한옥자(경기도 불은학교도사관관장)
 최희정(회장), 한우림(한국여성성평등연맹 공동대표), 허유나(전 국회의원), 홍경희(한남대 불문학과 교
 수), 홍미영(한글문화인 상임이사, 전 일한시의원), 홍성순(신원병원 내과 부위원장), 홍승희(민주노동당 영
 통교과지부장 위원장)

* 총 212명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단체 공동성명서

한미 양국은 3월 8일부터 '프리덤 배너 04' 훈련을 평택 항에서 시작하는데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가 더욱 고삐를 죄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실전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 내내 실시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단체의 공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한 선제공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합훈련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후방에서 실시되는, 북 핵 문제와는 관계없는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이 같은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을 북한을 겨냥해 실천과 똑같이 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태의 임중성을 인식한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 때 미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차량을 하역하는 '프리덤배너 훈련'이 예년에는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택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장갑차 등 전투차량의 수송·하역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기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평택을 대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기동력과 선제공격력을 최대화함으로써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무기과 병력의 배치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키는 한편, 상륙부대인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미 해병대 제3원정군 8,000여명이 참가하고 미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부대가 동원되는 공격적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를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을 한반도에서도 재현하기 위한 훈련이다.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성격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원된 병력과 장비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결코로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 실전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은 말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한 실전훈련을 바로 북한의 핵 밀에서 실시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운운하는 것이 한낱 기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94년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뮌스터회담 훈련을 중단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은 이번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3. 탄핵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대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시키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다.

지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이 보여 주듯이 남북간의 원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북한 전쟁연습이기에 대대적 중단되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인해 더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대북 전쟁연습을 강행하지 말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한미연합사와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은 이라크점령을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3월 20일, 미국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한 지 1년을 맞은 날이다. 그동안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계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이라크 침략전쟁은 두고한 이라크민중을 공식적으로도 1만 명이 넘게 희생당하였으며 미군 또한 사망자가 500명이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종전 선언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라크민중은 미국의 부당한 점령에 맞서 테러와 자폭 등 온 몸으로 저항하면서 폭력과 테러의 악순환 속에 고통받고 있다.

미국은 부당한 전쟁의 책임을 지고 이라크 점령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평화와 인권, 생명, 모든 것을 빼앗긴 이라크 민중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라크여성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미국은 이라크 점령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 전 미국은 38세째여성의 난을 기념하여 이라크여성지도자들의 자질을 훈련시키고 정치활동 등을 조직하기 위해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또한 과도통치위원회의 임시헌법 제정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법제화를 실시하는 등 이라크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무척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진정한 여권신장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라크전쟁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여성들의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쟁은 여성들을 전쟁의 난민으로서, 남편 잃은 가족무양자로서 또한 강간 등 성폭력의 희생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끔찍한 인권유린과 죽음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 역사의 경험에서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경험하는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미국이 전쟁의 책임을 함구하며 이라크여성의 여권신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라크 여성의 권익신장은 스스로 그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통해 제정할 수 있어야 내재적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으로 이라크 여성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점령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무도한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여성들은 전쟁점령군이 생할 수 있는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라크 여성들을 또다시 희생자로 만드는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한국군의 파병을 절대 원치 않는다. 또한 얼마 전 테러의 희생이 된 스페인 대 참사를 보면서 3위 규모로 파병되는 한국군과 한국인 역시 테러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아야 한다.

파병지가 키루쿠르에서 변경되어 파병일정종6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구내용의 변경에 대한 제논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파병을 강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파병철회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긴박한 판적정국에서 국민의 테러위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신중한 국방외교를 펼쳐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라크의 평화와 하루빨리 그들의 고향에 되돌아 오게끔 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 이라크침공 1년을 맞아 한국정부가 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는 파병철회이다.

2003. 3. 1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무효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11시 56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그리고 국민주권은 무용히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3.12 의회쿠데타’라 기록할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제멋대로 끌어내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쿠데타 세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켜는 100만개의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침하에 선언합니다.

“국민은 승리하였습니다.

‘3.12 의회쿠데타’세력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입니다.”

오늘 이 거리에 나온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유린당한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주권 회복운동’이요, 쿠데타세력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수호 운동입니다.

이 숭고한 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할 뿐이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꺾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된 탄핵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야당이 할까지 국민의 의사를 떠만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준엄한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이 무효임을 선언한 대통령탄핵을 조속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소추안을 부결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들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국민대행진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입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쿠데타 세력이 더 이상의 국민도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만에 하나라도 총선연거나 개헌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피워 올린 촛불은 민주주의의 혼이요 꽃입니다.

타오르는 촛불의 끝줄 속에서 분노와 슬픔은 기쁨과 감동으로 승화되고 온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축제, 상생과 화합의 대동제에 어느 누가 불법시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촛불을 꺼뜨립니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수만의 촛불행사를 엮시다.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다시금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을 촛불의 바다로 만들시다. 다같이 민주주의를 향한 한마음으로 굳게 단합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이제 각계각층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섭시다. 노동자와 농민이, 재타이부대와 주무관이, 학생과 교사가, 종교인과 예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젊은이와 어르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 민주대행진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속한 현장에서 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탄핵무효와 낡은 정치세력의 심판을 위한 창조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갑시다.

다시 한번 함께 외칩시다 ‘국민은 승리하였습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2004. 3. 20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내전 치달는 이라크, 올 것이 왔다. 쿠르드 지역도 내전 화약고, 막가파식 파병 추진 중단해야

올 것이 왔다. 이라크 끝자락에서의 미국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의 피살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더해,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알 사드르가 이끄는 시아파 장경세력과 미군정 간의 무력충돌이 확대 일로를 겪고 있다. 내전 수준의 충돌이다. 이 와중에 한국 구호단체 직원 2인이 억류되었다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다.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친후세인 또는 수니파 계열반군의 공격행위가 아니라 이라크 최대 정치-종교집단과 점령당국간의 정치적 갈등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이라크 점령을 둘러싼 본격적인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라크 내 시아파 장경세력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연합점령군에 대항하는 사실상의 봉기를 일으키게 된 데는 미군정의 이라크 점령정책 실패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그들의 전쟁목적은 이라크 민주화라는 상단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라크와 이라크인들을 위한 세심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이라크를 점령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도 군사작전 외에 점령 후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의 이라크 사태는 점령정책의 과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량살상무기-테러 관련성 등 미국이 내세웠던 전쟁명분이 거짓으로 판명되자 궁색해진 미국이 뒤늦게 내세웠던 이라크 민주화와 인권이 명분마저도 사실상 함께 파산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미 위스컨신 대학의 출판 그로스만 교수가 지난 해 3월 재전 직후 미국 반전사이트 Z-net 기고를 통해 예언적으로 분석했던 다음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종교적·인종적 측면에서 이라크는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만큼이나 복잡하며, 소말리아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은 새로운 복잡성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 복잡무미한 나라에서 미국은 곧 나름대로 '좋은 친구'와 '나쁜 놈'을 가르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으로써 내부 권력투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2003년 미군에게 쫓을 دنبال지 모르지만, 2004년에는 수류탄을 던질 것이다...군사적 승리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다. 무시는 이번 전쟁을 쉽게 이길 수는 있었지만 평화를 잃을 것이다. 가장 해가 어려운 저항은 후세인의 추종자가 아닌, 그의 반대파로부터 나올 것이다..." - The Next Stage, 출판 그로스만, 미 위스컨신대 교수, 지리학

한국이 파병할 쿠르디스탄 지역-이르빌, 술라이마니아 등은 이 본격적인 분쟁의 예외지대인가? 우리의 주관적 희망과는 달리, 이르빌과 술라이마니아는 아직 분출되지 않은 잠재적 갈등의 화약산 같은 곳이다. 전쟁 디해도 입지 않은 쿠르드 산악지역에 평화제전을 명분으로 도착한 한국군은 2000 여 년간의 민족-국경-종교 갈등의 틀바구니에 쥔 자신을 발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과학하기로는 쿠르드 지역 파병을 환영하는 정치세력은 쿠르드 여러 분파의 일부일 뿐이며, 다른 쿠르드 분파들과 이들은 지금도 이미 십 수년째 '전쟁 불'이다.

내전양상으로 치달는 이라크 어디를 가든지 한국군의 주공은 이라크 시민과 한국인들에게 제일의 불씨가 될 것이다. 어제의 한국인 억류 해프닝은 악몽과 예고편에 불과하다. 조금이라도 진실을 보고자한다면, 일박한 미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하라. 한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정부는 막가파식 파병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4년 4월 7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더 늦기 전에 파병 철회하라 이라크의 최악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1. 이라크는 지금 저항세력과 미정령군의 유혈충돌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거의 전전사상태이다. 지난 7일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주검 훼손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은 F-16 전투기들을 동원해 관두라의 이슬람 사원을 폭격하여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나흘간 사망자가 30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에 의해 보도되었다.

8일은 바그다드로 들어가던 한국인 목사 8명이 피랍되어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 또한 무장한 이라크 저항군이 일본군 철수를 요구하며 일본 기자 3명을 납치하여 그들에게 무기를 들어대는 영상물을 공개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달는 이라크 사태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라크 이슬람 최고혁명위원회도 "이라크 정령 3주년이 되는 9일과 시아와 성일(北日)인 10일 양일에 걸쳐 이라크 전역에서 대폭 큰 불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미군점령에 대한한 시아와 강경세력은 이라크 주요도시에서 무력봉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거의 내전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미군점령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박격포와 로켓탄 등으로 무장하여 1만5000명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전전 민중저항에 봉착한 미국정부는 다급해져서 철수예정이던 미군 2만5천명을 무한정 주둔시키기로 한데 이어 추가파병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유엔 보호를 명분으로 12개국 이상의 국가들에게 1천 3백명 규모의 새로운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카자흐스탄은 파병군대의 철수제학을 발표하였고, 주변국들 또한 추가파병을 주저하고 있어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 결명전태에 따른 부시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조차도 이라크상황이 통제불능의 사태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제2의 베트남'의 상황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정령이 실제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유혈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파병결정은 변함없다는 안이한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이라크의 최악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시화·재마 무대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총선 정국에서 파병결정을 단행한 정부와 그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 간 신뢰'를 내세워 파병철회를 고수하고 있지만 다행히 민주당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민주노동당은 파병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 총선 후보자들은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파병 철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4. 우리 여성들은 또한 엄청난 사상자를 낸 팔루자 공격 등에서 그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이라크 유혈사태를 지켜보면 그들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라고는 상상조차 떠올릴 수 없을 이라크 여성과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태고마 죽어가고 있을 겨러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이라크 여성들은 배고픔과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을 자식을 끌어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 것이다. 생명과 인권을 기본 원칙으로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 여성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미군 점령지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우리 한국군이 파병되어 이성을 상실하고 경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제마 부대 또한 즉각 철수시켜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파병결정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사회-제마 이라크 재건지원부대를 즉각 철수시켜라.
3.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 즉각 중단하라.

2004 4. 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논평> 주한미군의 태항리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배상 거부는 부당하다.

- 주한미군 당국은 불평등한 SOFA조항을 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태항리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배상에 나서야
- 어성들은 손해배상에 대한 한미합동위협회 협상절차에 주목할 것

1. 주한미군은 8일 태항리 사격장 주민 소음피해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 2항을 근거로 배상금 분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이 태항리 주민 14명의 소음피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1인 1천만원의 총 1억 4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것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측과 배상금 분담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2. 주한미군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제시한 근거인 SOFA 5조 2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FA 5조 2항은 '미국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우리 정부의 구상권 청구 등에게만 면책이 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에 따라 미국이 시설을 제공한 상대국에 소음 등 주민피해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따라서 이번 미군훈련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문제가 많은 불평등한 SOFA지만 그나마도 우리 정부가 제시할 근거인 '공무집행중인 미군 또는 군무원이 우리측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국측이, 나머지 25%는 우리측이 부담토록 규정한 SOFA 23조 5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도 분담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는 시점에서 주한미군당국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태항리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법부와 정부,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4. 그동안 태항리 주민들이 겪어온 전장을 방불할 정도의 폭격훈련에 의한 공포감과 소음피해를 생각한다면 따라서 사실상 1인당 천만원의 피해액은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원하는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 인간답게 살고 싶은 태항리 주민의 고통을 함께 경감하면서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주한미군 당국은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태항리 주민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미군당국과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통해 정부의 몫을 다하길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촉구할 것이다.

2004. 4. 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Letter to Japanese Prime Minister Mr. Junichiro Koizumi

Letter to Japanese Prime Minister Mr. Junichiro Koizumi
appeal to withdraw its Self-Defense Forces immediately from Iraq

April 12, 2004

Korean Civil Society Groups of
Global Partnership of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Prime Minister Mr. Junichiro Koizumi,

We, Korean civil society groups and NGO activists, have been working with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Japanese groups, to improve the peacebuilding process and to prevent potential armed conflicts in our region. As members of the Global Partnership of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and as Japan's neighbor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 three Japanese civilians who were captured by the Iraqi group Saraya al-Mujahideen on April 8 in Iraq. With every second that passes, the risk to these three civilians' lives increases.

We strongly oppose any organizations using the lives of innocent civilians for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having recently experienced the release of Korean civilians who were also kidnapped in Iraq. Even more importantly, we appe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withdraw its Self-Defense Forces immediately from Iraq. Their presence there has caused the current trouble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government. Neither Japan nor any other country, including Korea, should put people's lives in danger by joining this unjustified war led by the American and British governments, since the primary purpose of the war—the discovery and dissolution of WMD in Iraq—has been unsubstantiated.

We underst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ut forth its best efforts to guarantee the lives of the captured. However, similar threats against Japanese people will reoccur unless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thdraw from Iraq. As leaders of Korean civil society groups, we are paying keen attention to your decision on the matter of the captured civilians and th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because it will heavily

influence the Korean government^을 plan to dispatch additional troops to Iraq. We hope and pray that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will find alternative ways to use their troops to protect their people^의 safety as well as the safety of Iraqi people, without dispatching them to Iraq.

Again, we want the Japanese government to be a peaceful model in our region by withdrawing its Self-Defense Forces immediately from Iraq to save these three innocent Japanese civilians.

Women Making Peace,

Co-Regional Initiator of GPPAC Northeast Asia

Seoul Focal Point of GPPAC

평화와 통일을 여는 국회가 되기를...

- 국회는 이라크파병 철회에 적극 나서라.
- 각 정당은 자주적이고 평화·통일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1.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17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활동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무능한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국민들이 비리와 민생파탄, 탄핵정국에 대한 심판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역사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기득권 세력을 변호하면서 민생안정이라고는 단지 구호에만 그친 활동으로 일관해 국민들을 외면하였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달성시키려는 탄핵안 통과와 이라크파병안 통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경계하게 받아들여 정치문화풍토를 전폭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과 국가의 존엄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원 진출 확대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환영하며 진보정당 지지로 힘을 실어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당에 보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그동안 부패한 정치권에 대해 일격을 가하는 것이며 부자와 권력이 아닌 서민과 소외계층이 주인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열정의 표현이다.

진보정당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 의지 또한 높아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크다. 따라서 16일 오늘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탄핵안과 파병철회를 위한 3당 대표 제의를 매우 환영하면서 파병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김근대 원내대표가 선거기간 중 밝힌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조속히 논의되어 파병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이라크는 제2의 전쟁으로 일몰을 만난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팔루자에서는 촉구장 2개가 공동무덤이 될 만큼 그 희생자 수는 엄청나다. 미군은 이제 이라크인만 보면 여성이고 어린이고 할 것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용한 학살로 인해 길 밖으로는 도저히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해서 굶은 가족의 시신을 그냥 자신의 집 마당에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라크에서 철군을 결정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한국군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미국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학살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16대 남은 임기에서 파병철회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제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라크파병 철회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에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잔인한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과병 반대역풍이 높아지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과병철폐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4. 마지막으로 각 정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지금 한반도는 핵위기와 북미갈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와 한미소과협정 등 대미외존적인 외교정책을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자주적 입장에서 준비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프로세 얻었다.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민심이반을 초래할 경우는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정치를 실현해줄 것을 진정으로 당부한다.

2004. 4. 16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녀성협회,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귀하

통천지역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지역주민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냅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참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 주민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남북 여성들의 마음을 합쳐 모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여성지도자들에게도 연대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북여성들이 이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이 한층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4월 26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소문>통원돕기 여성행동을 시작하며

- 복원 통원 여성들에게 따뜻한 자매애를!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을!

화상으로 까맣게 된 얼굴, 눈을 다쳤지만 밟기 하나 걸리지지 않은 채 안대 하나로 허름한 병동에 누워있는 아이들..... 우리 여성들은 복원 통원 열차 대 참사에 대한 충격과 동포들이 당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져 마치 우리 딸?아들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것 같아 어머니 된 마음에 절로 눈물이 솟구칩니다.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북한 통원의 폭발 참사도 어느새 1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복원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 돕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각 지역마다 한마음으로 밀쳐 일어나 자발적 지원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와 노약자 등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북한의 구호 및 의료체계로 고귀한 생명들이 다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 당장 통원으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복원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청성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워 보살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복원 통원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더욱 열심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열리는 각 지역행사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원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무엇보다 이번 통원 참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복원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남남·남북간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어 딱힌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원 통원돕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 4월 29일

통원돕기여성행동

North Korea Explosion Disaster and seeking solidarities

29, April, 2004. Women Making Peace

We are shocked to learn that a train exploded at the train station in Ryongchon-a North Korean city near the border with China. The death toll from the accident has been reported at 154, including 76 students, thousands have been injured. Media reports quote witnesses saying that the whole area around Ryongchon Station was turned into ruins. We have expressed our condolences to those who have gone through this misfortune, and we welco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send immediate medical relief and other necessary support to the thousands of victims.

The circumstances of this accident will be turned take time to unravel, but some experts believe that the poor infrastructure and traffic facilities on North Korea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isaster. We hope that the South Korean the government will be prepared to send additional aid on humanitarian grounds.

The mission of Women Making Peace is to realize re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peace in Asia and the world.

In March 1997, "Women Making Peace" initiated a campaign called "Sharing food, sharing love" with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who were suffering from severe starvation.

Women Making Peace will do its best to help people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yongchon this time as well.

WMP and Women NGOs in Korea have begun to take action to help North Korea. We are scheduled to launch "Women's action Campaign for Helping Ryongchon" on April 29. We opened an account for Ryongchon and will exhibit some images related to accidents of Ryongchon and raise money in the streets as well.

You may have heard about that a large number of victims of this tragedy were young children.

We will encourage young students in South Korea to write postcards to Ryongchon children to express their concern and solidarity.

Many foreign countries are gathering to fulfill one of the most profound human virtues that is to console their neighbors who have met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We are hopeful that peace organizations and other NGOs around the world will be sympathetic towards this cause will share th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hardships and will actively seek to help them.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pass the information to any organization which could assist in this matter, and do whatever is in your power to contribute to the people of Ryongchon.

We'll remain in touch with you regarding support possibilities, and will keep you updated on news from Ryongchon' .

We believe in people who seek peace and desire to make this world a warm more peaceful place to live. We hope for a human connection that will work to overcome this harsh reality that we live in and that about a better future.

in Peace
Women Making Peace

[논평]또 부실조사, 파병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또 부실조사, 파병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 쿠르드지역 지정학적·정치역학적 불안정성 분석은 누락, '안전하다' 강변
- 팔로자 학살·이라크 민중봉기 등에 따른 파병 정당성 위기도 의문
- 부절없는 여론호도 중단하고 파병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연방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전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사단이 지난 모슬라 키르쿠크 현지 조사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군의 안내와 고심을 통해 주민 또는 지역 정치 종교지도자들과 인터뷰하는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이런 조사방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왜곡의 소지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로 판명난 기존 파병예정지 조사 사례를 통0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모슬라 키르쿠크 등이 안정적이고 주민들이 우리 군을 반길 것이란 정부의 조사결과가 이같은 조사방법의 부실과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지경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 역시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3. 이번 조사결과와 중대한 결함은 쿠르디스탄 지역 조사의 핵심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역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쿠르드 지역의 표현적 광온함에 감응되어 있는 '북방'에 대한 고려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빌, 슬라이마니아 등 쿠르드 지역에서 주민과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한국군을 점령군으로 여기지 않는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쿠르드 지역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쿠르디스탄은 정치적으로 단 일하지 않고, 이라크 또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그 대리전의 전장(戰場)이 되어왔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점령 하에 만들어진 임시헌법이 쿠르드지역의 자치와 분 헌법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정이양 및 헌법 제정 과정에서 아랍인족이 중심이 된 이라크 다른 정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이라크내의 반미저항을 종파 또는 민족간 내전으로 변질시키고자하는 세력 또는 국가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라크내 반미운동이 격화될 경우, 쿠르드와 아랍종족의 무력충돌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역사적이게도 영구 주전의 정당성을 얻게 될 미국이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미 지난 4월 8일 발표한 쿠르드 지역 정치세력 분석자료를 통해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은 단일하지 않으며 각각 무장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파괴노선과 종교에 따라 종종 주변국 및 각 정치세력간에 무력충돌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특히 지난 해 말 아르빌에서 두 차례 일어난 전 후 폐악의 폭탄테러는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 △KADEK와 안 사르 알 이슬람 등 서로 입장이 다른 강력한 반군조직이 쿠르드 자치지역의 북부와 동부를 각각 거점

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주변국, 여타 쿠르드계 정치조직, 이라크 점령 미군정에 대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쿠르드 지역 주권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도 충분히 조사해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라크 중남부와 반미저항이 쿠르드 지역에 어떤 미묘한 역작용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5. '재건지원 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발표내용도 낮간지러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20년 전 에 종전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국제적 체제로 인해 재건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경우인 이란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왜 마다하며, 굳이 군대를 보내서 돕겠다는 것은 또 뭐가? 게다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10배에 가까운 3700여명의 군대가 가야 할 절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6. 정부 조사단이 파병의 안전문제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미 한국군의 파병은 안전한 파병지가 어디냐하는 논란을 낳는 중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팔루자 학살이다. 팔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의 보복공격으로 인해 이라크인 10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의 '팔루자 학살'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논란에 이어 군사작전을 펼치며 한 최악의 보복적 학살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미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될 것이다. 팔루자 학살로 인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더욱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부가 이라크 국면을 듣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재건지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팔루자 학살의 진상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7.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무인한 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된 정보왜곡에만 철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파병의 도덕적 근거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파병으로 입게될 국민 생명의 위험과 국가위신의 추락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호도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국제 선언

- 미국에 핵지수표를 주는 굴욕적인 협상 연기 및 재협상 촉구! -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굴욕성을 지적하며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며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5월 6-7일 미국 워싱턴에서 '태대한미동맹' 8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하고 있다.

1. 미국에 핵지수표를 주는 굴욕적인 협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미국이 부르는대로 비용을 대야하는, 사실상 미국에게 핵지수표를 쥐어주는 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해 줄은 물론 각종의 군사시설, 심지어는 유흥오락시설까지 미국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 조원이 소요되는 CWH(지휘통제자통화체계),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미군 주택, 1조원의 병원, 학교, 체육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군과 가족들의 개별 이식비용, 이천에 따른 모든 청구권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미국이 추후 임의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기타 비용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살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등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다. 이는 용산 협정이 정상적인 주변국가 사이의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90년의 26만명보다 4배가 넘는 110만명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수정 및 무효 조항이 빠지는 등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용산 미군기지는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 없이 기존기지로 축소 통제할라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용산 및 미 2사단의 정책 이전은 그 목적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대북한 전격전과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실현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전세계 해외미군의 재배치계획의 일환이라는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미 국방장관의 공언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임을 말해준다.

90년과 달리 이번 협정에서는 '대체시설과 대체토지는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북한 전격전과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적 요구의 충족이 이전의 핵심적 목적임을 드러내준다.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비용을 미국 국방부 스스로 산정한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 대체지 13억 달러보다 몇 배나 많은 30~50억 달러로 추산할 이유가 없다. 결국 미국은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의 실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미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주둔국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기지이전에 비용을 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전비용 전액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한반도를 동족상잔의 대결장으로, 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 행위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산 및 미2사단 이전 및

목의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은 이미 457만평의 미군기지로 인해 생자옥 속에서 살아온 필택 주민들을 또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필택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기지로 축소 통제합되어야 한다. 이 방식은 대체부지 제공도 필요 없고 비용도 최소화되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전비용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한미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안이다.

그런데 미국은 2006년까지 1만2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어 축소 통제합 방식의 이점은 더욱 현실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상황변화인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용산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3.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는 이전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용산 기지 민간 대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여 120여년간 이민족 군화발에 짓밟혀온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국면의 요구를 정면으로 저슬라 용산 땅을 무기장화하는 것이다.

경우는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국가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국민에게 또다시 감당키 어려운 부담과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선 굴욕적인 '미래 한미동맹' 8차 회의를 연기하고 이제까지의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 4. 30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자계 선언자 일동

<시국선언문>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 청원운동을 선포하며

우리는 오늘 이라크 시민들이 느낄 절망과 탄식, 이유 있는 분노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비극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미·영 동맹군에 의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 침략과 폭력, 그리고 학살에는 일말의 정당성도, 합리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그다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된 이라크인들에게 일어난 모욕과 학대는 미명 통행군이 이라크의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설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교도소의 사례는 이라크 정령이 가져온 반인륜적 현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필루자에서 800여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사실상 보복 학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의 파산은 이미 보여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은 미국을 비롯한 점령군의 철수에서 시작됩니다.

미 점령당국은 이라크 땅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잘못된 전쟁과 점령을 시인하고 휴전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접선거로 뽑은 의회에 법률제정권마저 제한하는 반민주적 방식으로 이라크 점령을 영구히 보장하려는 헛된 시도는 국제사회의 냉소는 물론, 또 다른 저항과 분노의 표적이 될 뿐임을 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온전한 주권이 실현되도록 일체의 외부 간섭 없이 이라크인의 자주적 선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파병철회의 결단을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재건지원’은 허구입니다. 총을 든 군대가 이라크에 가는 한 ‘평화정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또 다른 침략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임을 전세계가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정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재건지원이었습니다. 거듭 촉구하건대 정부와 국회는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최소한의 전제와 약속마저도 이행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건지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사회제미부대도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이라크인들에게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를 정의로 가장하고 침략을 재건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이라크 사태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 국민 모두에게 풀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읍시다.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각 정당에 파병당론의 철회를 요구하고 새로이 소집된 17대 국회가 파병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청원운동을 각계각층 전국방방곡곡에서 전개합니다. 17대 국회 개인 즉시 새 국회 첫 안건으로 이라크 파병철회를 결의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읍시다.

과괴와 증오, 불의와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맹목적 파멸의 길을 돌이켜 세워 평화, 정의,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4. 5. 3.

이라크 파병 철회 시국선언

참가자 10571명 활동

이라크파병철회 범국민청원운동 대표단 명단

강만길(상지대총장) 권형길(민주노동당) 권해효(영화인)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김세관(사회진보연대) 김숙임(영화여성회) 김계남(녹색연합) 김중래(우리민족하나되기 대표) 김홍현(전변연) 도렴(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문경식(전농) 문규현(평통사) 박경조(녹색연합) 박득훈(목사,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환(연교협) 박성준(비폭력평화불결 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R-TV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수경(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 도감).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신학림(연준노조위원장)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영공(전 해안사 주지) 오종열(전국연합) 오종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각(광흥사 조선 스님) 유수스님(좋은벗들) 이강덕(PD연합회) 이선공(원불교 특별교구장) 이수호(민주노동) 이종희(노동자의 힘) 이화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모(시민의신문 사장) 임영선(이라크평화네트워크 준비위원) 정광훈(민중연대) 정현택(여성단체연합) 조희연(확단협 상임대표) 주삼일(내일신문 고문) 최영(환경재단 상임이사) 최병모(민변 회장) 최영도(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상원(통일연대) 함세웅(신부) 해경(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홍근수(자통협) 황인성(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상 50명

대통령과 여야정당대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대통령, 여야 정당 대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지구 전역엔 이라크에서는 부당한 의사의 침략에 분노하는 민중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저항은 가공할 폭력과 무력에 의해 진압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와 국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온 국민들의 열원과는 정반대로 이 불리한 전쟁과 명분 없는 강점을 정당화하고 전투부대를 보내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의 존엄을 위해 피흘려 투쟁한 역사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그릇된 결정은 이러한 국민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나라의 정치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3주년이 되는 지금, 전쟁의 부도덕성과 점령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과 이라크 내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의 저항은 단순한 후세인 잔당의 반발이 아닌 이라크 민중들의 봉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문행위와 인권문제를 이유로 각국 군대의 철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팔루자 학살과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등 용납되기 힘든 점령군의 폭력이 연일 드러남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점령이 이라크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화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제전지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장병들의 안전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무모한 '강행방침'만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강행은 불의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과 한국인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역사적 실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범국민청원대표단은 정부와 국회의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재야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이라크인의 환영을 받는 제전지원의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파병추진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임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제전지원부대 파병에 동의했던 16대 국회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치리한 파병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당선자들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를 존중하여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인시국회를 소집하여 파병철회 동의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여야 정당 대표, 각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례 면담을 제안합니다.

2004. 5. 3.

이라크 파병철회 청원 국민대표단 일동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행동에 연대하며

오늘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행사에서 연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행사 조직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동경에 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라크에 과잉된 자위대 장교가 웃으며 이라크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 참여를 부인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하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주둔은 일본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평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그 어느 때 보다 일본국민들 사이에 헌법개정에 긍정적인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은 평화주의, 국민주권, 인권이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9조에 잘 나타나 있는 평화주의는 꼭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포기,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은 아시아인에게 태평양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참상을 통해 한참군이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확실한 과거사에 대한 검토와 반성 없이 일본이 군사대국화 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민들에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알리는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대령항전쟁은 잊고 싶은 전쟁일 것입니다. 가해자로서 저지른 범죄를 잊고 싶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 한국인들은 그 전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은 여성으로서 저에게 먼저 정신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직도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매우 중요한 서술 주권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20만 명의 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온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에서 미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커다란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참호, 희생과 죽음의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자위대 과잉을 통해 이라크에서 평화를 얻겠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전쟁과 군대를 통해 평화를 얻으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이후 이라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민중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라크에서 일본 외교관의 살해와 민간인의 납치라는 비운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팔루자에서만 미군의 공격으로 600명의 이라크인이 죽고 그 중에서 수백명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팔루자의 1/3인 6만명이 피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도한 폭력통치를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스페인의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시작으로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가 철군을 결정하였고 여러 나라가 파병 철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을 더 이

상 지원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군대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평화를 위해 동사하지 않고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과 군사력을 통해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생각은 과발적인 환상임이 분명합니다. 군사력 우위 추구를 통해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 위협 때문에 물러설 것이며, 그리하여 안전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전쟁과 군사력 증강은 다른 국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저항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국민총생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개정문제는 일본 국내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구상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 헌법은 일본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질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사법제 개정, 이라크 파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저대한 방위비 지출과 헌법 개정은 '보통국가'를 앞세운 일본의 재군사화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자국해 군비경쟁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치의 활동의 주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공존과 국가간의 성실한 협력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공포와 불신을 없애는 일입니다. 폭력의 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대립과 군비경쟁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상호교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에 어울리는 평화와 안전보장, 인권과 환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평화헌법은 일본에서 재지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평화헌법 9조를 확산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주의에 기반한 연대, 이것이 세계각국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어머니로서 저는 제 아들이 평화주의가 근본인 사회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지키고 자위대 파병 철회를 위해 앞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3월 20일에 수만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내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참 반가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위대의 이라크 철수를 주장하고,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동아시아 시민사이에 신뢰와 교류를 위해 애쓰면서 상상과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화헌법이 상상과 공존의 세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알고 있는 한국인이, 세계시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평평화를 위해 싸워갑시다. 우리 한국 여성들도 평화를 위한 행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구호를 외치면서 연설을 마칩니다.

평화헌법 개정 반대한다.
일본의 재군사화 반대한다.
자위대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감사합니다.

2004.5.3 일본

5.3 호헌집회 시 발표한 연설문(경경단 국제연대위원장)

미국 및 영국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학대' 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 미국의 부인권적 전쟁범죄 규탄 !. 평분없는 한국군 파병 철회 촉구 !

최근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국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및 권의 성학대 관련 실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에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이라크 포로에 대해 미국이 가한 성학대를 '전시 성폭력 범죄' 로 규정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저항 불가능한 포로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에 의해 발생된 행위라기 보다는 전시 상황이라는 평분 아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용인,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 로 규정한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2차대전 당시 아시아의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잔악한 전쟁범죄를 잘 알기에, 민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에 더욱 분노하며, 이외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 우리는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를 맞아 미국이 어떠한 평분도 없는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을 통해 국가적 명분과 대의 속에서 시덴!사회적 권리 침해는 물론 인간권 자체에 대한 권리침해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유린의 가장 근본적인 한 형태로 성폭력을 지칭하였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용인되어지는 전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포로,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저질러져 왔다. 즉 전쟁 자체가 용인된다는 것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밝혀지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와 같은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국정부가 본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 우리는 반인권적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의 즉각 철회를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발발된 전쟁일 뿐 어떠한 평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라크전에 대

한 한국군 파병은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파병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 논의는 더욱 그 명분과 논리를 이미 상실했다.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됨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발생케 하는 이런 이라크전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폭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정부 및 영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사과와 수습이 아닌, 포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미국 및 영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포로 인권 침해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집단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 5. 1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자회견문> 현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의 하라
할이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회 뜻에 따라 민주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애초부터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사유 중 경제과단이나 측근비리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사유와 무관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이 불분명할 것이었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도 기각 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유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과면시킬 사안이 되는 지를 두고 조소 섞인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조기 각하나 기각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았다. 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또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3당이 국회의장의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폭력적으로 가결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은 처음부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케 한 탄핵개혁을 심판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탄핵에 대해 이미 내려진 국민적, 정치적 심판을 법률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제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 세력들은 국민적, 정치적, 법률적 심판에 대해 용돈의 책임을 지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국민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가결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국회를 향해 국민적 저항으로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또한 총선을 통해 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이후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정국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였다. 하지만 3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무더기 증인신임을 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다.

헌법적,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종결된 상황에 서조차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제 탄핵을 강행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정략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히야 한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대통령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성숙된 민주주의식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만 앞세워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권정 탄핵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확인한 역사적 교훈이다.

5.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쏠붙을 들고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해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만일 지난 1년처럼 개혁을 머뭇거리다면 탄핵 반대의 쏠붙 행진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물결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5월 14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이라크 파병 원점 제검토를 위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 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

· 전쟁 반대! 여성의 힘으로 이라크에 평화를!

오늘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의 물고개 퍼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고문 및 성적 학대 등 용납하기 어려운 미군의 폭력이 연일 드러남에 따라 점점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론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둔병사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각국의 철군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최근 이라크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주의 외교와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는 반대로 '한미동맹'과 '재건지원'의 명분으로 세계 3위 규모의 파병을 강행하러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 평화재건이라는 명분은 퇴색하였습니다.

미군의 침략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이미 전쟁과 다름이 없으며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평화적인 일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파병을 받아들인 부르트 정부는 거듭 우리 정부에게 치안임무가 아닌 재건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를 구성"하는 부대성격을 볼 때 그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16대 국회가 결정한 재건지원의 명분은 이미 상실했으며 파병논의를 씩씩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제는 세계평화를 위한 한·미 관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참면서 이번 전쟁의 울고 그들을 떠나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하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민주당 대선후보인 케리 의원도 캠페인시 미군을 철군하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내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도덕적 명분이 상실되어선 진정한 한·미동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미동맹도 새롭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한미관계로 더욱 발전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입사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결정했고, 16대 국회가 동의했으며, 미국과 약속한 바를 없었던 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파병을 주장하지만, 정부와 16대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민주개혁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국민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결정 과정에서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상황의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이라크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재건지원의 부대성격에서 그 위상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 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서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파병철폐를 요구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금은 파병강행이 아니라 파병 원점 재검토로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진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책임을 다하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행동적 파병의 걸음을 돌이켜
평화, 정의,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

2004년 5월 24일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 강혜숙, 김선미, 김화선, 윤원호, 이경숙, 이은영, 유승희, 장향숙, 홍미영
민주노동당 -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 - 손봉숙, 이승희 / 이상 15명

<참가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가톨릭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한민총연맹 여성복지위원회, 단국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이라크명파비트워크, 이주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충북여성민주회,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평화여미니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교협약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호주제책지서연모임,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이상 51개 단체

Korean Condolence Rally for Victim in Iraq

We pray for the repose of Kim Seon Il's soul and send our condolence to his family.

We were more shocked with his death because we expected his safe return to us.

Kidnapping and killing an innocent person is a serious crime and cannot be justified even though the Iraqi people are right to resist the US led invasion, occupation, and carnage and the support of South Korean government for the US led war.

After Kim Seon Il was killed, South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at it could not surrender to terrorist act. It continuously insists that sending troops to Iraq is in the 'national interest'. Sending troops to Iraq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There is no national interest that is more important than protecting the life of a human being.

Whatever justification the government may use for sending its troops, the events that are actually taking place are drawing citizens into the war that US is waging. Sending troops will further add to the vicious cycle, leading more killings. This leads to the inevitable: the continued sacrifice of soldiers and innocent people.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People's Action) opposes the US occupation of Iraq; calls fo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multinational armies led by the US, including the US, the UK, Korean and Japanese troops already in Iraq; and campaigns to stop the dispatch of additional Korean troops to Iraq.

We are organizing vigils in the memory of Kim Seon Il and protest actions against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end its troops to Iraq. We will hold Nationwide Condolence Rally for Kim Seon Il on June 26 in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We support various groups' campaign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women's, religious, environmental, youth organizations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in the memory of Kim Seon Il and to stop the sending of the troops to Iraq. Korean trade unions are planning to refuse operating civilian aircrafts

which carry Korean troops to Iraq.

* Plan of Action of People's Action after Kim Seon Il's death

1. Everyday at 7:00 pm. candlelight vigil in Seoul and other cities
2. June 26 at 7:00 pm. Nationwide Condolence Rally for Kim Seon Il, Seoul and other cities
3. Set up memorial altars and install banners to stop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at all groups and all offices.
4. Black ribbon in the memory of Kim Seon Il.
5. On-line letter writing and signature collection campaign Kim Seon Il and against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We join all peace-loving and peace-making people, peace action groups, and the movements against war, to work in solidarity to end the war in Iraq.

June 25, 2004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인권도 도덕도 국민여론도 외면한 파병결정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마침내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고 시기와 규모, 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를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하여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라크 쿠르트 자치구역인 아르빌에 보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결정을 내렸다. 한국군 파병규모는 이미 파병된 공병부대인 서희부대를 포함해 모두 3655명으로 세계 3위이며 한국은 추가파병을 결정한 유일한 나라다.

2. 노무현 정부는 결국 양심과 평의를 외면했다.

노무현정부는 전적으로 '타나가자'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전적으로 인권과 도덕적 양심이 생각하는가. 정부는 이라크 포로수용소에서와 이라크 민간인을 포함한 포로들이 당한 모욕적인 성적학대와 인권침해를 보고서도 기어이 미국의 편에 서려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후시 이라크는 지금 전쟁 중이니 전쟁터에서 인권침해 및 포로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더 나아가 전쟁터에서는 전쟁 중이니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인권과 양심. 그것들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후시 여기고 있진 않은지 걱정 궁글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할만큼 모르나 파병반대여론이 66%가 넘고, 그렇지도 파병반대 이유에 대해 기나긴 시간동안 피치원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강행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과연 정부와 여당은 파병문제를 전적으로 심각하게 고쳐봤는가

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 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견에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국제적 약속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약속뿐인가. 또한 국제적 약속은 인권과 정당성 및 명분을 저버리고서도 그 의미가 존재한다 할인가.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은 이라크파병 등 국가의 중대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명박)를 구성하여 파병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러했는가. 토론회 두 세 차례 가진 것으로 국민여론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내 파병반대위원들의 목소리와 파병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사실상 파병 동의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다. 당면결정의 원칙도 개개인의 의사를 모아 전체의 의견이 결정되어야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 대표단 논의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관례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비민주성은 개혁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였다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여당으로 구성되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여론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저 대선갑과 무력갑만 느낄 뿐이다. 이번 파병 강행 결정을 보면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논의과정은 예정된 파병의 수순만이 차원이기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는 17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는 적극 지지를 보내며 모든 의원들이 파병철회 결의안을 제출하며 파병결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524 명파군속 세계여성들의 날에 파병을 원천제거토록 하라며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 했던 의원들의 실천행동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여성의원들의 적극 나

실 것을 촉구한다.

4. ‘파병강행결정’ - 돌아오지 못할 강을 선택한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가의 안위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라크는 지금 어느곳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권이양 시기 이후에도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상황에서 이후 예견되는 상황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일본군 파병 이후 저항세력에 의해 외교관이 피살당하고 민간인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여성들은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이 파괴되고,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강간, 학대 등으로 파괴된 여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현실에 우리 한국군이 가담하지 않기를 거듭 강조한다. 정부는 파병강행으로 우리국민의 양심까지 함께 팔아넘기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부의 이러한 그릇된 선택에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며 이후 파병철회를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시민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조직해 갈 것이다.

2004. 6. 1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정부는 추가파병 즉각 철회하라.

우리 국민은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고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결국 엄청난 비보를 접하면서 모두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같은 국민으로서 김선일씨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도 고통스럽다. 제발 고인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원망과 미련, 그리고 억울한 한을 훌훌 털고 평안히 눈감으시길 바란다.

정부는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렇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병일장 제확인 발표에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 이라크저항단치는 파병철회 요구가 거절되자 마침내 감세를 처형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씨의 복음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파병과 인질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동안 이라크 저항세력은 이라크에 들어오는 모든 군대를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며 줄기차게 철군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인질사건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나는 살고 싶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떠나 달라’는 김씨의 간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지켜내기도 전에 저항세력에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정부의 파병 고수 원칙에 우리 국민들은 강한 배신감과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파병과 무관할 수 있던 말인가.

노무현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씨의 살해사건이 단순히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테러행위일 뿐인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씨는 우리 정부가 살려낼 수 있었다. 파병 철회, 아니 적어도 추가파병을 연기만 했어도 김씨는 살려낼 수 있었다. 한 국민의 생명이 국도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파병 일장을 강력히 밝히며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자극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명이 처참히 무시되면서 추가파병은 무의미하며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한다면 또 다른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이 제발되지 않도록 사태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군대를 왜 보내려고 하는가. 우리정부는 파병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반인륜적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진심으로 호소하건대 제발 정부는 이성을 찾길 바란다. 지금은 파병강행이 아니라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파병강행 중단과 철회만이 유일한 답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미국정부의 책임과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씨가 납치된 날씨가 17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무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21일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에 왜 이 사실을 즉각 알려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통보했는가, 더군다나 납치된 그 다음 날인 18일에는 우리 정부가 파병입장을 결정하면서 워싱턴과 이집트 언론에 대대적 보도가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 정부의 파병결정이 공개될게 그 시점에 이루어졌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미국정부는 인질사실을 알고서도 왜 그 사실을 숨겼는가. 나흘간의 시간이면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외교적 노력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우리는 미국의 책임과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을 알려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도 무시한 처사이며 이것은 파병강행 입장을 유도해 내려고 정보를 차단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미국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미국정부 또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4. 6. 23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길

국도의 공포속에서 이라크에서 안타깝게 생을 접은故 김선일씨와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대학원에 진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포화가 끊이지 않는 이라크 지역으로 갔던 김선일씨가 결국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었다. 부모님과 온 국민의 간절한 투사귀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모한 파병강행 방침으로 무고한 젊은이만 희생되고 말았다.

우리 여성들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먼저 사태가 이지경까지 되었는데도 무모하게 파병강행 발원만을 제자 청명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질살해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라크 무장세력도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파병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정부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1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킴으로써 국제적 불균 추위에 역행한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최대의 관계를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이라크 현지에서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추가테러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군 추가파병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 추가파병 철회만이 피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다.

2004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해살을여는친구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이성사회 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학교교육위한한국학부모회

Solidarity Message for Filipino Hostage in Iraq from Korea

Dear IRAQ SOLIDARITY CAMPAIGN-Philippines,

The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sends you greetings in solidarity.

It was with great sadness that we received the news about the Filipino man who was taken hostage in Iraq. We want to express our sympathy to his family. We recently went through a similar experience when we were devastated by the death of Kim Seon Il in Iraq. So many lives have been lost because of this illegal war that the US and its allies launched against Iraq.

We also want to lend our support to your voice and solidarity to your actions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Philippine government's support of the US-led occupation of Iraq. This hostage taking must not continue, but these kinds of acts result from the unjust occupation of Iraq by foreign force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d led by the US.

Iraqi people do not want the Philippines to send troops to Iraq or to continue supporting the occupation. Such actions deprive the Iraqi people of their legitimat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e struggle with you for the end of the occupation an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Philippine and Korean military forces from Iraq.

In solidarity,

10 July 2004

Seoul, Korea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ABOUT US: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Iraq Pabyeong Bandoe Bisang Gungmin Haengdong" in Korean) is an umbrella organization of 365 Korean groups opposed to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

- 정전협정 51주년, 한반도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

<전문>

2004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로 보내왔던 것이다. 우리는 정전체제 하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를 겪어야 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원을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되면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생존권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또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가져와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처럼 정전체제는 한반도 주민과 공동체의 삶을 총체적으로 짓눌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를 넘긴 정전체제의 종식은 아직도 기약이 없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전지한 노력도 부족하기만 한 현실이다.

정전협정 체결 51주년을 맞이한 한반도는 희망과 불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앞장 선 노력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비록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 최초로 남북한 군장성품이 만나 서해상의 무력충돌 방지와 상호간의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희망과 기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변미국 재편과 협력적 자주국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새로운 위협을 잉태시켜 가고 있다. 또한 수많은 한반도 주민들이 생존과 보람감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비는 여전히 최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원대한 군비경쟁으로 얼룩진 지난 세기의 파고를 극복하고 21세기와는 다른 21세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냉전의 세계관과 막강한 군사력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낡은 사고'에 갇혀 또 다시 불안한 21세기를 잉태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중대한 역사와 기로에서, 조속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군축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꿈을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아울러 이와 같은 중대한 전환기에 한미동맹이 군비증강에 기반을 둔 군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10대 요구 사항을 발표한다.

< 10대 요구사항 >

첫째,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실한 협상을 외면해왔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MID 등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고 공격적 군사 전략을 채택하며 궁극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미국은 이제부터라도 군사적 일방주의를 버리고 상호주의의 정신에 바탕을 둔 협상과 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무기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미국이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북한의 무장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접근법이다. 미국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악소국가에 대한 전쟁위협 중단과 군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용산기지 등 기존의 기지여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기지 역시 대폭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동두천 등 미군 기지가 폐쇄되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지 폐쇄시 오염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MID의 전초기지화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러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협력적 자주국방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군의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의 불안을 가져오는 군비증강 계획 대신에, '군사 주권'의 핵심 요소인 작전지휘권의 완전한 환수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비의 규모 역시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로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군 문화화·무평화·비대권질 등 전반적 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군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사해 북방한계선(NLL)지역에서 남북 군간의 고신내용을 군의 최고통수권자이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까지 왜곡해서 보고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성역화되어 있는 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인 국방장관 기용을 포함한 군의 문화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군사기밀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자의적 적용을 막을 국가기밀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운명을 투명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비 증액에 앞서 군 조달 시스템, 비효율적 군수산업 구조, 육군병력 위주의 비효율적 병력구조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일곱째, 남-북-미 3자는 즉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미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무기와 병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상황에서 더 많은 무기와 병력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의 낭비와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미 3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양상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문답’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특히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도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고, 사병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래, 남북관계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문답에서 통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형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방력서의 주권 표현 삭제, 헌법의 영토 조항 개헌,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존의 남북,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공고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판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무모한 군비경쟁을 중단시켜 군축을 실현시키고 조속히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04년을 만세기를 낳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아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아시아의 공동안보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2004년 7월 26일

선언 참가 단체(43개 단체)

단전평화기독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진보평론, 녹색평론,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의보실현정년한의사회, 전국민연연합, 문화연대, 군축·평화를 위한 문예 행동단, 우리말 지키기 문화예술인연대,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철수국연운동본부, 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통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평화바다,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미군기지 확장반대 정년대책위원회, 전쟁없는세상, 반군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초록정치연대,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장애인이동권연대, 원주조정지구현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독교연대

<국가보안법폐지 1차 국민대회 투쟁 결의문>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늘 56년이나 생명을 이어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하고, 통일이 아닌 분단 고착에 기여해온 '헌법 위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1948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하느라 머리를 닦았을 때 이 나라의 친일, 친미 정치세력은 히틀러의 전체정치에 서나 가능한 과소법률을 만드는 데 골몰했다. 1953년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들 세력들은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켰고, 그 뒤 국가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들에 의해서 정치 탄압과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애용되었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했으며, 오로지 반공반북이념을 앞세운 국가안보와 공안이라는 미명하에 수구기득권세력들이 독재하는 반세기의 세월을 보냈다. 그 오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운이 활짝 꽃피는 미래로 나아가기에도 벅한 이 세력에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반역사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1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통해,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해 나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사수외지를 재확인한다. 분단과 냉전을 이유로 전 국민을 국가안보의 불모로 취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희생시켜온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특한외 격화야욕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왜곡한 선동을 해대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폭의 격화야욕의 동조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인권'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존존히 다져진 토대 위에서 꽃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안보는 사실상 소수 기득권 세력, 소수 권력집단들의 영달을 보장해주는 기만적인 국가안보일 따름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에서든 기득권 세력들의 구시대적 인식에 바탕한 기회주의자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시대적 판결에 힘입어 사실상의 국가보안법의 존속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심지어 민주개혁을 지향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일부의원들조차 한나라당의 계경도 아닌 계경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말도 안되는 계경안을 내놓고는 국민여론을 도아아 한다는니, 한나라당의 반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니,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고한다. 구시대적 관행을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향상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에 맞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나서지 않으려거든 수구정치집단과 같은 구시대 이념과 질서를 선동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계경본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당신들이 내놓은 계경안이라는 것은 16대 국회에 제출된 계경안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존속본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

우리는 오늘 1차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시대의 발전과 함께 역사와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이 국민을 국가안보의 불모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반시대적,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청년들은 폭염과 폭우를 이기고 46일간 1,350km가 넘는 대장정을 치루어 대면서 전국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불을 지피며 10만명 이상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청원을 모아냈다. 말바닥이 심수면 벗겨지는 고통도, 상한 무릎연골의 통증도 이들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도보행진길을 가로막지 못했다. 이제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폐지 선언이 시작되어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전국 곳곳, 온라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국가보안법폐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기필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힘을 만들어낼 것이며 다수 국민들의 지지속에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50년, 국가보안법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결집에 의해 발전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국토와 전국민을 전간시킴 국가보안법폐지를 향한 마지막 투쟁의 집권 진군을 시작하자!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라!

2004년 9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는 달리 반인권 악법들의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헌의회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이를 저지했던 점을 이번 국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는 제정된 56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명하에 국민들의 의식을 저해하고,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민주제도의 발전을 억누르는 법률이라는 점을 누구나 밝혀왔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17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17대 국회가 이루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인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존속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회개원일인 1일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정시안은 자의적인 적용이 되고 실제 가장 남용이 많이 되는 7조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불고지피에 대해서도 일부는 수정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개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정의 외피를 쓴 존속안입니다. 이런 개정시안은 박근혜 대표가 총선 직후 목한 관세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의미에서 2조의 "정부 참정"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재폐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에 밀려 다시못해 개정하는 직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의원 모임에서도 개정시안을 내놓았는데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개정시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과 전혀 다름 바 없는 안입니다. 즉 2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7조는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10조 불고지피도 부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개정본자들과 조율을 거친 듯한 이런 안을 개정시안이라고 내놓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의 개정시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본자들에게 묻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반인권성과 반민주성, 반통일성이 정말 이 정도의 몇 개 문구만 고쳐서 제재되리라고 믿습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남용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조항 몇 개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만이 답이며, 그것이 이 시대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국가안보라는 자기화면에 걸려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자주 외면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국가보안법을 들여다 볼 것을 요구합니다. 왜 유연의 인권기구들은 1991년 7차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권고해 왔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합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21세기의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상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17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존속한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17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적 원인과 역사적 사명을 떠안지 않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17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9월 5일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수구냉전 논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어제(5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영 통일부 장관 또한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상기하며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가속화하는 모습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 발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새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보법 존치 판결을 들며 “독재자의 생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복한 비위aggi” 등 맹공을 퍼부으며 “탄핵”발언까지 일삼으며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냉전논리에 입각한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 논쟁을 흐려놓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미 오랫동안 개혁 논쟁이 있었던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일본이 자국의 만점부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처인유지법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확대 시행하여 항일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후 좌익세력 척결의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군사독재정권은 민주인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족쇄로 활용하였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된 이후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통일사대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상대해야 할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면서 여전히 통일운동인사들을 반국가자법으로 붙고 있다. 따라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당론 결정을 앞당기고, 한나라당은 수구냉전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남북여성교류사업과 여성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평화여성회는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북여성의 자율로운 만남과 활동을 언제든지 제약할 수 있고 화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경험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반국가단체’의 여성이라는 법적한계를 벗어나 북의 여성을 통일을 향한 화해협력의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민족간의 대립과 분열, 안련의 억압을 야기시켰던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더불어 정착된 남북관계를 해소하여 남북여성이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을 가운데 예정되었던 남북여성통일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4. 9. 6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Letter from KOREA COMMITTEE FOR 2005 UN CONFERENCE ON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KOREA COMMITTEE FOR 2005 UN CONFERENCE ON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F, 38-84 Jangchoong-dong 1-ga, Jung-gu, Seoul, Korea
Tel: 82-2-2275-4860, Fax: 82-2-2275-4861
E-mail: cp-steer@cp.or.kr, Website: <http://www.cp.or.kr>
September 10, 2004

The Honorable Senator Richard G. Lugar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Dear Senator Lugar,

We, membe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f the South Korean process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concern about the US House Resolution 4011 known a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solution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llectiv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already witnessed its negative effect on South-North relations and the involvement of South Korean NGOs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e ask for your sincere consideration of our concerns as we point them out. We hope that the following points help you to make the decision to oppose the Act.

1. Six-party talks of the US,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have been taking place to discuss nuclear issues in North Korea. The nuclear issue is a critical security concer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Bu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did not consid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Act on the current six-party talks and passed it without debate. The Act will only damage US efforts to deal with nuclear issues in the setting of the talks and will prompt questions of consistency in the US foreign policy.

2. The US Congress did not consult with countries at stake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struggling to deal with

issues of displaced North Koreans in China. China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talks and is opposed to refugee processing of North Koreans. South Korea has longstanding policies to resettle displac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but has been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the issue, because of political sensitivity and the potential impact on the process of engaging North Korea. The Act is ignorant of South Korea's efforts and the careful approach it has taken to the issue. We deeply regret that the US government, by passing the act, is again showing unilateralist tendencies and ignorance of other countries' important and sensitive political issues.

3. The Act describes its purposes in Sec. 4. These purposes are the ultimate goals we have all been pursuing through diverse engagement activities. But we are sure that these purposes cannot be achieved without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Act cannot, and will not, be helpful to secure North Korea's cooperation. The Act advocates a confrontational approach in dealing with issues of displaced North Koreans. We know that the confrontational approach has been neither productive nor effective in dealing with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in North Korea.

4.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an be improved through the constant engagement of outside NGO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Since North Korea opened its country to the world community in 1995,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This is in part thanks to the constant engagement and assistance of many countries and NGOs inclu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uth Korean NGOs. Many visitors to North Korea have the change in people's attitudes towards outsiders and even witness traces of a market economy in some places. It shows that engagement brings change and must be continued. The Act does not recognize this change; instead it advocates aggressive approaches to North Korean issues. It will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engagement activities of many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ill eventually hamper change in North Korea.

According to our own experience in South Korea, unless there is involvement from insiders, outsiders cannot improve human rights. In addition, we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effective way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to guarantee people's right "not to be hungry." We hope the US continues to show concer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upport humanitarian activities so that the general

situation in North Korea is improved. We also hope that through these activities North Koreans will be empowered to deal with their own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support of the world community.

As mentioned above, we disagree with the Act in several places. Therefore, we strongly urge you to oppose this legislation.

Sincerely yours,

Korea Committee for 2005 UN Conference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Participating organizations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vilian Movement for Correcting Japan-distorted Textbook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Korea Anabaptist Center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Korea Peace Forum (평화포럼)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World Christian Frontiers (개척자들)

Peace Project Network (평화시민연대)

Korea Reunification Academy (통일교육문화원)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rean Sharing Movement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Nonviolent Peacewave Korea (비폭력평파물결)

Northeast Asia Peace Movement (동북아평화연대)

Pencemaking Korea (평화만들기)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연대)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Young Dug Po Urban Industrial Mission (영등포산업선교회)

Women Making Peac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Participating individuals

CHUNG, Ju-Jin

KIM, Seung-Gook

PARK, Hyung-Joong

PARK, Sung-Yong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구시대 유물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거로에 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와 노력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국회밖뿐만 아니라 국회안에서도 큰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현실에서 자칫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을 통해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법제정때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으로 지적되었는 바, '신생 대한민국에 천주의 오명을 남기리라'는 국회의원 48명의 국보법 폐기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1953년 형법개정 당시 김병도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어순사건 직후였던 법제정 당시 법무부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법임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할 지라도 이는 오히려 뒤늦은 것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난 56년간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아켜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기능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던 조봉암 진보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좌절, 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휘둘러졌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박종철 교문치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경찰과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으며 독소조차 배았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도로 억압했고, 학술과 예술활동 영역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유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치구니 없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1970년 월거반원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이라 소리쳤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구속된 이가 있는가 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국방위원장' 지함과 인공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나이트클럽 테이퍼조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제아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요, 국가보안법의 역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유엔인권 기구들이 지난 1992년과 1995년에 이어,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으며, 하문버 보라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조차 1995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할 정도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은 전세제에 달리는 일대 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원로'라는 이름을 가졌한 보수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성명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에 참여한 보수인사중에는 3.16루터라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루터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청병기둥이었던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의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도 여럿 있다. 독재정권 시절에 호위호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을 피살리는 듯한 그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인권억압의 수단이자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앞을 봤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옹호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전경으로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청산할 것을 정치권에 재차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의지를 모으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4. 9. 14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선언’ 참가 36개 시민단체 일동
(광양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녹색연합/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문화연대/(사)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연문운동시민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여수시민단체협의회/울산참여연대/외정우참여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헌원시민연대/참여자치 전국시민연대/초록정치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불만드는여성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YMCA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주회/한국청년연합회(KYC)/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국가보안법을 보내며

-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지금 우리는 적대적 대결을 강요했던 구식대의 마지막 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혼돈속에서 한시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던 국가보안법이 지난 36년간이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냉전을 빌미로 사실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작용한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50여년전의 남북분리를 전제로 하는 법률이었던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법률이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법률입니다.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명백히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 받은 지금, 우리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에도 명백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어떻게 해야 보장되는지, 국가보안법이 지금 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평가해보아야 합니다. 또 우려하는 다른 국가보안법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처벌규정은 이미 형법상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되고, 국헌문란,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조항은 형법의 중복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의 이름만이라도 부여잡으려는 부분개정론, 그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명칭이 부당스러워 그럴듯하게 재독만 바꾸려는 대체입법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일부 내용을 형법에 풀타기 하려는 '폐지 후 형법 개정론' 역시 모두 반대합니다.

이제 공은 17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1946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잘못 저운 첫 단추, 국가보안법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17대 국회는 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4. 9. 23

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두레방, 성태태근찰을위
한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민회, 대
구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친주고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문
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국여
대생대표자협의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
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
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평화의 섬 제주에서 만난 280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반세기 항쟁의 정신으로 일궈 온 해방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 새롭게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갈 우리의 소명을 한마음으로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 · 민주 ·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가슴에 안고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 우리는 사회의 공익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며, 시민들의 지지 속에 성장한다.
2. 우리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간다.
3. 우리는 세대와 성, 지역과 부문, 경험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4. 우리는 특정정파와 집단,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통합에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 함께 대한사회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7. 우리는 생태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한다.
8. 우리는 언제나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간다.
9. 우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모으고 나눈다.
10.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다.

2004. 10. 9.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2004 제주 평화선언

2004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침침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으로 조성된 위기가 한반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발전과 운용패러다임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민중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결코 특정집단이나 정파의 노력으로 해결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세계평화와 생존권 보장은 내릴 수 없는 것발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이 낳은 세계평화 위협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이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킬 외교적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밖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라크침략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철권시켜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초당적 대응외교를 펴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농업 황폐화에 따른 농민 생존권 위협 및 비정규직양산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역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자국산업보호와 민중생존권보호차원에서 관련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큰 상생 정치'를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략과 술수로 얼룩지고 있는 17대국회를 보며 우리는 실망감과 아울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가운용비효율과 정치적 일관성결여로 인해 재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은 기록권에 집착해 주요 국가의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쟁'으로 몰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의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은 실행정수도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제에 대한 총괄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인제까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여야가 사안 사안에 '통큰계' 접근해 오기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상생정치'를 펴주기를 기대한다.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한다

정당 여야정치인들에게는 민생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생활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민생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막으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잇따른 경제정책실패, 빈부격차확대, 저투자와 실업증가에 따른 내수침체, 일부언론의 선정적 경제관련보도로 인한 신뢰적 위기에 고유가악재까지 겹쳐 우리경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단위로 경제위기를 '대국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경제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운운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특혜'를 지키고 보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 단위들이 모여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불행한 과거사는 청산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무당파적 죽고 투옥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전영역에 걸쳐 구성원들의 광범적 사고를 억압해 국가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최근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무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가 원하지 않는 법, 시대발전속을 가로막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히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창조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진할 도대를 마련해야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보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며 정치현의 실질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형 생존전략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되어 수도권중심발전전략으로 나아가 지방을 아사적권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행정수도이전문제 등 분산정책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21세기 국가발전방향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합의와 동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권선과 오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중대한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회와 정부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우려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재제문제, 행정수도이전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핵폐기장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행정권력에 의한 압력,태수 등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수반하는 법이다. 오늘날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를 한단계 상승,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공공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슬방울을 흘려온 우리 전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모여 시대의 당면과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입장을 밝히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견을 우리들의 활동공간과 우리들의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4. 10.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별결의문(연대회의 지지선언)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수십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불법적인 성매매알선범죄는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법 시행초기부터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나아가 더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실천과 반경을 촉구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과열치한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을 유예할 것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 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자살한 22살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죽음은 현재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의 폭력과 위협의 수위가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인한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대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운운 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언론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의해 자해오디는 불법행위를 보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여성 및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과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이 지라에 오일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힘은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인권침해를 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식전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군대, 학교 등에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되어 성매매 방지법 집행이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 일상적인 문화의 대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특별결의문(지지선언) '언론개혁을 촉구한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열원과 시대적 소명을 담아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역사적 의무가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폐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권재 받지 않는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경악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이제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몰락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사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 최선의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한편, 일부 신문들은 아직도 역사, 밀폐용기, 꾸러, 절소기, 자전기, 학습지, 상품권 등으로 독자들을 유혹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고시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사영화를 타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배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재송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립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손에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

용하려는 기도를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다.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언론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제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특별결의문(연대회의 지지선언) 노무현 정부의 환경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

경기부양을 빌미로 쏟아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개발 정책이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시행 유예,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이 어떠한 환경철학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토의 파괴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안들은 사회적 저항과 맞서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고행, 천성산 뚝섬의 권리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울스님,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촛불로 모였던 부안 주민들. 어디 그 뿐인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골프장개발, 신도시 건설, 댐건설 등 참여정부 이래 가속화되는 개발 드라이브에 크고 작은 저항의 불무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개발 정책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온갖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 포위당한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며, '지역특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는 전국토를 골고루 황폐화시킬 뿐이다. '신수도권발전'과 '핵심도시 건설'을 구실로 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기업논리에 대한 맹목한 굴복 선언일 뿐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건설 허용을 예고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계획은 천박한 경기부양 논리의 산물이고, 이면에는 또 다시 기업과 생존본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대를 넘는 약속'이 되어야 할 환경보전 의무는 분권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지방에 그 결정권이 넘겨질 태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들은 우리국토를 회복하기 어렵지 파괴할 뿐 경기부양이나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환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반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 10.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민주와 개혁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정지권은 개혁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을 앞세운 수구세력개혁이 민주와 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채 개혁의 좌초를 위해 결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수구세력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구세력들은 너무도 당연한 개혁의 요구마저 파괴적인 정책으로 몰아붙여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기억은 상실된 채 수구세력에 의한 역사적 반동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과거사청산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 과제들이다. 이런 민주개혁의 과제를 완성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여야 정당들에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개혁의 후퇴를 피하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수구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행하면 결사 항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로 수구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꾀 한 개혁 과제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또 4대 개혁입법안을 싸잡아서 채제부정적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 개혁입법안들이 과연 관례적인 범법안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의 정책성이 유신과 5·6공의 독재시절에 구축한 권위주의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아니라면 일련의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이들 법안들을 이치원명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수구세력들과 단결을 피하지 않는 한 과거의 향수에 젖은 수구정당이라는 규정성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어떤 기대도 희망도 놓아 버렸다. 사상적인 개혁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은 이제 공당의 위치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개혁입법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입법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공당의 대표가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정당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런 반역사적인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이제 절렸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용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열린우리당은 나름대로의 개혁입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발의했다. 그렇지만 어떤 법안도 민주와 개혁이라는 원칙에는 합당한 것이 없다. 각각의 범법안들이 가져야 할 개혁적인 성격은 이당파의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초안에서 대폭 후퇴하였다. 이대로 개혁입법안이라고 우기기에도 무색할 만하다. 그러기에 시민사회운동 전영의 권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시금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편에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할 것이 불을 보듯 훤히 과전법 개악안을 내놓아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사고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개혁입법을 후퇴시키고, 한편에서는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그릇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연대기구들은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여 11월 중순까지 개혁입법을 정
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과제인 개혁에 동참하라!
열린우리당은 후퇴 없는 개혁의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전체의 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세력에 맞서 역사적 임무를 다하라!

11월 중순까지 4대 개혁입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시민사회운동전체의 입장을 반영하며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
한 대대적인 규탄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0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언론개혁 국민행동/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성선언문>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의 역사를 쓰느냐 아니면 보수와 냉전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있다. 이미 우리 여성들은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지난 5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을 탄압해왔던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대체입법이니 형법보완이니 하며 정쟁으로 시간만 보냈던 상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고 민주개혁을 추진해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는 17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과 과행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틀만 나면 색깔이남공세로 시대착오적인 위기의식을 조장해왔고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위헌질구소송을 들먹거리며 수구 보수 정치의 전변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대표는 안보에 구멍이 풀리면 국민전 제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며 하면서 마치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국가안보와 별개의 문제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인간 안보에서부터 출발 한다고 여기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여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의 안 보를 생각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유신독재와 광주민중학살 그리고 좌경운동 세력을 뿌리뽑았다며 정권유지에 활용돼오고 또 거기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국민의 인권을 여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여기할 자격이 없다.

이제 17대 국회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논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질적 접근을 게 을리한 점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개혁의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형이나 수구세력 의 저항에 위축되어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어정병하게 추진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개혁 을 여기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도 의변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권력과 온갖 가혹권을 유지해왔던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면서 역사의 진보와 통일을 가로막아왔던 정치권에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더 이상 원하 지 않는다.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1946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가보안 법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국가보 안법의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이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인권과 통일을 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회과행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헌명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17대 국회는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
-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색깔논쟁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11월 3일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부레방, 성대해근절을위한한소리회, 주한미군병력근절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전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연우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성네트워크,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상 36개 단체)

East Asia-U.S.-Puerto Rico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Fifth International Meeting, Philippines Friday, November 26, 2004
Statement of Demands

We repudiate the United States' doctrines of "Pre-emptive War" and "Full Spectrum Dominance."

We demand an end to the war in Iraq, to the "War on Terrorism," to wars of aggression in Mindanao, to military exercises in the Philippines, to plans for war against North Korea and elsewhere, to the Stryker Brigade projects of the U.S. military and to U.S. military expansionism.

We demand that U.S. troops be withdrawn from Korea, Okinawa, Japan, Philippines, Hawai'i, and that upon their return to the U.S. they will be provided with basic human needs such as non-military jobs, education, and health care.

We demand an end to government subsidies and no-bid contracts given to defense corporations.

We demand the conversion of former U.S. military bases into uses that benefit local communities, not foreign investors and private corporations.

We demand that the U.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s of host countries acknowledge responsibility to Amerasian children fathered by U.S. troops.

We demand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and that the U.S. government acknowledge the victims of U.S. military crimes and that those victims be fully compensated.

We demand that the U.S. government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forge bi-lateral agreements to stop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military prostitution, that sex traffickers be punished, and that victims of

sex trafficking b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assistance to regain their lives.

We demand an end to Bush Administration policies such as the "global gag rule" that have serious adverse affects on women's health and security worldwide.

We demand that the U.S. publicly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toxic contamination of their former military bases and that they provide full disclosure of hazardous materials and ordinance used in the lands they have occupied.

We demand that the billions of dollars allocated for U.S. military expansion be redirected to environmental clean up of contaminated sites and community-based economic alternatives.

We demand that Kanaka-Maoli (Native Hawaiians) have the right to reclaim national lands currently occupied by the military.

We demand an end to all nuclear test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Test Ban Treaty.

We demand that the U.S. sign and ratif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s of the Philippines, South Korea, Japan, Puerto Rico, and the United States provide genuine security for all people based on human needs such as jobs, living wages, universal health care, and adequate affordable housing.

November 26, 2004

<2004philim> demands based on workshops

<긴급성명>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

혼란한 정치에다 생활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은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도 여전히 심란하다. 무엇보다 17대 국회 안팎은 불신과 증오의 정치를 화해와 상생의 정치로 변화시켜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그 벼슬 넘치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성탄 연휴기간 여야 4인 대표회담을 계속한 뒤 그 합상결과를 27일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당론 변경 여부를 포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연내 국보법 폐지 추진’이라는 당론 중 국보법 폐지 부분은 유지하되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인지, 또는 폐지 당론을 대치입법으로 변경해 회기 내 합의 처리할 것인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내 폐지라는 당론을 무력화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4대입법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만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체에 지장이 없으니 여 유있게 추진하라’는 지난 24일 저녁 당장 지도부 만찬에서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지난 9월 노 대통령이 “낡은 유물인 보안법은 잡기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발언한 것과 “정치생명을 걸고 연내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던 원정대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의 발언을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원회 수구 보수 세력의 저항은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자신들이 장한 당론을 다시 검토하자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적 모습은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어렵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가보안법 처리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쪽으로 흘러간다면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 야합의 수렁에 빠저한다면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주요 입법과제들을 지켜보면서 17대 국회 초반에도 이러한 개혁들을 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될수록 심히 우려가 된다. 내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끌고 가면 경제도, 국민통합도, 개혁도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에 닥칠수 있다. 그리고 여야 협상도 정도가 있고 상식이라는 기본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반핵이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개혁의 포기이며 향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매섭게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의 밑에 전리 야합의 수렁에 더욱 빠저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임을 분명 명심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에는 각 지역에서 온 1천여명의 단식단이 이 추운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사상초

유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다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1천여명의 농성단과 뜻을 같이하는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이 하
무라도 빨리 폐지되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의 억압과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민주개혁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4년 12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
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원주고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지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참여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참
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호주제 폐지 여야 합의 환영하며,
전제조건 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글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내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단장일치로 합의하고, 이를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호주제는 2개월 뒤엔 사라지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과 남성중심 문화를 지탱해온 호주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폐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40년간 여성계의 숙원 사업으로 2000년 ‘호주제폐지시민연대’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한지 5년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제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가족들이 행복추구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에 현실의 가족개념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가족의 범위’ 조항이 삽입된 점과,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 부모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부성원칙 조항이 채택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민법개정안의 모든 세부조항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도,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내던 2월 임시국회도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성의원들에게 이어 남성의원 152명도 27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제 연내 폐지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원 60% 이상이 호주제 폐지 연내 처리를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민법에 따르는 절차법이므로 민법 개정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맞다.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별신분등록제 방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법무부도 두 가지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처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고 기술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6개월 정도 설정하여 법 시행시기를 유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지만 하던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 및 각지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혹여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의 논란을 빌미로 오늘 합의한 내용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시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국민 모두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적당한 기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는 현재 정부와 대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2월 전까지 검토는 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늘 합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법개정안 통과 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호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시대적 성차별 악법이다. 우리 사회가 호주제 폐지를 통해

성평등 연구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전을 올 때는 이 있어, 내년 2월, 17대 국회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2004년 12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6개 지부 경기여성연합 광주전남여성연합 대구경북여성연합 부산여성연합 전북여성연합 경남여성연합

28개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해살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강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참여하는주부모임 팔교육을위한한국학부모회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음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경제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선성 ☐ 소식지발행 ☐ 스튜디오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평화를 만든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청운동 1가 38-84 여성평화회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수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강희를만드는여성회



